

第216回國會  
(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2月11日(月)

場 所 第2會議場

議事日程

1. 2001년도예산안(계속)

부별심사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철도청·금융감독위원회

審査된案件

1. 2001년도예산안(계속)

부별심사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철도청·금융감독위원회 ..... 1

(10시19분 개의)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  
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기국  
회도 끝나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에서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질의를 준비하  
시는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는 정부측의 어려움이  
매우 큼니다.

양당 간사위원님께서서는 남은 의사일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질  
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부별심사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  
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철도청·금  
융감독위원회

(10시20분)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지난 토요일 金景梓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저에게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景梓 위원님께서서는 비축기지 건설비용과  
2001년 비축유 구입계획량 달성방안에 대하여 질  
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洛淵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재 석유비축의 시설용량은 9개 기지  
에 9,700만배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비축시설  
에 원유와 석유제품은 60%인 5,800만배럴이 현재  
충유되어 있습니다. 국제비축권고수준이 90일분입  
니다. 정부는 2006년까지 90일분을 달성하기 위해  
서 현재 정부비축분이 29일인데 60일로 늘려서 민  
간비축 30일과 함께 90일을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제평균유가를 배럴당 20불로  
전망하여 540만배럴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  
한 예산이 1,514억원입니다. 또 이 예산과 더불어  
비축시설도 앞으로 3개 정도는 더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비축시설 건설을 위한 79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 주요전문

기관들이 2001년도 평균유가를 배럴당 24불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유의 공급증대로 겨울철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속히 하락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로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할 때 23불 수준으로 유가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유가상황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는 22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충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유가동향에 대한 분석팀을 확충해서 국제유가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에 선도거래·선물거래기법을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완공된 비축기지건설비는 1조2,3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충유를 위한 시설건설비가 4,900억원 정도 더 소요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金景梓 위원님께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제2차 석유과동 이후에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가 81년 91%에서 85년에는 57%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85년 이후 국제석유가격과 수급이 안정되고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다시 원유의 중동의존도가 75%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석유수급 안정차원에서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동보다는 아시아지역에서 들여올 때 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 있고 또 유사시에 중동의 불안사태 등을 감안하면 여타 지역에서 원유확보를 해두는 것이 석유안보에도 대단히 유익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48억원은 운임보조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석유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할 때는 내년도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원유도입선을 거리가 가까운 아시아권이라든가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되는 중남미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동지역에서 들여올 때는 배럴당 75센트의 운임이 들어갑니다. 동남아는 71센트로 훨씬 싸고 아프리카는 92센트로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드는 수송비를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景梓 위원님께서 석유제품 수입가격보다 국내정유사의 세전 공장도가격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국내 석유시장에……

○金景梓委員 장관, 그 대목의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제유가가 올라서 한참 한 30달러로 올라간 적이 있었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그렇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비축기지 석유를 방출해서 우리의 석유가격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때에는 비축유를 방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종합적인 검토의견이어서 비축유를 방출하지는 않았습니다.

○金景梓委員 방출하지 않고도 넘어갔다 이것이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그렇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리고 운임이 중동의 경우는 75센트, 아시아는 71센트, 아프리카는 92센트라고 그러셨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렇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에 92센트지만 석유를 원래 사오는 가격이 쌀 경우에는 92센트를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런 면도 있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우연한 계기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이지리아가 아시다시피 세계 6대 산유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진출한 것이 있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나이지리아에 처음에는 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런데 지난번 나이지리아의 오바산조 대통령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나이지리아경제협력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기업이 한두 개 들어가서 계약도 체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기업이 투자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그전에 무슨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면서 ‘돈 좀 빨리

값아라'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측에서는 '공사를 해서 돈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에는 석유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나이지리아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환경이 대단히 좋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金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내년초에 경험단을 파견해서 석유구매와 연계하는 문제, 또 아프리카의 앙골라에 대해서 종합상사가 컨트리 마케팅을 해서 원유 개발하는 문제도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원유도입선 확보라든가 연계교역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景梓委員** 고맙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다음 朴鍾根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朴 위원님께서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정책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별 특성에 맞는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산업분류도 IT산업 같은 것을 반영해서 시대에 맞게 재분류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서 중소기업의 기준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재조정하기 위한 작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IT산업 등 새로이 부각되는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중소기업 특례업종을 폐지하여서 규모가 큰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은 소기업으로 하고 10인 이하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서 차별적인 지원시책을 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업종을 추가하는 등 표준산업을 개편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대해서, 특히 한나라당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중소

기업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지원과 자금지원을 재검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문제는 세제상의 재원문제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해서 재정에 대한 새로운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다익선으로 확대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가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제 등 기능별로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경제 전반의 상황을 봐서 특히 지역경제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기업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과 자금상의 지원방안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장관,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기업·소기업을 다시 분리해서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작업하시는 대로 재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IT산업하고 관련해서 고급인력에 의한 서비스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분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중기업하고 소기업의 지원시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로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지원체제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다, 기본적인 구상은 중기업은 좀더 수익을 내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 있어야 되겠고 소기업은 채산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을 반영해서 정책이 개발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확연히 구별하는 형태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지난 8일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입법이라기보다는 산업자원위원회 朴光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여서 이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을 차등화해서 저변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즉, IT와 생물기술, BT산업의 발달로 기업의 규모나 사업경영방법의 새로운 형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변화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그리고 장관께서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에 대해 세수를 걱정하시면서 과감하게 정책을 바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금융구조조정이나 대기업 부도사태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의 지원규모가 160조, 이번에 40조가 추가되어서 200조라는 엄청난 국가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50%를 감면해줘도 1조오륙천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인세는 감면되어야 됩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면 엄청난 세수결함이 있는 것으로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라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감세정책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정책을 써서 경기부양을 일으키고 동시에 오히려 세수기반이 확장되어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봤고, 62년 케네디 대통령도 감세정책을 써서 효과를 보았고, 1920년대는 와렌 하딩 대통령, 칼빈 쿨리지 대통령 같은 분들이 과감한 면세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오히려 세수를 증대시킨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수 걱정은 재정부에서 해야지 산업자원부장관이 세수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을 일으키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朴鍾根 위원님 말씀에 저 스스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소비도 줄고 투자도 부진해지는 우리 경제의 흐름을 2001년에는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 산업의 저변확충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가야 되겠다는 기본방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부문, 특히 IT와 에너지를 절약하고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문제, 또 뒤에 답변올리겠습니다라는 농공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 법인세 50%를 절감해서 중소기업 전체에 하나의 충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경제장관간에 적극적으로 토의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朴鍾根委員** 고맙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리고 朴 위원님께서 대구·경북지역의 기계·금속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계금속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장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대구·경북지역의 기계산업발전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내 기계산업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가 기계산업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계, 공작기기, 각종 공구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100억불로 전년에 비해서 30% 이상 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 경쟁력을 제고하면 앞으로 수출전망도 밝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과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산업이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라는 이제는 지방으로 가야 되고, 특히 대구지역의 각종 부품과 창원·구미를 연결하는 부품·기계의 연구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지역에 경북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 기계류부품 설계인력 양성센터, 영남대학을 중심으로 섬유기계연구센터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 등 두 개 대학에 테크노 파크를 조성해서 연간 1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일반 기계분야, 부품분야, 금속소재분야의 연구개발이 대단히 긴요하기 때문에 연구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朴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 등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지금 상식적으로는 대구는 섬유가 주력산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섬유와 기계·금속산업의 비중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기계·금속이 근 4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도 대구의 중소기업이나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자기들은 시험 한 번 하려고 해도 창원이나 대전까지 갔다 와야 되고, 대구에서 당장 간단한 시험도 제대로 못해 본다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꼭 출범시킬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고맙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다음 辛基南 위원님께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辛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이 부분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벤처기업부문에 있어서는 인근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나은 부분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창업과 기술·수출·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했기 때문에 98년·99년 3년을 경과하면서 금년 11월말 현재 벤처기업 수가 9,331개로 급속히 늘어났고 매월 400개의 벤처기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원래 벤처는 모험자본으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엔젤투자를 지원받고 창업투자나 혹은 벤처캐피털 등에서 투자를 받는 동시에 코스닥 시장을 통해 조성된 자기자본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의 정책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름이 있다면, 벤처는 자기의 모험자본에 의해서 창업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은 자기자본이 부족하지만 주로 정책자금이나 융자에 의존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최근 벤처기업의 탈선으로 인해서, 벤처를 하다가 이것이 신용금고라든가 금융으로 흘러가서 벤

처를 빌미로 투기를 하고 그것이 큰 부작용을 가져와서 기업윤리적으로도 문제되는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건실한 벤처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벤처캐피털을 좀 보강해 주고 특히 코스닥시장이 지금 증권거래와 함께 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건전한 자금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벤처기업들이 더욱 활력을 가지고 가치창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여러 단계의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연내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과 환경조성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辛 위원님께서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250억원인데 이것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에 20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중에 12개 지구에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촉진지구당 국비지원이 20억원 정도에 불과해서 이러한 수준의 예산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벤처인프라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예산을 200억원 증액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증액된 예산이 반영되어서 벤처촉진지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辛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융자에서 투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벤처기업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모험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융자보다는 투자자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하나의 통설입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원대상기업의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창업지원융자금을 작년의 4,950억원에

서 오히려 대폭 줄어든 2,015억원으로 용자는 줄이고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3,000억원으로 늘려서 민간투자자와 합하여 총 1조3,000억원의 규모가 벤처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간투자가 비교적 저조한 생명공학이라든가 제조업, 부품소재분야, 지방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자금의 출자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캐피탈과 엔젤이라고 해서 개인투자 등을 적극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님께서 농림부장관에게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여부 등 농공단지의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하다가 최근에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부의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생산과 고용확대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관받아서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번에 전면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역시 대도시 주변이라든가 공업의 거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가 그런 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데 비해서 오지라든가 또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에서는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또 단지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실상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광역권에서, 광주의 광산업이라든가 대구의 섬유·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부산의 신발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경남의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전남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생물산업이라든가 이런 지역특화산업하고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을 과욕적으로 조성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입주도 부진하고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추진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연내에 지방산업, 이제는 지역산업으로 표기됩니다마는 지역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반영해서 농공단지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

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설비가 낡고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공단지 진흥예산 530억원을 처음으로 산자부에 이관해서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일차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이 되어서 농공단지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宇澤 위원님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과 대체산업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는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貞淑 위원님께서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존에 있는 패션업체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단지조성의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패션어패럴 밸리 조성사업은 대구의 섬유를 종합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소위 밀라노 프로젝트 17개 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은 그동안에 직물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경쟁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물과 제품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소위 제품분야의 패션, 디자인, 어패럴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함께 해서 직물염색분야도 가치를 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구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패션, 어패럴 분야에 대한 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99년1월에서 6월사이에 이루어졌고 지난 한 해, 작년 12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국내와 외국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외국기업은 모니터 컴퍼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는 산업연구원 등 합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최종결과는 안 나왔지만 중간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결론적으로 대구에 패션어패럴밸리를 조성해서 전국의 것을 이곳으로 집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채산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산재되어 있는 디자인, 패션, 어패럴 분야를 대구에 집중해서 소위 직물부분과 최종 제품분야간에 종합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섬유업계가

지금 바닥상태 아닙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직물도 그렇고 제품분야도 패션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고급화하는 데는 일본, 미국, EU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수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래서 이렇게 집단화 시켰을 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그렇게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金貞淑委員**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金貞淑委員** 그러면 여기에 벨리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호응을 할 단체, 회사, 업체들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 보니까 서울에 섬유연합회도 있고 패션협회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대구로,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면 대구에 중심을 두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대구를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여기 몇 업체들이나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은 타당성 조사할 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최종결과를 접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아직 최종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金貞淑委員** 이것 하시면서 제 생각은 여기에 한 다고 기타 지금 섬유업체 기술지원이라든지 또는 자금지원 이런 것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이것 지금 벨리 조성한다고 이것에만 몰두해서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섬유업체가 어려운데 말하자면 우리 속담에 생일날 잘 먹자고 굶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 이런 쪽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업체들 말입니다, 여기에 벨리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업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입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金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金貞淑 위원님께서서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부처간 총괄조정이 미흡하고 투자유치 활동이 국가홍보에 치중하여 비효율적이며 투자 인센티브를 부지제공 위주로 운영하는 등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저희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감면사항은 재정경제부 또 각종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위원회와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 IMF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변화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불란서, 이태리 등 그런 지역으로부터 투자유치 그리고 일본지역으로부터의 부품소재 투자가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 지역별로 세부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토지에 보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토지가 중국, 동남아 등 경쟁국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최소한도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이 온당하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500억원인데 11월 말 현재 254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도 독일의 BASF라는 데서 대거 투자가 유치가 되고 있고 이것이 경기 추팔단지하고 경남 진사공단 등에 또 일본업체가 들어오고 있어서 금년에 500억원 전액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경제구조 개편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대규모 산업단지를 외국인들에게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분양이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요, 분양 안 된 데가 많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산업단지는 설립목적과 지정·관리자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건교부에서 지정하고 저희 산자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개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

하고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156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295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또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분양률도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지역경제, 지역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산업단지를 보니까 배후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도로, 항만 등이 문제가 있는데도 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산업자원부에서 보완적인 지원을 해서 모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金貞淑 위원님께서……

○**金貞淑委員** 지금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인센티브 제공할 때 실무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주체가 되어서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정부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 및 조정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金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중소기업청에 정보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하고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지원센터는 그 기능과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교육·훈련, 정보제공,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 특히 지방의 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 내부의 업무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재구성하고 리엔지니어링을 하는 등 컨설팅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도 최근에 경영과 생산 모든 부분이 IT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기 별도로 보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高珍富 위원님께서서는 수출보험기금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이 그동안에 잘 운영되었습니다마는 특히 IMF 과정을 거치면서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대우사태로 인해서 상당액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금이 더 늘어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에 한 3,000억이 필요한데 2,000억밖에는 확보가 안 되어서 정부안으로 넘어 왔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출지원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기금을 1,000억원 더 증액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李洛淵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금융주의적인 절약운동보다는 중장기적인 효율향상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委員長 張在植**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金文洙委員**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아직 답변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金文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준비에서 누락되었는데 金文洙 위원님이 지난 토요일 저에게 특히 산업자원부가 경쟁력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부분 중심으로 정책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상업부분에서도 단독가게라든가 저변의 소상공인 등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金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정책이 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또 수출하기 위해서 큰 곳 또 경쟁력있는 쪽으로 계속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퇴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경쟁력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유통 부



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배려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金 위원님이 여러 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일단 그것이 성안이 되어 있고 또 서틀버스 문제도 국회에서 법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슈퍼라든가 단독상인들을 위해서 공동물류창고를 만들어서 단체로 구매해 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과 또 개별기업이 시설을 보완할 때, 시장단위가 아니고 개별점포를 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할 때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아침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예산서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수많은 법률을 통과시켜도 사실 관련된 법률은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서틀버스금지에 관련된 법률 정도에 지나지 않고, 사실 정부 측에서 관심이 없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부가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첫째 하나 있고 또 당사자들이 시위를 하고 막 떠들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처에서 하겠느냐 그것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산자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답변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점은 그날 재경부장관께서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들 머리 속에서 영세상인들은 당연히 망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유통의 현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작은 구멍가게가 망하는 것이야 당연하고 대규모 쇼핑몰이나, 아니면 대형할인점·백화점 그것이 커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망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정부의 실상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지가 뭐냐? 적어도 그냥 망하는 영세한 재래상인들, 재래상업에 대해서 정부의 시각이 무엇인지 그 점부터 먼저 한번 밝혀 주세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정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 특히 국회에서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법이 8일자로 함께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산업자원부가 지방농공단지하고 겹해서 지역경제 특히 현장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큰 대형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미세한 부분의 새로운 활력에 의해서 지역의 지금 경제적인 고통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청에 역할분담을 시키고 또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별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런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말이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몰락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유가 뭐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너무 급격히 이루어질 때에는 바로 사회 광범한 층, 이것도 지금 중소기업청 유통연구소에서 연구한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00년11월에 나온 보고입니다마는 조사시점은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사업체 숫자가 240만개, 전체 중소기업의 90%, 그 다음에 조합원수는 450만명, 전체 중소기업 종업원의 55%라고 해 놓았네요.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이 자체도 사실 신뢰성 자체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이번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맞을 겁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많은 240만개나 되는 사업체 그리고 450만명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의 횡포, 지금 그 횡포는 막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면 아시다시피 빅3라고 해서 현대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롯데 이렇게 세 부분을 보통 말하지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거래가 있는 것은 정부가 막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로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불공정거래를 막아 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 단순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사례는 우선 막아 주어야. 그 중에 하나가 셔틀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의원들이 막은 것 아닙니까?

○**委員長 張在植** 金文洙 위원님, 너무 길어지면 지금…… 오늘 답변 속력 좀 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간단히 간략히 해 주세요.

○**金文洙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金文洙 위원께 별도로……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자료로……

○**金文洙委員** 아니, 자료가 아니고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보아서 전체적인 비중을 볼 때 너무 소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도 또 아예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이런 것은 저는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질의한 것이 산자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것은 이 부문이 가지고 있는 크기에 비해서 너무 영세하단 말이지요. 너무 소홀하게 다루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안 나온다는 그 점도 어떻게 검토해 주시고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金文洙委員**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다음에 실태조사도 이 정도되는 실태조사도 이게 처음 나온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허가 영세공장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법을 만들어서 구제했던 것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종합해서……

○**金文洙委員** 구제 안 된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였는지, 적어도 내년도 예산 가운데서라도 영세상업과 무허가 영

세공장 이런 작은 공장, 작은 상업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라도 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장관님!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해 보세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대형유통 불공정거래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변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金 위원님의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재정립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총괄예산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금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계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3 점포가 각 지방에 다 뿌리를 내리고 그 지방의 상권을 전체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지방의 전통 백화점, 전통 대형할인점 같은 것은 다 망하고 이 빅3가 장악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집중화되고 독점적인 상태로 감으로 해서 자금의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지방경제가 완전히 고갈상태로 가고 있는 점, 이것 금융감독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아직 안 주셨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해놓고 답변 안 주셨어요. 매일 매일 그날 저녁에 송금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었다면 지역에서 자금이 돌고 있을 텐데 이것이 그 날짜로 바로 중앙으로 다 뿔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답변 전에 金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방진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와 융합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에 저희가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그 지역경제를 보완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지역경제의 씨를 완전히 말리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 말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라도 실태라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무슨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는 것입니까?

금융감독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그것 토요일날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해요?

산자부장관은 답변이 오기를 무엇이라고 왔느냐

하면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개별업체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비밀이라서 보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위원장은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금융의 이동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금융감독위원장, 빨리 답변하고 이 질의를……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자금의 총체적인 이동은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는 있다는 것을……

○金文洙委員 그것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방금 그 답변하신 그것을, 총체적인 이동상황을 보고해주세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러나 개별업체별로는 실명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해주세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빨리 주세요. 언제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저한테 의견만 물으실 줄 알았는데 자료를 요청하시면 업종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

○金文洙委員 예산심사 끝나고 주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지금 언제까지 드리겠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시스템 상황을 봐서 빠른 시간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빨리 오늘 중으로 해주시고요.

○委員長 張在植 이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金文洙委員 그 다음 제가 민간……

○委員長 張在植 너무 오래 혼자하시니까 다른 분이……

○金文洙委員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나중에 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끝냅시다.

○金文洙委員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데……

○委員長 張在植 金文洙 위원! 이것으로 끝내고요……

○金文洙委員 위원장님! 답변을……

○委員長 張在植 끝에 한 가지 입니까? 아니, 지금 혼자서 10분 이상 하셨으니까……

○金文洙委員 10분이 아니라 이것은 10분 이상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委員長 張在植 너무 많이 하시니까……

○金文洙委員 아니, 무엇이 많습니까?

○委員長 張在植 지금 10분 이상했거든……

○金文洙委員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10분 이상씩 듣지, 왜 저만……

○委員長 張在植 그것은 질의시간이고 이것은……

○金文洙委員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데 왜 그러십니까?

○委員長 張在植 그래서 20분 됐는데……

○金文洙委員 그 다음에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각 부처마다 행사마다 무슨 재경부까지도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무슨 단체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세상인에 대한…… 그 상인조직들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예산은 제가 아무리 예산서 찾아봐도 없는데 1원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 연구결과서의 답변은 뭐냐 하면 상인들의 조직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지만 그 조직을 통해서 무슨 자구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산자부장관님이나 중소기업청장이나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현재 상인들을 위한 조직별로는 그런 대로 수퍼협회라든가 백화점협회라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형화되지 않은……金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변의 상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단체가 없고 사실 기능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金文洙委員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이제 말씀드린 대로 金위원님이 그런 제기를 해주셔서 그 저변에 대해서 정책을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액수를 전부 뽑으세요.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온갖 단체에 대한 지원액수가 총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1원도 지원 안 한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다른 것도 하지 말든지……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특별히 어떤 다른 법을 제정할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하셨는데 해 주시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죄송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지금 기존법이 있고 또 이번에 국회에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을 해주셨고 해서 그 법 가지고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

○**金文洙委員** 이 연구서에는 재래시장활성화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은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이번에 소상공인법 개정하는데 그 내용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가지고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점 검토하시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긴밀히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하고, 규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실컷 물었는데 답변은 ……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金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국제경쟁력으로 전체하니까 각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어떤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시장군수가 그것을 하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라와야 무엇을 해 주지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金文洙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산업자원부가 하는지, 중소기업청이 하는지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실제 담당부처 자체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인들이 어떻게 어느 부처에서 뭐

를 하는지 알고, 지원을 어떻게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알고 요청하겠느냐 이것입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 상업은 산업자원부가 관장하고 재래시장도 육성하고, 또 중소기업청이라는 것이 별개 아니고 산업자원부 산하청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굉장히 부실한데 독촉을 많이 하시니까 시간관계상 우선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된 것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회의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웬만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시기 하고, 장관들께서도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제가 듣고 있기에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보다는 위원 자격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각 부처 장관이 현실을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감이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자제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런 것이 있어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柳在珪 위원 질의하신 가운데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완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여건조사를 탁상에서 공부만 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농공단지가 안 된 이유가 첫째 노동력 확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삼사십 분 거리의 도시에서 버스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한다는 명분은 아주 좋지만 지금 농촌에 공장에 가서 일할 노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50대·60대가…… 지금 당초에 세웠던 농공단지의 70%·80%가 전부 문을 닫고 군청과장, 부인 또 거기 유지부인까지 나와서 일을 해도 생산력이 떨어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병원이 없으면 중환자가 생기면 어렵듯이 농공단지에서 기계가 고장나도 수리할 데가 없어요. 40분, 50분 되는 도시로 가서 수리해 가지고 옵니다. 또 납품하는데 운반비 이런 것을 생각 안 했으니까…… 무조건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한다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논리 하나 가지고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전부 엉망입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농공단지가 왜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디스코텍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임을 얼마

든지 많이 주어도 와서 기숙사비가 좀 싸다 해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일 끝나고 디스코텍에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현실적인 여건을 전연 산자부에서 무시하고, 물론 현 장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들께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대해서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애로를 듣는 질의를 장관은 국·과장들이 탁상에서 좋은 머리로 보고한 것만 가지고 읽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관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좀 현장에도 나가 보시고 이래 가지고 농공단지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했지만 무슨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까 했는데 뭐를 지원합니까?

세금도 그래요. 내가 조세전문가입니다마는 3년간 면세하고, 2년간 감세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농공단지 흑자가 안 납니다. 어느 기업체이고 아주 운 좋은 기업체 외에는 3년간은 흑자가 안 납니다. 그러면 적자시대 다 지나고 이제 소득이 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과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법도 대강 소득이 발생할 때로부터 5년으로 고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초 농공단지에 들어간 사람은 세금혜택을 거의 일전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선전할 때는 5년간 농공단지 면세해 주기로 했다 하는데 뭐를 면세해 주었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신중히 장관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피부로 느끼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아까 柳在珪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심각하게 현장 사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申鉉泰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비용 증당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공제조합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조합원 자체비용으로 증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물체로 잡히지 않는, 일반 제조업과 다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나 보험기관에서 자금이나 보증을 받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구성해서,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되겠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업계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50%씩 지원을 해서 저희들 목표는 2002년까지 1,3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1월말 현재 51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것이 11월말 현재 1조2,4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수주활동이나 판로개척에 직접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50억원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원방식 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출연융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내년에도 약 55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보완해서 공제조합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심사평가 강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통신부에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등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 부처와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복방지점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申鉉泰 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시스템의 일원화 등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은 일반회계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은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나 기능중복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부는 법제도 정비,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네트워크 고도화 또 지불과 관련된 암호 알고리즘, 전자서명 인증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자

원부는 제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응용인프라 그리고 상품코드 등의 표준화, 제조업 내의 IT 인력개발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측면에서 보면 중복기능이 없고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협의회라든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편사업, 국가우정금융사업이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에 교차보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정경쟁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 읍·면단위까지 포함된 약 4,000여개의 우체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체국 우정사업을 취급하는 직원이 보편적인 우정서비스를 위해서 금융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회계분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향후 WTO 협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분리회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한 정보통신분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신망 수준은 우리나라의 약 1975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高珍富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것 또 없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예,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러면 高珍富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세히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요점위주로 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金景梓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농가부채문제 또는 농업의 국제경쟁력문제, 농업의 내일과 관련해서 申鉉泰, 李洛淵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달 21일과 엇그제 7일 전국에서 농민들이 농민대회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고 국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농정자체의 잘못도 있고 또 농민들의 잘못도 있고 해서 농업내부 외부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농가부채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농업외부요인으로 보면 IMF라는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있었고 WTO,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방화라는 것이 농업의 유해요인으로 작용이 되었고 내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본수익률이 90년대 들어 와서 계속 인력이 노령화되면서 기계화 전환과정에서 자본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를 투자했습니다마는 그 투자에 의해서 농업생산기반은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을 통해서 투자농업을 적극 권장한 것이 기술지도하고 경영지도가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또 농민들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보조금이 따라가니까 함부로 참여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농업의 부채문제가 어렵게 되고 또한 98·99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단기적인 부채연기대책을 하다 보니까 당장 내년에 3년분의 상환분이 도래하고 내후년에는 2년분의 상환분이 도래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채문제에 대해서 큰 중압을 느끼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규모로 대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간에 법률제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을 담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금명간에 결론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지난 한 10년간 적폐되어 있던 농가부채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농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영농에 활기 있게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경쟁력과 내일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농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제 농업에 있어서 작목별·품목별로 해서 쌀농업, 주곡농업하고 경제작물농업하고 축산농업,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쌀농업에 대해서는 3내지 5ha를 경작하는 농민들 약 10만호를 양성해서 이 10만호의 농업인이 전체 쌀 생산량의 약 반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화 영농을 해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영세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덜 써 가지고 가격차별화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업으로 해서 끌고 나가고 여기에 더해 이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겠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를 해 가지고 소득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쌀농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를 해주어서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 저희 연구결과입니다. 경제작물에 대해서도 과수, 채소, 화훼 등에서 우선 그동안에 좀 부실한 농업관측을 더 확실하게 관측을 해서 농민들의 영농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개혁이라든가 가격지지정책도 종전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농안기금 2조원을 투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격지지정책을 해서 이 가격을 보장하고 또 농민들의 자조적인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자조금을 조성하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100% 기여를 해 가지고 자조적인 영농활동 또는 유통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100억불에 해당되는 일본 농산물시장에 저희 신선농산물이 계속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다소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문제되었던 매년 찾아오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부분적이지만 농업재해보험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불의의 재해에서 농민들이 소득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만 하더라도 내년부터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한우 250만두 정도를 일본의 和牛 수준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확실한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돼지가격은 최근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염려를 드렸습시다마는 회복되어서 어제 현재 14만9,000원

으로 경영비 수준을 조금 상회하고 있고 생산비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로서는 농업이 사양산업이나 또는 국민이 떠나는 산업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농업 자체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른 고부가가치산업에 비해서는 약간 뒤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농업의 선진화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도 없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농업을 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이런 노력을 한다면 한국농업의 미래는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申鉉泰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께서 농림부와 농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사업이 유사사업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있는데 이를 단일화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인데 주로 농림부가 정보화하는 것은 유통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농진청에서는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宋榮珍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께서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 관련 농진청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鄭哲基 위원님과 李洛淵 위원님께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추진해 왔습니다. 투자금액이 1조251억원이고 어제 날씨도 불순한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현지에 다녀오셨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화호문제로 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화호는 바로 인접에 공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인구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고 새만금은 시화호하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이 되어서 새만금을 시화호하고 똑같이 보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다만

시화호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물관리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그동안에 학계 등 서른 분의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제출한 결과를 소관부처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부분의 부처가 다 제출했고 환경부가 지금 거의 다 준비해서 마무리할 단계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부처들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총리가 주관이 되어서 이에 관한 결론을 내려 줄 계획이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관심있는 위원님들께 소상한 설명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朴鍾根 위원님과 李洛淵 위원님께서 정부의 농정시책이 채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시책변화와 전략을 물으셨는데 아까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鍾根委員** 지금 장관님의 기본적인 입장인 농업부문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부채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일반 농업부문에 다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쌀농사나 이런 것은 논농사직불제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보상체제를 갖추어서 채산성을 맞추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농사 이외의 일반 농업투자는 장사하면 할수록, 투자하면 할수록 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부채는 이런 시스템이 시정이 되지 아니 하고는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밭농사 또 농업에 관련된 사업투자 이것이 국제경쟁력이나 채산성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정부가 만들어 주든가 그것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논농사직불제와 같은 어떤 형태의 정책을 만들어 주든가 안 그러면 비용을 낮추어 주는 확실한 대책이 있든가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농가부채를 어떻게 상환시키려고 합니까, 돈을 벌어야 상환할 것 아닙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현실에 가까운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벼농사 주곡은 그런 대로 소득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축산만 하더라도 최근에……

○**朴鍾根委員** 그런 내막을 산업별로 다 설명 들을 생각은 없고 농림부에서 각 농업과 관련된 모

든 산업에 대한 채산성 분석을 해 가지고 채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기본대책이 나와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알겠습니다.

특히 경제작목에 대해서 朴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농가부채 대책을 국회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가격지지를 해 줄 생각이고……

○**朴鍾根委員** 거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부채 문제도 국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지 덮어놓고 부채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해 준다는가 부채가 생겼다고 해서 무한정 이연시킨다는가 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지금 밭농사,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는 시골에서 수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새마을 부녀회 보고 전부 다 파가라고 하는 등 사태가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그래서 이 부분은 朴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배추, 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작년에 배추, 무값이 작황이 나빠서 평년가격을 훨씬 웃돌아서 비쌌기 때문에……

○**朴鍾根委員** 그것을 농림부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소소하게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따질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농업부문의 채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안 나오면 국회에서 아무리 부채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도 그것은 결국 밀빠진 독에 물붓기식이기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柳在珪 위원님께서 내년도 추곡수매 예산이 7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3% 정도 감소한 사유와 수매자금을 농협에 맡겨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장수매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양곡회계 운영규모는 1조1,58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770억원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66억원에 비해 1,296억원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약에 의해서 내년도 양곡수매량이



금년도에 비해 약 28만4,000석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28만4,000석에다가 금년도 수매가격 1등급 기준 16만1,270원을 곱한 액수인 496억만큼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양곡판매수입을 717억원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약 440만석을 팔아서 1조815억원의 세입을 잡는 것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계산하면 예산상 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통장수매 제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柳在珪 위원님께서 농민이 농지를 판매하고자 하나 매수자가 없을 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구입해서 위탁경영을 맡겼다가 매수인이 나타나면 재판매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억제하는 한편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비농업인이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가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매사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32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행 법 테두리하고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柳在珪 위원님께서 축산발전기금사업 중 국고예산 성격의 사업은 일반회계나 농특회계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내년도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축산물 수입이익금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최대한 국고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존경하는 柳在珪 위원님께서 농공 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마는 산자부장관이 자세한 보고를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비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산자부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존경하는 柳在珪 위원님께서 농공 단지에 대해 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앞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柳 위원님께서 2001년 예산상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예산이 국고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좀더 줄이고 국비를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산림부서의 인원증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비지원을 늘리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부서의 인원이 지난번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 115만3,000ha 가운데서 수리시설이 설치된 수리답은 76%에 해당됩니다. 천수답이 약 27만ha 정도 되는데 갑자기 엘리뇨나 라니냐 등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인 가뭄이 오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국지적인 가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金貞淑 위원님께서 농촌관광자원개발사업에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문광부와 중복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오를 때 바로 IMF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개발사업은 이미 착수한 사업만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체를 분석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계속한다면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박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은 앞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주체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나 문화관광부의 관광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보세요.

농촌관광자원개발 용자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관광자원개발을 지방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용자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가부채만 올리는 꼴이 됩니다.

농촌에서 무슨 관광자원을 개발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무슨 딸기농장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딸기농장에다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재미있게 엮어서 가족들이 하루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패키지 관광을 개발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장관께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아실 것 아닙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내년도 16억 가운데 농업관광 부분은 2억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박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2004년까지 974개소를 할 계획인데 지난 연말까지 639개소를 조성했습니다.

○**金貞淑委員** 민박을 말입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아닙니다. 관광농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관광농원 개발과 우리나라에서의 관광농원 개발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주어진 여러 가지 농촌의 초가마을이라든가 이미 주어진 설비를 가지고 도시의 여가수요를 활용하는 데에서 농촌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나라의 경우는 여기에 상당한 투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된 것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놓은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하려는 사업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것이 관광농원이면 대충 품목이 무엇입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관광농원이라는 것이 가령 거기에 사슴목장도 따르는 경우가 있고 과수농원이 따르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도시민들이 거기 와서 하루 저녁 쉬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매 시간 놀다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그것을 농림부에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농촌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용자해 준다는 것은 품목이나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특허내듯이 뭐 그렇게 할 때 용자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평범한 과수농원이랄지 이런 데다가 민박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도록 거들어 준다는 것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다가 맡겨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어요.

국가에서 별도로 연구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아이디어를 자문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모를까 거기다가만 맡겨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라에서 돈 주는 것이니까 빌려다가 쓰고 그러면 농가부채만 실컷 올라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면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만 마무리를 짓고 다시 한번 검토하신다니까 더 이상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생산성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지 않아서, 또 이것은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金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라든가…… 도시민들의 여가선용을 농촌으로 유인해서 농가의 농외소득을 올리는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농림부가 걱정을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그것을 합니다. 너무 많이 개발을 해서 탈입니다. 그래서 환경 다 버려 놓고 곳곳에 가축농장, 농원 다 하는데 그것을 농림부가 1년에 16억원씩 투자 안 해도 다 해요. 그리고 이것 빌려주어서 나중에 농가부채만 올린다는 얘기지요. 농가부채 때문에 지금 농림부가 보통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께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지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2002년4월과 5월에 개최될 계획인데 이것은 국제원예가협회가 공인한 국제꽃박람회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범 정부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 있는 또 앞으로 화훼산업에 있어 수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이 사업도 작년에 고양에서 꽃박람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사업성과가 과연 있었습니까? 지금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많이 와서 보고 우리나라의 꽃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성과를 얻어내려고 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내국인들이 일요일이나 휴일날 많이 가서 휴식공간으로 아니면 머리를 식히는 면으로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박람회 하는 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남시에서 하는 환경박람회도 그랬고 고양 꽃박람회도 그랬고 하여튼 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 마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면도에서 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림부에서 내년에 16억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를 지원하든지 모르겠습니다. 꽃씨를 사는데 돈을 보태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배할 비닐하우스를 지으라고 시설비로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라고 하고 문광부에서는 관광수입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농림부에서까지 왜 지원을 합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이것을 관광으로 보시는 안목이 있을 수 있을 테고 화훼수출을……

○金貞淑委員 꽃장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고양 꽃박람회를 해서 수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작년에 고양 꽃박람회에서 49개국에서 224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250만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금액은 적습니다. 앞으로 이 화훼산업을 저희들이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朴鍾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수출산업을 일으켜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이니깐 이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께서 농산물 명품개발 사업은 기술개발성도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세계적인 우리 식품 개발을 위해서 9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연도에 기초연구와 조사를 했고 2차연도에 제품개발을 했고 3차연도에는 시장개척을 하는 단계적인 사업인데 1차연도 평가결과 18개 과제 가운데 6개 과제는 2차연도에 조기 완료했고 12개는 3년 계속 수행하는 과제로 분리해서 12개 계속과제에 대해서 3차연도인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장관님, 명품을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식품개발이라고 하셨든가요? 지금 농산물 명품개발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명품의 내용을 아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부식류가 다섯 가지가 있고 음료 주스가 아홉 가지가 있고 스낵 기타 여덟 가지 등 해서 저희 나라의 식품 가운데에서 명품을 개발해서 외국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께서 산지유통센터가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농협과 생산자조직간의 유기적 협조가 미흡한 점 등……

○高珍富委員 서면으로 해주세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宋永吉委員 장관님, 제가 저번 회의때 서면답변 요청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宋永吉委員 준비가 되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장관님께서 농지로 쓰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새만금의 조성비용이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갯벌을 희생하는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3조원의 총 공사비로 따졌을 때 평당 조성비용이 7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거래가격은 3만원 내지 3만5,000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환경피해의 측면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제적 논리로 보더라도, 현재 우리 농업의 농산물 가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성이 확인 안 되는 면이 많고 이것이 장기적인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경제성이 없더라도 무엇을 추진한다는 논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의 시화호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 아무튼 납득이 갈 수 있는 자세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어제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면답변 올리고 죄

송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의 주관은 농림부이고 사업수행은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단지 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산업단지를 논의하는 것은 보상위탁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지사의 희망사항이고 정부에서는 분명히 농지로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각 부처별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농림부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제출했습니다.

○**孫泰仁委員** 어떤 내용입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새만금사업 상류 부분에 관한 환경수준 유지는 환경부 소관이고 새만금사업 내부의 환경관계와 내부개발에 관한 것, 1조251억 원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 부 소관이라서 그 부분을 했고 갯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상류 부분의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각각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새만금사업 중단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조정보다도 환경문제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께서 앞으로 총리실하고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전문가들을 비롯한 환경단체 또 국회에서도 관심이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공청회를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農林部長官 韓甲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식량을 공급해야 할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농지확보가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호 수평적인 입장인데 이 수평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삼십 분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孫泰仁委員** 문제는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농지 조성만 하면 된다는 입장보다는 농지를 조성한 이후에 농업용수, 수질보전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

야만 농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물론 농림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孫泰仁委員** 그래서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수질보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수질보전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총리실에서 지금 중단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최대의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장관께서도 수질보전에 관해서는 적어도 면밀한 검토 또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국민적인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孫泰仁委員** 그래서 가까운 예로 지난번에 공청회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청회라는 것을 수단으로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의논해 보겠습니다.

○**金洪信委員** 회의록 정정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장관 말씀을 듣다보니까 회의록 정정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께서 우리나라를 자꾸 저희나라라고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호나 국가의 상징, 태극기, 대통령 이런 경우에는 ‘저희’라고 낮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라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회의록을 꼭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朴鍾根委員** 자료요청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마는 농업기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계 평균수명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기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마는……

○**朴鍾根委員** 한 이삼년밖에 안되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그런데 신기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기종이 나오면 옛날 기종이 없어지고 또 옛날 것하고 신기종하고 부품의 호환성이 없어 가지

고 고쳐 쓰고 싶어도 고쳐 쓸 수 없고 새로 사 쓰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와 관련된 모델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또 그 내구연한이 얼마며 부품상호간 호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鉉泰 위원님께서 평택 아산항 동측부두 3선석을 200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00억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재정투자를 위한 총사업비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금년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확정된 관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기획예산처와 지금 열심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宋榮珍 위원님께서서는 대산항 건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宋榮珍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申鉉泰委員 장관님, 지금 평택항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申鉉泰委員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鄭宇澤 위원님께서 수산물 직거래 기반시설인 수협의 바다마트……

○委員長代理 丁世均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다음 高珍富 위원님……

○委員長代理 丁世均 서면으로 해주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閔鳳基 위원님께서서는 인천북항개발과 관

련해서 2001년도 예산으로 213억원을 요구해서 109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차액에 대한 대책과 인천항의 투자규모가 소규모 항만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천북항은 부두 18선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준설사업과 준설토투기장공사는 정부가 투자하고 부두시설은 민자사업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으로는 항로준설비 94억원과 준설토투기장 호안 100억원 그리고 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 등 213억원을 협의하였지만 민자유치사업인 부두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선 사업이 필요한 준설토투기장 호안건설비와 감리비 등 109억원을 반영하고 준설비 및 실시 설계비 등 104억원은 차기반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안이 건설되어야만 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면 기술상 반영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항의 투자규모가 적은 이유는 기존의 인천항 내항개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고 인천북항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재정사업비가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조기에 집중 투자되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질의와 관련하여 항만개발투자에 있어서 지역간에 투자의 불균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5년간 연차별 각 주요항만별 투자액수들을 조사해서, 權琪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5년간 투자비들을 전부 일람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표를 보면 98년도 예산이 97년도에 편성된 것인데 98년 예산에서부터 위원님들이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호남지역의 항만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은 액수로 미리 미리 투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편성한 99년도 예산이 그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아진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호남의 예산도 많이 깎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만이라는 것이 일거에 모든 항만을 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이 개발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사업계획이 되는 대로 필요에 따라 항만별로 개발하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모든 항만투자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투자경향을 본다면 그동안 경부축이 물

류의 중심축이 되고 따라서 부산과 경남지역에 투자가 그동안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개발되면서 중국 쪽의 물동량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서해안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듯이 90년대 중반에서부터 서해안 쪽의 투자가 시작되어서 서해안 쪽의 항만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얼른 보면 일부 특정 해안에 투자가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 사업계획들이 95년·96년에 계획되어서 98년부터 투자가 개시된 사업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李洛淵 위원님께서 연안정비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진일보된 국가계획……

○委員長代理 丁世均 서면으로 해 주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宋永吉 위원님께서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갯벌과 농지의 가치비교연구결과에 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갯벌이 농지보다 3.4배 높다는 견해 또 농지가 1.85배 높다는 연구결과……

○委員長代理 丁世均 장관님, 宋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결과가 너무 일치하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申榮國委員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예, 요청하십시오.

○申榮國委員 해양수산부장관께 자료요청 합니다.

宋永吉 동료위원이 한 얘기와 유사한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 때문에 아홉 분의 예결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족보호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올림픽했을 때 세계 언론들이 올림픽 그 자체보다는 한강의 소위 피쉬아파트, 어족보호차원에서 고기집을 지은 것이 올림픽보다 더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 보아서 갯벌이 쉽게 말하면 피쉬아파트가 되는데 4만ha의 새만금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만큼 피쉬아파트가 없어지는데 어족보호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동시에 아까 농지보다는 갯벌이

더 가치가 높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해양수산부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李瑾榮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景梓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申榮國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申 위원님께서서는 금융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여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공적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97년말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어느 정도 복원되어 실물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은 취약하고 부실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금융기반의 국제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개혁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申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도덕적 무장과 함께 감독 및 검사기능의 선진화 등 강력한 쇄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해서 금융감독제도 및 조직개편방안을 연말시한으로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申榮國 위원님께서서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부실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은 부실 정리하고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정상화된 후 지주회사에 편입되게 되므로 부실은행이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 투입은행 뿐만 아니라 중금사 등 다양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편입하여 대형화, 겸업화, 전문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특히 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을 주력사업 부문별로 기능을 재편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申榮國 위원님께서서는 금융기관 부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추가발생 방지 및 조기 정리가 선결과제이며 부실채권의 추가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기업 및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정이하 여신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이행사항 점검을 통하여 부실채권 감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도록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소위 CRV 설립 및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실채권을 감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申 위원님께서서는 회사채 차환발행 곤란 등 기업자금 경색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申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기업자금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8일 연말 기업자금 대책을 발표하여 우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풀을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에 부분보증에 의한 대출채권담보보증권 소위 CLO 발행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고 제2차 채권형 펀드 10조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2월중에 조성하며 연내 프라이머리 CBO 2조원의 발행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에 기업금융예대책반을 설치하여 기업자금 지원실적을 일일 점검하고 자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申榮國委員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감독관청이 무섭고 철저해야지 밑에서 소위 누수현상이 없다, 지난번에 ‘많은 금융기관의 금고가 물이 줄줄 샌다’ 자고 나면 신문에 그런 기사만 나온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감독관청이 져야 될 것이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인 감독원이 정부기구, 공직자라야지 실효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기구 가지고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루속히 공무원이 담당하는 정부기구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금융지주회사를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금융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주회사로 해서 합병하는 것이 인원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금융구조조정을 하려면 소위 슬림화 해야 되고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구조조정의 핵심 아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재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세 번째에 금융경색현상은 제2금융권과 주식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더 많은 문을 열어 가지고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금융기관인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경색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鍾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감위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지침을 간단명료하게 정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부 고시 등에 의해서 별도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소위 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MOU의 내용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은행경영의 정상화를 담보하기 위

해서는 MOU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다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위원장님! 그런데 MOU, '경영합리 화계획을 만드실 때 상당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사항이 많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부속자료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지표는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어떤 정상화계획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능력껏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만 합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을 줄이든 비용을 줄이든 자산을 충실하게 하든 자본금을 증액하든 그것은 모든 기업의 재량에 맡겨야 될 일이지 그것을 일일이 위원장님께서도 MOU를 한번 보셨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朴鍾根委員**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항목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부속자료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지표를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를 딱 정해 가지고 그것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감독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또 부실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면 수시로 변합니다. 지난번에 11월3일 퇴출을 결정하실 때 부실기업판정기준이라고 해서 8개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작성해서 금융기관에 시달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기준이 또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3개월 연체일 경우에는 부실기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단편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부실기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모두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관리지표도 분명해야 되고 그 지표에 의해서 기업과 은행과 정부도 확실하게 그런 것을 밝혀놔야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메카니즘이 형성되지 않겠

느냐.

또 요새 언론보도에 볼 것 같으면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금융기관에도 이면계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가지고 이면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시다마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소위 특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요건을 MOU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월3일 부실기업 판정기준은 금감원에서 원칙을 제시했고 모든 금융기관이 그것을 기초로 합의해서 부실기업 판정기준을 만들어서 계속 똑같이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鍾根委員** 그때 발표한 8개 기준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자체적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채권금융기관의 합의에 의해서 부실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朴鍾根委員** 그러면 금융기관이 새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그렇습니다.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할 수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그리고 이면계약은 저희는 건전성 감독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확인 해본 일은 없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저희는 노사관계를 관리하는 직무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건전성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시다마는 그런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이면계약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감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면계약이 언론에 보도된 지가 언제인데



적어도 감독위원장으로서 금융기관에 이면계약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폐지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건전성 감독을 하고 있는 책임기관에서 ‘이것은 노조관계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건전성이 유지되겠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즉각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朴鍾根** 위원님께서도 기업회계의 투명성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말씀하신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기업회계기준의 기본 골격을 2년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99년9월에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여 향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기준 준수와 감사인의 공정감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감사인간의 상호감리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회계제도의 개선과 함께 기업공시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 등 금융인프라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관계가, 기아산업의 경우도 그랬고 대우도 그랬고 공인회계사 보고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도 실사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국제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든 그것이 진실되게 현실을 파악해야지 자꾸 실사내용하고 틀리는 허위 재무제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면 실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그 기업이 부실한지 부실하지 않은지 금융기관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이런 데 대한 관련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다음은 재정경제부차관……

○**申鉉泰委員**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이따 오후에 하시면 안 됩니까?

○**申鉉泰委員** 오후예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지금 세 부처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오후에 자료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申鉉泰委員** 오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재정경제부차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재정경제부차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申鉉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申** 위원님께서도 조세부담률 및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申**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금년과 내년의 세수 증가도 주로 기업이익 및 수익규모 증가, 고액재산가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申** 위원님의 지적대로 조세 형평성을 위한 세제면에서의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申鉉泰**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불필요한 국외여비 대폭 삭감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오늘 기획예산처 부별심의가 없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집행용도가 불분명한 해외연수자료수집, 선진국사례 시찰예산 361억원의 정확한 내역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국외훈련예산이 약 292억원임을 감안할 때 공무원국외훈련예산과 각 부처 해외조사 시찰예산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IMF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소되었던 공무원국외훈련예산의 회복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이라든지 훈련경비

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申鉉泰 위원님께서서는 산업은행에 대한 내년도 출자와 관련하여 사옥신축문제, 임직원 봉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산업은행의 내년도예산에 반영된 1,000억원은 금년 중에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5,900억원 중 일부를 전체 예산소요를 감안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사옥신축은 현재의 본점시설이 노후되어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호화신축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봉급인상은 세법개정에 따른 기밀비 폐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泰委員 차관님, 여의도 사옥은 준공일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내년 7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鉉泰委員 사옥 짓는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2,120억원입니다.

○申鉉泰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옥은 그 규모가, 사옥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1빌딩이라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좁고 그래서 아마 96년부터 지금의 공사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申鉉泰委員 알겠습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다음은 존경하는 申榮國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申榮國 위원님, 중요한 답변 하나만 들으시고 서면으로 좀……

○申榮國委員 답변 들어보고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다 들어야 되겠어요?

○申榮國委員 재정경제부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申榮國 위원님께서 11·3 기업퇴출은 좀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申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 부분 이해가 갑니다. 채권은행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잠재부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해 하였고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

를 도출해 냈다고 봅니다마는 일부에서 현대건설 등과 관련한 판정보류를 11·3 퇴출의 미흡한 증거로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잠재부실기업 정리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일체의 신규자금 지원을 끊고 해당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만약 유동성 문제로 인해 부도가 날 경우 즉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해당기업과 시장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申 위원님께서서는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할 작년 11월 당시 투신사는 대우채 문제 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상실되어 수탁고가 계속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한 시장 지지세력인 투신사의 매수여력이 약화되어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환매심리가 가속화되어 대량 환매로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투신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申 위원님께서서는 기업인 관련자의 책임문제를 좀더 과감하게 처리했어야 했다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옳은 지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주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에 대해 정부로서도 관계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나름대로 엄정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금년 8월중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을 통해 8개 기업 및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형을 적발하여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한 바 있고 대우그룹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주와 회계사 등에 대한 사직당국 고발과 징계조치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부실 경영주 등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강화를 통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책임추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금융기관들도 공동으로 채권회수 극대화 와 부실 기업

주에 대한 책임추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지난 11월21일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구조조정회사나 사전조정제도 등 새로운 장치가 활성화될 경우에 부실 기업주의 경영권 박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도덕적 해이 현상도 차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申 위원님께서서는 내년도 경제전망 5 내지 6%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성공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나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는 정부의 의지로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申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을 내년도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등 우리의 영향권 밖에 있는 대외 불안요인의 전개방향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시나리오별로 거시정책기조의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예비 대응방안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대외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신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내년도 5·6% 정도의 성장은 달성 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내년 2월말까지 시한부 구조조정 추진 계획도 전시적인 측면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 증대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위축된 소비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 2월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현재까지 이미 드러난 잠재부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어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대내외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구축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구조조정은 한시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아니며 내년 2월 이후에도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금융감독위원장이 아까 시중자금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榮國委員 그것은 되었고 짧게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것이 정부의 불신 특히 그 중에서도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것이 불신의 큰 역할을 한다고 분위원은 봅니다. 예를 든다면 현대건설이라든가 쌍용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두 회사도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왜 살려주었느냐, 사적으로 편향된 것이 있지 않나, 만약 현대건설이 언제인가 퇴출이 되면 또 제2의 대우처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점, 두 번째는 기업인의 책임에 대해서 대우의 金宇中씨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공적자금으로…… 일을 저질렀으면 해외에 떠다니게 하지 말고 빨리 국내로 데려와서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드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재경부차관님,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양해를 구할테니까 여당 위원님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야당 위원님들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朴鍾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朴鍾根委員 답변은 들으나마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청와대에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가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누가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지금 드래프트(draft)를 가지고 재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처가 각 실무자 내지는 그 위의 고위급회의를 통해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아직 안이 제출될 상황은 아닙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금년 말까지는 가능한 한 확정지를 예정입니다.

○朴鍾根委員 빨리 해주시고 지방경제살리기법안이 제출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朴鍾根委員** 정부 측에서 그런 법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저희가 내용도 짚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만든 안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7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놓은 것과 매칭이 되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나머지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재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먼저 존경하는 申鉉泰 위원님께서 영월댐 건설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관리비 5억원이 계상되었다는 점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전주공항이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1년 정부예산안 편성시에는 영월댐 건설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금년과 동일하게 관리비를 편성했지만 지난 10월24일 물관리정책추진위원회에서 댐건설계획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수안보 구간은 시행중인 국도사업과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거리교통은 고속도로가 중·단거리교통은 국도가 분담하는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이 일부 병행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량 분석 결과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국도 구간의 1일 교통량이 1만2,000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2차선 국도의 적정용량인 1일 8,000대 수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병행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가 병행되는 구간은 투자시기를 재조정하는 등 중복투자 문제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97년에 타당성조사를 한 바 있고 이어서 지난 99년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타당성을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접 군산공항과의 중복성 문제도 이를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드

립니다.

○**申鉉泰委員** 차관님, 군산공항과 전주신공항 추진예정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시간상으로 한 시간 반 정도 구간이고, 58km입니다.

○**申鉉泰委員** 27km 아납니까? 27km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군산에서 전주까지 거리가 58km입니다.

○**申鉉泰委員** 신공항까지는 27km밖에 안 되고, 어제 예결위원들 아홉 명이 새만금사업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군산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전북도청 관계자가 현장으로 가는 버스에 동승했는데 제가 전주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주신공항을 건설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전북도청의 고위관리자가 답변하시는 말씀이 정말 공개하기 거북할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긴급 장·차관회의를 하게 될 때 전북도청이 있는 전주가 교통의 오지라서, 부산이나 광주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2시간 이내로 서울로 올 수 있는데 전주는 제 시간에 대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전북도에서 몇 시에 도착하는가를 감안해서 회의를 열기 때문에 회의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전주신공항을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듣고서 실소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관리가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은 전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발상이라면 이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전주공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현재 군산공항이 미군공항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고 거리로도 떨어져 장래 수요를 분석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申鉉泰委員** 군산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대수를 보면 대한항공에서 2편, 아시아나항공에서 1편 운항되고 있지요? 증편해 주면 주민편의도 제공될 뿐더러 2,2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현재 공항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군산사람 외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공항이 꼭 필요한 면이 있고 또 전주에서 제주로 간다든지 서울로 오는 것만이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申鉉泰委員** 물론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0억이 들어가면 전주에서 군산까지 고속도로를 설치해도 충분히 군산공항을 이용하면서 다른 물동량을 커버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건교부에서 나온 타당성조사 결과를 申鉉泰 위원님께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申 위원님, 어제 전라북도 고위공직자가 동행을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는 아니었겠지요?

○**申鉉泰委員**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위원님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라 하는데 고위공직자가 동행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이 동행했었던 것 같은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다음으로 宋榮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申榮國 위원님께서서는 건설공사의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며 전주공항건설을 예로 드시면서 예산의 지역 균형배분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은 사전준비와 여론수렴이 미흡하고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을 제정해서 공사규모라든지 내용·종류별로 적정설계비와 설계기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공사과정에서 집단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설계감리제도를 시행해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계실명제를 도입해서 설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50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주요 설계변경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빈번한 설계변경을 차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주공항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申鉉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申榮國委員** 申鉉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직선거리 27km 사이로 비행장 다 만들면 우리나라 전 국토는 비행장화 될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27km 사이에 비행장이 두 개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27km 사이에 비행장을 만든다면 전주뿐만 아니라 대구, 김천 사방에 다 만들면 전 국토가 전부 비행장화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OC 예산의 지역별 균형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토종합계획, 광역권개발계획, 국가간교통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의 균형개발과 투자의 효율화를 통해서 국가경제의 성장기반 확충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鄭哲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鍾根 위원님께서 현재 GDP 대비 16.5%인 물류비용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 대로 낮추겠다는 정부계획을 5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물류비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GDP대비 16.5%로 선진국에 비해 1.5배정도 높은 수준이며 높은 물류비는 곧바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물류비를 10% 대로 절감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대규모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물류비를 절감되도록 하려면 우선 물류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전국적인 국제운송시스템이라든지 현대화된 유통창고, 신속한 수출입 통관시스템 등 이러한 선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물류전문인력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5년 이내에 물류비를 16.5%대에서 10% 대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根委員** 차관님, 정부에서 10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너무 약하게 책정하여서 10년 후에도 국제수준까지 못 미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류비용을 낮추는 데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고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데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를 전부 국도로 올려서 포장이나 하고 돈을 몇천 억원씩 거기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물류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투자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첫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10년계획밖에 안 된다면 5년내에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투자계획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부터 돈을 얼마나 더 들이면 건설교통부에서 물류비용을 10% 대로 낮출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내보고, 예산요구를 해보셨어요? 국회의원은 돈이 얼마나 들어야 5년내에 물류비용이 내려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내놓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면 10년 후에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년 고물류비용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안이한 자세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5년 이내에 물류비용을 10% 대로 낮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명심해서 하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辛基南 위원님께서……

○**委員長代理 丁世均**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했으니까 金洪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존경하는 金洪信 위원님께서 공업용수도사업 중 광양3단계사업만 2001년 예산에 반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업용수도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광양3단계사업의

경우 여천·광양지역의 용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1년 예산에 46억원을 반영하였으나 나머지 4개 사업은 IMF 이후 산업단지 분양 및 개발지연으로 인한 용수수요량이 감소된 점을 감안해서 2001년 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하철건설지원과 관련해서 대전지하철 지원액이 광주지하철보다 적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은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고 지자체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국고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은 매년 연도별 투자계획과 공사진척도를 감안해서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비를 토대로 편성됨을 말씀드리며 대전지하철의 경우는 광주보다 착공이 늦어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전시 재정여건상 지자체 투자비조달이 어려워 요구 자체를 적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대전시가 요구한 전체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金洪信委員** 도시철도사업의 경우에 지하철사업을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서 자꾸 벌여놓으면 적자가 한동안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洪信委員** 그리고 지금 몇 개 지적한 지역들을 보면 지하철이 들어가서 교통량 해소하는 데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적자폭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서울지하철도 계속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洪信委員**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조달문제가 심각합니다마는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마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洪信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착수를 한 시점과 계획을 세운 시점 사이에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洪信委員** 인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건설교통부뿐만 아니고 정부시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계획단계, 시행단계, 착수단

계, 예산투자 그리고 적자 예상 폭을 보면 계획하고 투자를 할 때는 국민세금을 가지고 했고 적자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못 시점을 정하고 계획한 사람들은 아무 징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담을 가중해서 받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광역 대도시의 경우에 지하철을 착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지하철을 착수할 때에는 착수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경우에만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洪信委員 아무튼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공사를 강행할 일이 아니고 다른 변화를 모색하는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전주신공항건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洪信委員 답변이 아까 다른 분 답변과 똑같은 것 같아서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군사공항이 다른 데도 있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공항이 군산의 경우에는 미군이고 다른 군사공항은 우리나라 공군입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군산공항의 경우는 미군사용 공항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洪信委員 그러면 그것도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군사공항을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별 탈이 없고, 미군은 군사공항이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다른 데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가…… SOFA개정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미군과 조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98년에 전주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두 번 했는데 97년에 전라북도에서 했고, 99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金洪信委員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전라북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일 먼저 했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洪信委員 전라북도지사가 대통령 측근,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먼저 한 이유가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그때 정부의 필요성과 관련없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입니다.

○金洪信委員 전라북도 자체에서 했는데 98년에는 안 했네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洪信委員 안 하고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비타당성제도가 99년 4월에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金洪信委員 그것은 제가 그제 질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99년 4월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국책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그래서 99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을 시켜서 객관적인 재검증작업을 한 것입니다.

○金洪信委員 무슨 얘기냐 하면 99년 4월에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원칙을 지켜준 것은 물론 고마운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그 전에 건교부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그 이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전라북도가 예비타당성조사한 것을 근거로 시작한 것이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전라북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객관적인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金洪信委員 해보니까 전주신공항은 건설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입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委員 아까 농림부에서 전북도는 보상에 관한 것만 중심으로 한다고 답변했는데 들으셨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보상에 관한 것이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것은 새만금사업에 관한 것

입니다.

○**金洪信委員**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공항 건설할 때 정부가 보상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물론 활주로부분 같은 데는 보상해야 됩니다.

○**金洪信委員** 보상해야 되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洪信委員** 이 보상도 마찬가지로 농림부의 새만금에 대한 답변처럼 전라북도가 담당하게 됩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보상하도록……

○**金洪信委員** 아무튼 수상쩍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라북도에서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했고 그것을 건설교통부가 중요정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군산공항과 2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에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삭감을 주장합니다.

하나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신공항의 엔틀러(antle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폭이 12m로 되어 있었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즉답하기가 조금……

○**金洪信委員**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엔틀러 통로폭이 12m짜리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줄었어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洪信 위원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인천신공항과 관련해서는 金洪信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앞으로 현장확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金洪信委員** 이 답변만 간결하게 얻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신공항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계속 답변을 안 해주었는데 시작부터 현재까지 몇 번 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자료요구입니다.

제가 애초 설계도면과 지금 현재의 설계도면 두 개를 놓고 살펴보니 통로폭이 엔틀러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앞부분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와 엔틀러 통로폭이 두 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든 이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피크타임에 승객이 들어올 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별심의 끝나기 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자료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高珍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항문제만 구두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金元雄委員** 자료 요구 하나……

○**委員長代理 丁世均** 조금 계십시오. 답변 끝나고 나서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高珍富 위원님께서 공항의존도가 높은 섬지역인 제주도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제주 국내노선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 일본과의 다양한 항공노선 개설 및 운항회수 증대용의, 동경 나리타와의 직항노선 개설 및 출발·도착시간 조정의 필요성문제, 중국 대련과 제주간의 직항노선 개설문제, 월드컵경기에 대비한 국제선 증편 및 제주 국제승객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공항간 연결노선 등 국내노선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한항공의 포항사고 등 잦은 항공사고로 인해서 금년 6월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국내선 전 구간의 증편 및 신규노선을 제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재기간이 끝난 현재로서는 대한항공의 제주 국내노선에 대한 제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주공항의 국제선운항 확대, 직항노선개설, 운항시간대 조정 등은 기본적으로 제주지역의 항공수요와 항공사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제주를 기·발착으로 하는 국제선이 더 많이 운항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 등 주요국가들과의 항공회담시 운항노선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동경의 직항노선개설은 그동안 일본측 나리타공항의 포화상태로 서울-동경노선도 공급력 부족상태에서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2002년5월 동경 나리타공항의 제2활주로 개통시 수요 등을 고려해서 증편 또는 직항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대련간은 한·중 항공협정상 노선 미개설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개설을 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시 정규편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전세편·임시편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제주행 국제승객의 편의를 위해 인천-제주간 국내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가 섬지역으로 항공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내 신규노선 개설 및 증편시 우선적으로 항공편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元雄 위원님,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申鉉泰 위원님도 자료요청할 것이 있는데 金元雄 위원님과 두 분은 이따 점심 후에 시작하자마자 그 때 요청해 주세요.

지금 중소기업청만 남아있지요? 빨리 해주십시오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중소기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申鉉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1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예산 중에서 유사사업은 통합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21세기 디지털경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예산액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에 정보화라는 명칭이 사용됨에 따라서 중복을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에 맞추어서 분야별·지역별로 특화된 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개별중소기업 정보화경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e-비즈 기반구축사업에 200억원 그리고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사업에 16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업종별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

해서 업종별 조합을 전자상거래 촉진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15억6,000만원, 지방 중소기업 밀집 지역 초고속통신망 이용환경조성 등 정보화 기반 시설 지원사업에 19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신보연합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활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8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기반조성, 지역별·업종별 정보화 격차해소, 유관기관 정보네트워크 구성 등의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泰委員** 개별중소기업 DB화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개별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몇 % 정도나 완료되어 있습니까?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저희가 지난 연초에 한 4,000개 중소기업 정보화시스템을 조사해 보았는데 정보화수준이 100으로 보았을 때 한 47%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申鉉泰委員** 올해 이 예산이 투입되면 몇 %까지 증대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내년도에 이 예산을 투입시켜서 지금 개별중소기업을 몇 %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별기업의 정보화가 되어야 대기업하고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申鉉泰委員**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자료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베이스화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것을 하는 것에는 저도 반대할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절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 질의는 조금 전에 산자부장관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 다음 존경하는 李洛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을 비

못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토요일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다 듣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45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위원장님, 아까 丁世均 간사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委員長 張在植** 예, 자료요구 하세요.

○**金元雄委員**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교부에 2000년도 광역시·도 건설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역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계획, 또 이와 관련한 기획예산처와의 사업내용 협의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건교부의 해외건설장기 미수급현황과 회수방안, 그 다음에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와 이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 지하철건설의 원래 계획, 그리고 수정된 계획, 수정경과와 수정이유 등을 자세히 명기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현재 논란 중인 각종 댐, 영월댐이나 이런 댐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갯벌의 가치에 관한 해양수산부의 자체연구자료와 아울러서 다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학자들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에는, 최근의 상황인데 울산방사능 주민오염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과학기술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사퇴 관련 진상 및 사태진전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방사성 원자력 관련법규에 미비점이 많이 있는데 이 미비점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농공단지과 분양된 농공단지 중에서도 이미 휴·폐업 상태에 있는 실태를 자

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자연휴양림 운영결산서 최근 3년 동안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번 경제관련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고하고자 하니 되도록이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文洙委員**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석간에 보니까 ‘陳 稔 재경부장관이 9일 李漢東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최근 지역경제동향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부산이 제일 높고 부도율은 대구가 제일 높고 소비증가율은 광주가 최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陳 稔 장관님께서 보고하신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실 수 있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제가 보고한 것은 아닌데 그 보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통계청 자료인지 확인해서…… 저도 이상해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이것 誤報네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金文洙委員** 하여튼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雄委員** 재경부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적자금 상황에 따른 국민 담세율 연도별 상승 예상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 沈揆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揆喆委員** 沈揆喆 위원입니다.

먼저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기업의 경영책임자 중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낙하산 인사에 의해서 경영책임자로 취임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해결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98년도 2만6,000원 하던 주가가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1만2,000원으로 떨어

진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헐 값에라도 주식을 매도해서 민영화를 강행할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도 관련되는 일이라는 합나다마는 아울러 3만 잎담배 생산농가가 담배 제조독점권 폐지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잎담배 생산농가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담배 제조독점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질의 때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서면으로 된 관계로 제가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중에 공적자금 조성액 및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조로 9조5,000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 근거로 연 9.5%의 이자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 이자율을 전제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 2001년도 시중금리 전망에 대해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건교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SOC 투자예산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SOC 투자만큼은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이더라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마냥 늘릴 수도 없는 것이므로 낭비요인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공사 하나에 설계변경이 평균 이삼 회 되어서 저가낙찰을 받아도 결국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원 공사비 이상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SOC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OC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기가 5년, 10년 단위로 장기화되는 공사의 경우에 그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정부고속철도의 경우 애초에는 5조 몇천억원의 공사비가 드는 그런 공사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는 마냥 늘어나서 20조원 가까이도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 사업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는지 그 실정을

한 번 밝혀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그때그때 설계변경해서 5조가 20조로 되고 이런 사태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용수배분량을 전주권을 1일당 135만 m<sup>3</sup>, 충청권을 1일당 43만 m<sup>3</sup>로 정한 것은 전주권 인구나 대전 청주권 인구비율을 볼 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은 배분계획을 수립한 이유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금강 및 대청호의 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국고지원이 주된 재원이었던 토지초과이득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므로 목표연도까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교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체산업 창업지원, 신년도 예산요청을 한 것을 보면 대체산업 창업지원이 200억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 600억원, 농공단지 지원사업이 530억원, 지역사업 진흥사업이 600억원, 패션어패럴 밸리조성 사업에 43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해서 전면폐기 또는 통폐합의 방향으로 재편성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설립과 산업입지는 시장전망이나 산업인프라, 환경규제,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의 저금리 용자 유인책으로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입지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용자특혜 방식의 산업지원을 지양하고 산업입지와 외국기업 유치에 조장하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을 보았고 답변내용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농공단지의 경우에 미분양 또는 부도로 인해서 휴·폐업 중인 업체가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마는 따라서 농공단지의 신설보다는 기존 단지

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지방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은 민간연구소에 대한 연구보조에 국한하고 생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보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원규모도 매우 빈약해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이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자부의 산업기술 지원사업에서 첨단기술, 벤처기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섬유, 신발 등의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임도건설사업으로 153억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건설사업은 저도 지역구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임도건설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나 육림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임도건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산불방지와 육림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도입으로 4억6,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을 때 과연 산불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지 또 그것이 얼마 만큼 빠른 산불대책에 도움이 될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보고 대사 재조명 사업으로 내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으로는 적당치 않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문화관광부 예산심의 때 이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서 거의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한 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장보고 대사 재조명사업은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시켜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어민과 어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浩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委員 李浩雄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항만공사는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과 인천의 항만공사는 2001년에 예정대로 추진되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부산은 지금 1단계 실시협약을 맺고 내일 모레 계약이 다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착공이 되게 되어 있고 인천의 민자사업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2001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인천항은 준설을 위한 호안공사…… 미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러세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항만정책에 관해서 인천항이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고 북한과의 교역확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도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인천 북항 및 남항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장관님도 동의하시겠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李浩雄委員 존경하는 閔鳳基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북항개발 관해서 203억을 요구했다가 109억으로 깎였다고 그러는데……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은 준설비용하고 준설토를 매립하기 위한 호안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호안공사를 먼저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준설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기획예산처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1년 안에 호안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호안공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준설사업하라고 해서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李浩雄委員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점은 예산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李浩雄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국제카페리션社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천과 북중국과의 정기 컨테이너 노선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국제카페리호는 운임이 700달러이고 정기컨테이너를 신설할 경우에는 200달러 내지 300달러로 예상되는데 수도권과 북중국간에는 물류비부담으로 인해서 보다 더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데도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해양수산부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항로를 완전히 자유화해서 개방하지 않고 카페리를 운영하면서 항상 중국과의 사이에 합작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당장 개방했을 경우, 합작이라는 것이 중국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 그렇게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부권 물량이 광양이나 부산으로 돌아서 다시 중국으로 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평택항에 컨테이너선의 취항을 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서, 저는 취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李浩雄委員** 인천에서의 정기 컨테이너 노선 문제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다음 건설교통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까지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조금 있다가……

○**李浩雄委員** 제가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건설비용으로 2,387억원, 관리비용으로 1,360여억원이 들었다고 건교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99년말 현재 통행료수익이 4,594억원으로 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합한 것보다 817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李浩雄委員** 그러면 올해 통행료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대충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2000년8월까지 1일 이용대수로 계산해 보면 연 475억의 이용료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억 가까운 수익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李浩雄委員** 지금 수치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올해 관리비용을 빼고도 상당한 액수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최근까지 발생한 경인고속도로의 수익만 해도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인고속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퇴근 시의 경인고속도로의 정체상황이 얼마 만큼 심각한지 차관님, 그 시간대에 한번 차를 타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李浩雄委員** 최근의 일이 아닌데, 그러면 가장 가까운 시간에 경인고속도로로 출퇴근 시간에 통행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저의 경우에는 조금 오래 되어서……

○**李浩雄委員** 보통 러시아워에 인천지역에서 서울까지 출근차량이 20km를 가는데 1시간30분이 걸립니다. 정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고속도로라고 그러지를 않고 주차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체가 심한데 고속도로라는 말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급하게 직행해서 빨리 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고속도로 건설·관리비용을 상쇄하고도 많은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통행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경인고속도로 단일노선 하나만 보면……

○**李浩雄委員** 그러면 부당한 것이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李浩雄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지역에서 YMCA 등 시민단체들에서 통행료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李浩雄委員 유료도로법 3조 유료도로의 설치, 1항1호를 보면 유료도로는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라고 규정했고 2호에는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라고 규정한 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이용자들이 현저히 이익을 받지도 않고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상황에서 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지요. 서울 서북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한 도로입니다. 다른 대체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규정을 여기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지금 경인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으로 접근하는 길이 현재 있는 경인고속도로 이외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물론 그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 우회해서 뭐 이렇게 한참 뱅 돌아서 가려면 갈 수도 있지요. 통하지 않는 길이 없는데 그것과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논쟁은 안 해도 좋아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같은 법 9조2항을 보면 「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상환주의원칙을 징수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이미 건설관리 비용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라도 통행료를 마땅히 폐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일노선에서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다른 노선에서는 지금 말씀하는 그런 것과 정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산정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알겠어요. 그 반론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근거로 유료도로법 제9조3항의 통합징수권을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李浩雄委員 그런데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통으로 동등하게 이용하고 상호 대처가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합징수의 원칙과 의미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대부분이 특정지역 즉 인천지역, 부천지역 이쪽 지역 시민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통행계획에 통합징수권을 내세워서 계속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그렇다고 해서 서울하고 부산간에 또 다시 고속도로를 새로 더 넣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통합산정 방식에 의한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浩雄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는 최근에 개통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쪽에서 순환고속도로로의 이용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 쪽에서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시에는 통행료가 없어요. 지금 이 정책결정이 전부 서울중심으로 되어 있지 인천이나 그밖에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 시각을 서울에서 바깥을 내다보지 그쪽 지역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정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면 아주 오래 공부 안 해도 그 부분이 한 눈에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경인고속도로는 9조3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신갈을 거쳐서 수원으로 가려면 거리는 43.4km에 불과한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3,6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내려 가려면 31.2km에 1,300원이에요. 이것 거리상으로는 불과 한 12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금은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수도권 주민들 특히 인천시민들이 형평성에 맞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점들도 같이 연구해 주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李浩雄委員 91년도 건설교통부 공고 104호를 근거로 수도권에 지금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李浩雄委員 그러나 다른 고속도로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독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신갈-안산 고속도로 구간에는 수도권지역 할증

료 200%를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연말경에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李浩雄委員 아,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책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 이거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李浩雄委員 그 용역결과도 예결위나 다른 상임위 상관없이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멍멍백백한 사실들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누가 힘있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냥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이번 계기에 다 고치셔야 됩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할증료제도는 전국적으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런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조사해 보시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현재 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지금 하고 있다고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제가 다시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그 부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의 시발점이 연안부두 쪽이고 경인고속도로의 시발점은, 인천 연안부두 쪽에서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제2경인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연안부두 쪽 시점을 서해안고속도로로 하고 있고…… 지금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겠군요.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나 하면 요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시발점 지역을 합당한 데 선정하지 않고 더 안으로 선정해서 짧은 거리에, 그러니까 인천 연안부두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신갈인터체인지까지 나가는데 요금징수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 무려 세군데나 있는데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다 조사해서서

형평성이나 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고치셔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종합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리고 제 시간이 끝나서…… 인천 공항 2단계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겠지만 서면으로 이것도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榮卓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卓委員 尹榮卓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세 분에게 대구 포항광역권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포항영일만 신항건설에 대해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그 중에 재정자금이 6,500억, 민자가 6,200억 해서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92년부터 2001년까지 겨우 10년 동안 2,300억 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없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차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尹榮卓委員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건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포항간 신산업도로가 98년도 착공되어서 2002년까지 완공토록 대통령께서 와서 치사까지 하고 틀림없이 조기에 완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002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년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의 지난 4년 동안의 예산배정을 보면 1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불과 3,500억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2004년은 커녕 2010년이 되어도 완공될까 말까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현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투자속도가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량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시급함이……

○尹榮卓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변명이고 그 다음에 산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해양수산부장관한테 포항 신항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포항 신항만이 지난 98년도에 대통령이 산업도로건설을 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포항 신항만 주변이 그야말로 환동해권의 경제의 중심체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 포항의 테크노파크, 경산의 경북테크노파크, 대구의 대구테크노파크 해서 15개 대학의 12만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메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철강생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포항제철과의 연관산업은 물론이고 구미, 대구, 포항을 연결하는 공업벨트 등 기타 이 지역의 잠재력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북의 소위 말하는 UNDP가 추진하고 있는 300억불에 해당하는 두만강개발계획 또 나진·선봉의 자유무역지대의 70억불의 개발계획, 또 원산만 개발계획, 그 다음에 시베리아의 천연자원 등을 포함한 이 지역의 개발 잠재력과 이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군산에 지적인 자유무역지대가 설정이 안 되겠다 또 군산만해도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해서 금년도에 1,200억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대통령이 오셔서 자유무역을 하고 또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포항권의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개발 즉 테크노벨리를 조성하고 하는 문제는 포항시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또 포항공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각 지역별로, 광역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개발을……

○尹榮卓委員 장관, 그런 말씀은 여러 번 들었는데요,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98년도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떤 특정지역을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군산에는 금년에 벌써 1,20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SOC예산 배정에 원칙이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전철사업의 기본조사비가 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남선전철화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서 250억, 공사착공예산으로서 450억이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가 아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책정하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설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주공항 건설관계입니다. 시민들이 모두가 반대를 하는데도 금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또 내년도에 50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10년간에 걸쳐서 2,000억밖에 투자하지 못하면서 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못 하느냐 이런 점에서 좀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세 부 장관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전에 대구 기계금속연구센터에 대해서 朴鍾根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기계·금속 부문은 대구 업체의 43%, 종업원수의 41.9%, 수출은 100억불을 했습니다. 생산액의 거의 40%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기계·금속 부품 연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대구시에서는 8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간의 예산이라도 꼭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산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榮卓委員 그 다음에 자꾸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노태우 대통령 시대는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라서 서해안 시대를 연다고 해서 서해안 쪽에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쪽의 SOC예산이 거의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산업도로라든지 포항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구지하철의 1호선, 2호선…… 타 지역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미 건교위



원회에서 다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더 확실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산자부장관에게도 정책질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 재활용품 사용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놓았는데도 정부기관에서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구매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폐기물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만 몇 %라도 구매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라고 할까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품질이 나쁠 때는 할 수 없지만 조달품목으로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장관,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공공기관 구매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尹榮卓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長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長燮委員 吳長燮입니다.

재경부 어디 가셨나요? 좋습니다. 사실 재경부장관이 계셔도 총리나 대통령께 드릴 말씀인데 지금 구조조정이 원칙대로 안되고 또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없다 하는 문제라든지 사정 예외 없다든지 등등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민으로부터의 안정적인 투자의욕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관계에 있는데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경제 악순환을 걱정해서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시행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고 경험이 많으신 재경부장관께서는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BIS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려놓아도 상환가능성이 없는 워크아웃 기업체들끼리 투자했을 경우에 이것은 정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아

니냐’ 하는 우려도 하고 있고 또 요즈음에 비축자금을 30대 그룹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금융사고, 예전 권력자의 아들이 하는 기업이 또 자금 펀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룹들이 요즈음에 산채 발행하는 기점을 보고 산채를 사겠다는 쪽으로 자금을 동결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경제가 악순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룹들이 자금을 수천 억, 수조원씩 가지고 있다 그러나 풀지 않고 있다, 또 IMF 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 기업은 망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어서 중소기업 내지는 하도급까지 어려움이 오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처장관 안 나오셨지요? 예산처에서는 과장급 이상도 안 나왔나요? 이렇게 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SOC사업 관계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SOC부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겠습니까마는 지금 상임위에서 2조 정도 예산 추가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 건설상임위에서 예산요청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2조는 터무니없이 많이 요청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SOC부문은 악순환되는 국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문으로 도로사업, 치수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정말로 증액시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즈음에 토지특별회계가 토지관리라든지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렇다고 해서 토특회계부문, 모든 투자부문을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처에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최소한도 1조 정도라도 투자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제악순환의 고리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예산처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나 치수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아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에 사회에서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

고 또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에 정치권을 보면 전부 영남·호남 얘기만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영남·호남만 있습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애를 느끼고 있고 또 정권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균형있는 예산배정을 예산처에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 개혁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면 33개 주요 공기업 빚이 무려 400조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1년에 101조, 공적자금 150조, 일반 공기업에서 1년에 쓰는 돈이 약 100조 이상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물가지수라든가 경제순환지표의 줄거리를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부처에서 관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의하고 서면으로 내용을 질의할 테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그동안 보면 지금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산업단지라든지 국가단지 등등이 거의 어떤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 부분은 골고루 배정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텐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그마한 예를 들면 영세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 같은 것이 지금은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98년, 99년 그동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는 없습니다. 40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처에서 다 깎아버렸어요.

이 부분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교특회계자금을 가지고 토적으로 500억이고 1,000억이고 전용해서 지방자치에서 갈구하는 영세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처에서 누구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허공을 보고 질의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도 나와 있고 철도청장도 나와 있지요? 鄭鍾煥 철도청장은 거기에 앉아있기가 얼

굴 뜨거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鐵道廳長 鄭鍾煥 장항선이 조금 부진합니다.

○吳長燮委員 장항선은 부진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없애버려요.

1조2,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6년 동안 1년에 100억씩 해 가지고 100년을 할 것입니까? 이런 정부예산 책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것 아닙니까? 호남진철은 2007년까지 했다가 2004년으로 앞당겨 놓고 장항선은 착공한 지 6년이 되었는데 1년에 100억씩 해서 600억 투자해 놓고, 그러면 1조면 100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슨 형평의 기준에 의했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교부 답변해 보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

○吳長燮委員 답변 못할 것입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1년에 100억씩 해 가지고 1조2,000억이면 100년을 해야 돼요.

○鐵道廳長 鄭鍾煥 위원님, 간단히 참고적으로 설명을……

○吳長燮委員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답변할 양심이 있습니까?

○鐵道廳長 鄭鍾煥 위원님,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의 협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초기단계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설계가 금년 6월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吳長燮委員 사오년 동안 했는데 왜 이제 설계가 끝나고 1년에 100억씩 해요? 올해 설계가 끝났으면 내년도에 1,000억이라도 넣어야지 100억 넣으면 됩니까?

○鐵道廳長 鄭鍾煥 그래서 저희가 2002년 이후에는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吳長燮委員 집중적으로 해봤자 3,000억을 넣겠어요, 5,000억을 넣겠어요?

○鐵道廳長 鄭鍾煥 어쨌든……

○吳長燮委員 변명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년도에 1,000억이라도 넣어 보세요.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불쾌하다면 예산을 1,000억이라도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세요.

그 다음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관계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관해서도 지금 전북과 충남의 경계인데 군산지역은 약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충남은 이제 약 2% 했어요. 건교부에서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요.

농가부채 관계는 하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어제 제가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장관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각 부처에서 농민이나 농촌을 위해서 어떤 국책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위로라든지 국무회의에서 농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 내지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분도 온 분이 없습니다.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농촌이나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붕기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이런 대책을 앞으로 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래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흔히들 농촌에서 농업경영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돈 벌려면 정부시책에 반대로만 하면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산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한 3분의 1쯤 뚫렸습니다. 그런데 아산만단지는 솔직히 광양만이나 포항제철보다 여건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군산까지 이어지는데 충남에서 정보화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고 이미 국내 전자정보 쪽에서는 가장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면도 꽃박람회인데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어제 민자유치 10억불을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도지사가 10억불을 계약해 가지고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영목항 건설관계는 1종, 2종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吳長燮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한 데 대해서는 관계장관께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元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雄委員**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만금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목적이 식량확보를 위한 농지조성이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그렇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를 확보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매립된 지역이 산업용지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최근에 대단위로 매립한 것은 서산지구하고 김포지구인데 서산은 지금 농업용으로 100% 활용되고 김포매립지는 지난번에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지기반공사가 그것을 매입하고 앞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농업용지로만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비용 중당은커녕 막대한 적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일부분을 산업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元雄委員** 농림부에 그런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서 검토를 하고 있지요? 국토개발연구원의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국토개발연구원이 농지기반공사에 제출해서 농지기반공사가 지금 농림부에……

○**金元雄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출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도 농지가 아니라 이렇게 산업용지로 바뀔 전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새만금 현장답사를 통해서 유종근 지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유종근 지사가 분명히 산업단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에서도 똑같이 산업단지로 해야겠다,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또 98년도 지방선거공약이나 그 이후의 취임 도정방향제시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최소한 전북도와 중앙부서가 합의를 해서 단일안의 목적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인 농림부가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金元雄委員**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끝까지 농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때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사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세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저는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끝까지 농지로 활용한다고 할 때 지지한다고 보세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지금 전북도지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전북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주민들이 뽑은 전북지사가 분명히 장관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전라북도는 보상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뿐이고 개발은 중앙정부인 농림부가 하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새만금 내부 종합개발계획 실행연구」라는 용역을 주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그것은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金元雄委員**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농림부에서 동아측이 농지전용을 요청했을 때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김포매립지를 정부가 매입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이곳을 농업용지로만 개발할 경우에 개발이익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 1년 사이에

검토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모든 시의원, 도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군수, 도지사 전부 다 뭉쳐 가지고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농업용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金元雄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의 목적을 전라북도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의견이 합치가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다음 문제 묻겠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제가 오래 전에 전북지사를 제 방으로 불러서 산업단지로 전용하는 것은 일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金元雄委員**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미 예산 및 사업진척도가 6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어제 갔더니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99년 현재 1조251억원이 집행되었는데 토지보상, 어업권 보상 등 4,500억을 지출하고 실질적인 건설사업비는 7,000여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산할 때는 8,200억원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해서 지금 현재 2조2,000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것이 내부개발비인 4,800억원은 91년도부터 불변가격으로 계속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아닙니다. 99년에 조정을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얼마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이것이 전체 해보면 약 3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감사원 98년도 감사에서 농지조성을 위해서 내부개발비가 3조6,6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6조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감사원이 잘못 계산한 것입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감사원의 보고서도 물론……

○**金元雄委員** 지금 감사원에서 말한 6조원은 확실하지요?

농림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고 내부 불변가격으로 계속 남겨두었다가 얘기가 있으니까

바뀌 놓고…… 감사원 얘기가 더 합리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환경부가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건설관련 비용으로 9,700여억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金 위원님, 저도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농림부가 금액을 줄이고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金元雄委員 하여간 그 말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자료, 환경부의 자료를 합치면 약 7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사업비는 7,000억원이거든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이대로만 얘기하면 원래 계상된 예산 중 지금까지는 11%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라북도의 유종근 지사나 부지사나 시의회나 구의원이 전부 다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복합산업단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복합산업단지로 만들려면…… 간척지벌에다가 건물을 올리면 갯벌이 가라앉기 때문에 보통 5m 정도의 흙을 돋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용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무려 28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복합산업단지로 할 경우 지금 현재 투입된 사업비는 단지 2.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추가답변 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관님,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재 만경호 수역의 오염도를 보면…… 여기 만경호 수역, 금강호, 시화호, 아산호 쪽 나와 있는데 만경호의 클로로필 평균치가 그동안에 가장 나쁘다고 평가되었던 시화호보다 훨씬 높습니다.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녹조현상과 연결되고 물이 썩느냐 안 썩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金元雄委員 이것은 정부자료인데 지금 만경호가 시화호보다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지금 만경호는 COD가……

○金元雄委員 BOD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로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외국에서도 호수의 오염도를 측정할 때 BOD로 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호수의 물이 썩느냐 안 썩느냐

나 해서 호수의 품위를 정할 때는 클로로필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만경호가 해수로 진입하는 시화호보다 클로로필이 훨씬 높거든요.

이것이 시화호입니다. 시화호의 항공사진인데 시화호댐을 막아 놓았더니 이렇게 새카맣게…… 하늘에서 보아도 먹물처럼 까맣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댐 만드는 데 5,000억 든다, 그리고 수질개선비로 5,000억 해서 1조만 들이면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런데 1조원을 투입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시커맣게 먹물이 되어서 결국 풀어서…… 댐을 열어 가지고 해서 다시 항공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경호가 시화호 주변유역보다 훨씬 더 오염 정도가 높는데 이것보다 더 큰 댐을 막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시화호와 새만금호쪽과는 근본적으로…… 金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화호 주변은 공업단지에다가 주택밀집지역이어서 환경부하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金元雄委員 만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축산폐수가 제일 많이 흐르는 곳이 만경호입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그리고 시화호의 경우에는……

○金元雄委員 아니, 객관적으로 클로로필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이 썩느냐 안 썩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수가 클로로필 지수인데……

○農林部長官 韓甲洙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金元雄委員 알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표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오염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오염한게 치가 바로 가운데에 있는 수치인데 지금 정부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만든 시나리오를 보면 환경기준치의 한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치입니다. 이것이 한계치라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농업용수에는 인이 문제가 안 됩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갖 수단을 다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전

주·김제·완주권을 그린벨트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그런 답변하셨지요? 여기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그린벨트로 묶는 것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金元雄委員 어쨌든 지금 그린벨트로 묶어서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또 환경부의 입장이 뭐가 있느냐 하면 총량규제 체도를 도입해서 더 이상의 산업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또 축산분뇨를 94.5% 줄이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금강호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금강호를 식수 정도로 돌리는 것은 괜찮은데 새만금호로 돌리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도 지금 그것이 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저희가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또 ……

○金元雄委員 이것 한번 보세요.

(도표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철새도래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철새의 반이 새만금호를 거쳐갑니다. 멀리는 뉴질랜드 호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시베리아까지 철새들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철새들의 이동경로에 새만금호가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철새도래 가운데 간척지가 제 1번부터 7번까지 제일 많이 도래하는 지역입니다.

○金元雄委員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金 위원님, 저에게 전체를 죽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갯벌의 가치나 해양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여러 개의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검토되어 확

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새만금을 짚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갯벌의 가치와 농지의 가치를 비교한 몇 가지 연구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갯벌의 효용가치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관련부처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해양수산부 자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그 종합된 내용이 단일한 안입니까, 연구결과와 자료적 성격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연구결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분명한 입장이 안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도 됩니까? 이것은 확정되기 전까지 추진하면 안 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해양수산부……

○金元雄委員 그것은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인데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의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평가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는 광역도시 지하철건설의 향후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논란 중인 남강댐, 영월댐, 한탄강댐의 건설비용 책정의 필요성 또 신차 충돌 조사연구비 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자부에는 각종 저금리 용자 유인정책사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에는 방사선관련법규의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사업의 예산이 꼭 필요한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金一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元雄委員 위원장님, 10초만 더 주십시오.

○委員長 張在植 뭐 하시려구요?

○金元雄委員 제가 새만금문제에 대해서……

○委員長 張在植 진작 하시지 왜 이제사 시간 다 끝났는데……

○金元雄委員 간단히 이것만 할게요. 마이크 좀 넣어요.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빨리 해요.

○金元雄委員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광주시 북구에 있는 ‘사랑의 시튼’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낸 것인데 여기에 새만금호를 살려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낸 서명이 있습니다. 이 서명 중에는 많은 수녀님들이 서명을 했는데 여기 서명한 내용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서 저희와 함께 새만금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金一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潤委員 지난 12월6일의 경찰인사는 현 정권의 후안무치 편중인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위 공무원 발탁 기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이 모두 위조, 변조되어 떠들석할 정도의 특정지역 특정인물이었기에 그야말로 오죽하면 거의 모든 언론이 편파인사, 독식인사를 비판했고 여권 내에서까지 강한 자책문이 제기되었겠습니까?

결국 초고속 승진한 朴金成 서울경찰청장은 임명 3일만에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행정부,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군부 등 힘있는 자리는 물론이고 공기업, 방송사, 심지어 카지노까지 호남인사가 독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숫자상 인사균형이라는 케변에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중인사, 낙하산인사로 공무원 사회 및 관련 공직 곳곳에 상호 반목과 불신이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 정부의 인사편중은 전 국민의 공론된 사실이라서 여기서 숫자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투자편중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도로예산의 경우 각 지방국토관리청별로 지난 현 정권 3년간 국도 건설예산을 비교해 보면 부산청과 대전청, 원주청은 65% 정도 증가했는데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익산청은 2,899억에서 9,069억으로 무려 214%나 증가해서 한 마디로 예산을 갖다 퍼붓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둘째, 철도사업은 더욱 심해서 점입가경입니다.

현 정권 출범한 9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호남지역은 6,58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비해 영남은 단 2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호남은 3,204억원인데 영남지역은 불과 50억원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철도예산은 호남에는 무조건 주고 보자는 식이고 영남에는 원천봉쇄해서 무조건 안 주고 보자는 식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셋째, 고속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이남간을 98년 집권하자마자 1,310억원을 추경예산에서 몽땅 빼버린 이후 4년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이남 구간은 취소하라는 것입니까,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2004년부터 하겠다 그러는데 이 정부가 2004년 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레놓고 호남고속철도 신설하겠다고 내년 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으니 누가 이것을 보고 지역간의 골을 더 깊이 파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지에 이어서 다음은 바다 쪽을 한번 살펴 봅시다.

내년도 예산안에 항만건설 예산을 보면 부산항은 28.8% 줄이고 구룡포,후포항도 줄인 반면에 목포항은 18.7% 늘렸고 완도·여수항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신항만의 경우도 부산신항은 겨우 0.5% 늘린 반면에 광양항은 20.6%나 늘렸습니다.

또 공항건설 예산을 보더라도 대구, 포항, 김해세 공항을 모두 합친 내년 예산이 748억원인데 비해서 무안공항 하나만 752억원입니다. 또 전주공항은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모두 반대하는데도 죽기살기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딱한 일입니다.

하늘, 땅, 바다 할 것 없이 이처럼 모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닥치는 대로 특정지역으로 몰리고 있으니 본위원은 이것이 무슨 불가사리인지, 블랙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대통령 출신 지역 인맥의 편중인사, 편

중투자를 굳이 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 출신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집중 투자해야 할 사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편중이라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이렇게까지 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지적한 것 외에도 경주 경마장 건설 중단, 감포 관광단지 건설 중단, 화물터미널 중단 등 영남지역에서 몇 정권에 걸쳐 수년 동안 일괄되게 해왔던 국책사업들을 왜 굳이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결같이 중단하고 취소하고 빼돌리고 눈에 두드러지게 지역차별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서화합, 영호남화합 하자는 말은 도대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격동의 새 세기, 이 어려운 시대에 국가경영 총책을 맡고 계시는 현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가로 끌어 올릴 우리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을 말끔히 청산하고 온 국민의 국력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긴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교부장관, 철도청장!

이러한 극에 달하는 지역편중 비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골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건교부장관과 철도청장도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대구 이남 구간 용지비는 반드시 내년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남아있는 용지비 중에서 158억원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했지만 지금 감정평가가 다 끝났고 매수가 본격화 되어지면 내년 초에는 모두 소진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교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살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고속도로의 경우도 영남권은 사업이 너무 미진합니다. 내년예산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의 기본설계비 30억원을 반영해서 부산·울산 간에 이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경주 감포댐은 이미 98년도 설계를

끝낸 상태입니다. 2년 동안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설계비를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이 지역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 일대의 유일무이한 생명대책입니다. 착공예산을 꼭 반영해서 이 공사도 착공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 철도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해남부선의 울산-경주-포항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은 고속철도 경주역과 국철 경주역을 통합시킬 뿐만 아니라 선로의 이설과 새선로연결 노선상에 수년이 소요되는 문화재발굴 등 해야 할 일이 매우 많고도 중요한 사업이기에 내년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또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은 부지매입까지 진행하고 있고 포항-삼척간도 타당성조사 중인데 동해남부선의 가장 중심부분인 울산과 경주-포항 구간은 왜 빠 버립니까? 양쪽 사업만 진행한다는 것이 언어도단 아닙니까?

철도청장, 도대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착수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면서 충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委員 宋錫贊 위원입니다.

저도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15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金一潤 위원님께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편중예산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한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영남지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방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반산업이 많이 추진되었고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지역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30년 동안 투자해 온 지역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지역하고 같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영남지방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국토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98년도 익산청 같은 경우는 약 6,700억인데 비해서 부산청 같은 곳은 1조1,900억이고 99년도에는 익산청은 9,000억인데 비해서 부산청은 1조3,80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익산청은 1조1,000억



니다마는 부산청 같은 경우는 1조4,900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편중예산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대전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치상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편중예산 등을 비롯해서 야당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날 30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또 다시 연장선상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의 내국세는 금년 예산대비 25.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경제 상황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 증권거래세의 세수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 대비 10.9% 증액된 소득세와 실적대비 19%, 예산 대비 66.7%가 증액된 법인세는 원자재가격의 불안이나 최근의 경기동향으로 보아 기업 채산성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세수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 것이고 또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금년 하반기의 추세가 당분간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세입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대덕연구단지는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이고 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덕밸리는 우리나라 첨단과학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8일 金大中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에 대덕밸리 선포식을 가졌고 11월3일에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대덕밸리에 입주해 있는 첨단 벤처산업 종사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다목적 문화체육관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연구단지에는 대덕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수영장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스포츠센터건립을 지역 연구원들께서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존경하는 宋錫贊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환경 특히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등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있는 시설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노후되기도 하였고 또 용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새로 고도화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제여건을 감안하면서 장기안목에서 저희 자신도 말씀하신 대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에 계신 宋 위원님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宋錫贊委員** 지금 민자유치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접근이 안됩니다. 연구단지 그쪽은 어저께 제가 행정자치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과세액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전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연구단지가 위치한 유성구 같은 경우는 1년의 지방세입이 146억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로부터 재정교부금 받는 것이 100억 조금 넘기 때문에 이백육십억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러려다 보면 가용자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자운대, 군부대, 국립묘지, 교도소 그리고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8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를 1년에 징수하는 것은 106억인데 비과세로 되어 있는 것은 234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면적의 약 8분의 1정도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지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도시기반 시설은 정부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간차원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전조치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연구단지 내에서 1년에 중학교 졸업생이 1,200명입니다.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 하나 대덕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400명밖에 안 돼

요. 적어도 800명 정도가 다른 곳으로 원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학군이 광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거리를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연구단지를 보면 연구원 혼자 있고 자녀들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공부시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이라든가 문화여건은 적어도 정부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광역시라든가 교육부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예,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짓는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17일에 건교부 고시로 유성구 문지동에 1만4,000여평의 부지를 인문계 고등학교의 부지로 지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어떤 사립학교재단에서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이해당사자간에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진척이 되지 않는 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해야 될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 등등 하여튼 아까 종합적으로 대전의 체육문화시설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고등학교 설치문제는 저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宋 위원님의 도움도 오히려…… 제가 지적하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꾸로 저희도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장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쳐서 적은 자원이지만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게 해 갈까 합니다.

말씀하신 여러 상황은 바로 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되는 다른 정부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錫贊委員** 예, 알았습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감사합니다.

○**宋錫贊委員**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과 연계해서 진입로 확장공사가 신탄진도 이루어지고 있고 남부진입로 확장공사도 이미 9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님과 재정경제부장관님께서도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이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조금 있으면 식량위기가 오고 그리고 식량전쟁이 옵니다.

우리는 지난날 미국사람들이 새마을사업 할 적에 밀가루 언제까지나 그냥 줄 것으로 알고 밀농사 짓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요즘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고 더구나 식량 자급자족률이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70%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 식량에 대한 대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 전국에 걸쳐서 골프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다나카 수상에게 화살이 빗발치듯 소리가 나니까 다나카 수상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1세기에는 식량위기가 오는데 식량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는 골프장을 조성하고 그 때에 가서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작물을 심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인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3,000개의 링교(林業)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하니 안 하느니 포기하느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질관계도 그래요.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시설을 해가지고서는 이 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봤을 적에 답답합니다. 앞으로 소신껏 좀 해주세요. 그리고……

○**農林部長官 韓甲洙** 宋 위원님, 변명이 아니라 국무위원한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장관이 질

질 끌려다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장관들도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지 않습니까?

○宋錫贊委員 장관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으니까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 참고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유통구조를 보면 이 생산자는 생산자들대로 곶탕 먹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생산자가 농산물을 출하할 적에 도매시장이라든가 공판장에 내면 경매인이 있습니다. 경매인 밑에 중도매인이 있고, 중도매인 밑에 소도매인이 있고 소도매인이 이런 상인들한테 팔아 가지고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적어도 4단계 내지 5단계를 거쳐야 소비자 손으로 들어가기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곶탕을 먹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 밀종자를 구매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전혀 시험 재배한 것도 없고 종자를 개량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리라든가 밀이 우리의 주곡이었습니다. 미국사람이 밀가루 그냥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주곡인 밀농사를 포기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 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밀가루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 밀 종자개량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답변하세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새만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은 국가기능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약 4억t 정도의 쌀이 생산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즐겨먹는 중단립종 자포니카 타입의 쌀은 약 4,000만t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 200만t 정도가 교역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쌀 생산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한 5% 정도의 감산이 이루어진다면 쌀값이 한 3배로 튀게 됩니다. 과거에 7·80년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의 자급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쌀 자급을 하려면 최소한도 100만ha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10년 동안에 농지가 약 20만ha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공공시설 건설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해서 적어도 10년에 15만ha 정도는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반드시 새만금사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화호의 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수질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는 정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의 물관리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연초에는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만금사업에는 이미 1조251억원의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친환경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나 네덜란드라든가 해외 모든 개발지구를 직접 수 차례에 걸쳐서 시찰해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일부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소상한 내용을 설명 말씀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통구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매인·중도매인·소매상 해서 3단계 내지 5단계 유통구조가 있어서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유통개혁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1기 농정, 2년 반 동안은 농정에서는 유통시설 확충에, 하드웨어 확충에 노력을 해서 가령 98년에 3,300억 정도의 유통예산을 금년에는 9,000억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유통시설을 확대했고 또 생산자·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도 97년에 5%에서 지난해에는 15%, 올해에는 18%까지 올리고 2002년에는 3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정부 2기 농정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중간 유통마진, 전체로 보면 국민의 정부 1기에서 57%에서 51%로 마진이 한 6% 떨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줄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통개혁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라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도 계시고 저희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밀 부분은 우리밀생산본부를 두어서 우리 밀 종자를 개량하고 우리 밀 재배를 확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외국 밀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해서 지금 우리밀생산본부가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아쉽지만 이런 노력은 오히려 쌀이나 이런 데다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宋錫贊委員**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안 들을테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밀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유성구 살림을 맡으면서 식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논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파종할 때 승낙을 받아서 밀과종과 보리파종을 유성구에서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은 ‘당신네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밀과종과 보리파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리 같은 경우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밀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 종자를 구하러 갔는데도 종자가 없어서 강원도에 가서 종자를 구해왔는데 역시 개량이 되지 않은 옛날 묵은 종자이기 때문에 수확기가 늦어져서 7월초에 수확을 하는 바람에 장마철로 인해서 아주 낭패를 당해서 더 추진을 못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농촌진흥청에서 종자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경지정리를 해놓은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 투자한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겠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지정리해 놓았는데 10년, 20년도 안 되어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장관님, 잘 참고하시고 宋錫贊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在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李在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기획예산처에서 나왔지요? 본위원이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정부 예산의 특징이 정보화예산이 각 부처별로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보화예산, 그 다음에 기술개발예산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성질별로 해서 부별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재경부 예산 중에 정책연구개발비가 28억6,700만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경부가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 예산을 보니까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한 개발 29억을 비롯해서 중요한 부분의 연구용역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 경제홍보비가 11억5,000만원이나 들어 있는데 사실 홍보할 기관도 많거니와 국내외 홍보자료 작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BRD 전대차관에 의해서 해외훈련비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IMF차관을 들여오면서 의무적으로 훈련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떠했으며 또 이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공무원 훈련을 해야 될 것을 얼마큼 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을 출자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DI의 평가에서도 투신사에 투입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신사의 구조조정자금 쓴 것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1,000억이나 출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을 내년 2,000억을 하기로 되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전에 이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내년 2,000억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기금 출연으로 961억9,500만원 약 962억이 투입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농가의 목돈마련저축 가입을 촉진하기 위

해서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간의 실적이 어떠했고 앞으로 이만큼 출연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특 진출금에 2조2,897억인데 재특 예수금 1조5,646억이 내년도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내역에 농가부담 경감지원 1,309억을 재특으로 처리했는데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면 과연 재특으로 할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 조사활동비 140억, 부과징수 자료수집비 160억, 국세부과징수 출장여비 383억 해서 총 683억이 소위 말하는 업무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산처리비용을 비롯해서 소위 科學稅政을 위해서 477억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더 과학세정을 해야지 그저 생각하면 투망식 조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조달청으로 물자비축국 사업인데 문화상품판로지원이라고 해서 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과연 조달청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것도 답변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부 예산 중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작년도도 303억3,000만원 또 내년에도 431억을 계상했는데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고 431억의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립남도국악원을 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3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이미 국립국악원도 있거니와 남원인가 어디에 또 하나 있고 FM방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24억 들여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오히려 FM방송 경상운영비 5억을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처에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문화관광부장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1도1미술관 건립……

○委員長代理 丁世均 李在昌 위원님, 오늘은 경제부처만 하거든요. 사회·문화분야는 다음에 또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이것은 예산처에다 묻는 것입니다.

1도1미술관 건립에 대한 예산도 2000년에 50억인데 2001년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인가, 실효성 없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나중에 예산처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가, 농촌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농림부문의 예산이 2001년에 8조5,983억원으로 사실상 본예산 대비 3.8%, 추경에 비해서는 2.8%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농촌, 농민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보전예산이 16.9%나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농가부채경감자금이 라든지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재해방지대책을 위해서 작년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때에 상습침수농경지에 대한 배수장시설에 대해서 3조5,800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예산에 보면 2,226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상습침수농경지 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방조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 하셨지만 본위원은 농림부장관께서 아까 친환경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물정화문제를 다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협통합에 따른 비용문제가 사실상 현재 계상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축협의 중앙통합으로 인해서 912억이 요망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중에 393억밖에 사실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축협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경영손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포괄보조사업비가 내년 92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괄보조금, 실적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지원방법이 적절한지 실적을 평가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농공단지와 농촌관광휴양차원의 여러 가지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 다하는 취지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먼저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건교부장관께 묻습니다.

SOC 예산은 더 투입해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증액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꼭 필요로 하는 증액분이 어떤 것인지 본위원은 하천, 도로에 대해서는 확충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합니다.

다음 한강교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교각이라든지 거더 등 여러 군데 하자가 생겼는데 왜 내년도 예산 83억을 계상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왜 이런 요청에 대해서 삭감 을 했는가? 안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깎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부예산 중에 지금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단 5억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난 11월회의에서도 결렬은 되었지만 불원간 이 문제는 국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孫泰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仁委員 孫泰仁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한국경제성장률에 관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때 陳 稔 재경부장관께서 답변을 통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전망되고 있고 한마디로 잿빛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경상수지에 관해서도 한국은행은 45억불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같은 데는 13억5,000만불 등 모든 연구기관이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재정규모를 좀 긴축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긴축재정기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 규모의 재정으로 어떻게 운용하는, 운용의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다음연도 재정운용 을 99년도의 중기재정계획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경제가 지금 파산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SOC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2만5,000여 지방 중소기업이 연쇄도산을 했습니다. 또 3,600여 지방소재 금융기관 이 점포를 폐쇄를 했습니다. 특히 대형 지방건설업체 부도와 하도급 업체 도산위기 등 총체적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OC 투자는 건설경기부양이나 실업 대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경제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 삶의 질의 차원을 높 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SOC 투자입니다. 아시다시피 SOC 투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SOC 투자의 증대만이 건설업체의 활성화와 지방경제의 악화원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SOC 투자를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교통세 세수증가율이 14%입니다. SOC 투자를 0.1%로 묶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지역경제와 연결된 건설사업 활성화를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반대로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SOC 투자문제를 민자유치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바닥인 이 마당에 민자유치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예산반영에 SOC 투자가 동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것인지 간단히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먼저 거시경제 전망이 나빠지고 있는데 긴축기조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한 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점과 상당히 달라집니다. 현재도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나 여러 가

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착륙으로 갈 때 예비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경제가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는 그 때도 긴축기조로 가야 할 것이냐, 재정에서 적정한 수요를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SOC 투자만 늘려서 지역경제 특히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SOC 사업 이외에 지방에 현안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바로 지방의 건설업체가 이주하고…… 지방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개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전방·후방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현재 조용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孫泰仁委員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증액된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 문제는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내부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형 SOC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孫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경제, 지역의 건설업체문제를 걱정하신다면 다른 대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孫泰仁委員 민자유치를 가지고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민자는 별도입니다.

○孫泰仁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교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SOC 투자동결은 교통부문 투자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1조3,527억원, 올해보다도 44억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물류비에 관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물류비를 GDP 비율로 해서 10%대로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감소됨으로 해서 국가경쟁력인 물류비에 대한 치명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지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류비가 현재 GDP의 16.5%인데 10%대가 바람직하긴 한데 이것이 급격하게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철도·공항 이런 SOC부문 투자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각종 물류정보망이라든지 이것이 다같이 한꺼번에 가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孫泰仁委員 결국 저의 말씀은 SOC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데 귀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호남선전철화사업에 관한 예산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6순위였습니다. 조치원-대구 전철화가 4위였고 호남선전철화사업은 6순위였는데 조치원-대구 전철화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혜성이다 편중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실시설계 과정이 무시된 상태에서 바로 실시설계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예산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서 전철화사업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특히 반송선의 경우입니다. 96년도에 이미 사업타당성이 돼서 건설계획이 발표됐고 99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올해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기획예산처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지하철 3호선은 수영선과 반송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영선은 벌써 공정이 35%나 되었는데 똑같은 3호선인데 반송선은 실시설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이와같이 똑같은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그 우선순위가 존중되지 않고 반송선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반송선을 자꾸 신규사업으로 분류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3호선이면서도 한쪽은 35% 공정이 이루어지고 한쪽은 지금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고 또 사업의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30만 서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반송지역은 10만 인구가 사는데 4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확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시에서도 재정부담에 관해서 자신 있게 건교부에 건의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대 국민에 대한, 대 시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미루어지면 정부가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반송선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관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반송선 문제도 부산시민의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현재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폭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재원조달 여력도 없었고 또 호남선과 비교해서 왜 여기가 더 늦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상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호남선의 전철화도 필요하고……

○**孫泰仁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균형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정부가 96년부터 계획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올해에 타당성조사가 끝난 것은 바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민들, 국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원 조달상의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孫泰仁委員** 지금 부산시의 재정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올해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2년 정도가 걸릴 텐데 부산시에서도 실시설계비의 반을 다 내놓았습니다. 또 2호선은 2002년에 끝납니다. 아시안게임도 2002년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재정부담을 부산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데도 여기에 관한 실시설계비마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

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申溪輪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溪輪委員**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처리를 못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한 내용이 2장 들어와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심의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중대한 일인데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는 말이었는데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기획예산처장관께 기획예산처소관에 질의한 내용 중 하나가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 여러 기관들의 퇴직금누진제 개선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때 219개 기관 중에서 210개가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96%가 완료되었는데 미개선 기관이 아홉개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원자력병원에서 ‘11월 월급도 안 주는 구조조정이 무슨 구조조정이나’는 내용과 더불어서 항의하는 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나와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여기는 타결이 잘 되었나요, 문제가 진행 중입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기관장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복합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11월 급여가 미지급되고 기획예산처의 지침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도 있고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니까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예.

○**申溪輪委員** 일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전체가 해결되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기관이 몇 개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합의만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고 구조조정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견도 있지만 상호에 대



한 신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이 직접 챙기십시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다음에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셨습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차관이 나왔습니다.

○**申溪輪委員** 어째서 산업자원부는 이 나라 산업의 중요한 중심 부서인데 11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아직도 퇴직금누진제 미개선기관이 5개 기관입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예, 5개가 맞습니다.

○**申溪輪委員** 다른 각 부처는 전부 해결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申溪輪委員**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협회, 대한무역정보통신으로 미개선기관이 다섯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홉개 미개선기관 중에서 산업자원부가 다섯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하기관이 많다고 해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노사분규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러면 장관이 다시 한번 독려해서 국회에서 우리 부만 미개선기관이 다섯개라고 지적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기관장을 불러서 협의해 보십시오. 장관께서 하나하나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곳은 노조를 타하기도 하고 기관장을 타하기도 해서 자꾸 독려해서 이 문제는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누진제 개선과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현금으로 해준 곳도 있고 예금으로 계산해 준 곳도 있어요. 그러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못해 준 곳도 있어서 불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미개선도 관련이 있고 개선된 곳도 기관장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뜻에서 독려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챙겨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건설교통부의 부산교통공단도 아직 미개선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여기는 왜 아직까지 미개선되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여기는 현재 다른 공단의 퇴직금 누진제와는 다른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소송을 하고 있고 노조문제가 걸려 있어서 계속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부산에 국정감사 가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 건설교통부장관께 말씀드려서 연말까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9개중에서 다른 곳은 다 끝났는데 몇 개 기관 안 남았으니까 완벽하게 끝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챙기고 확인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다음에 재정경제부장관은 어디 가셨나요, 차관님 계십니까?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檣**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장관님은 재경위에 가 계십니다.

○**申溪輪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면 더욱 좋습니다. 장관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겠지요.

기획관리실장이세요?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檣** 예.

○**申溪輪委員** 어차피 이 질의는 자료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이 이해당사자 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이 고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손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데 사외이사제, 사외감사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檣** 그래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이면 장관보다 더 소

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를 알고 있고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예.

○**申溪輪委員**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2개 기관에서 집중투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차관보 담당인 금융정책국 소관입니다.

○**申溪輪委員** 그러면 차관보님 계시나요?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지금 안 나왔습니다.

○**申溪輪委員** 제가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가셨군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집중투표제를 개선할 방법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와 주가가 다시 뜨고 그래서 투자자들 특히 외국자본 투자자들이 이익을 쫓아서라도 국내에 들어오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투명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한 것만 12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상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요?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예.

○**申溪輪委員** 틀림없이 만천하에 드러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를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이것도 우리가 현재 실시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빨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위기가 위기지 내년 내후년 위기가 위기입니까?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실기업 정리체계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금감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제도 도입 이후 104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 대우계열 12개를 포함해서 37개 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퇴출했거나 졸업했는데 그 중에서 퇴출이 18개이고 나머지는 매각, 합병, 조기졸업으로 성공적으로 끝낸 셈인데 워크아웃제도가 앞으로 사전조정제도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금년 연말로 종료하게 됩니다.

○**申溪輪委員** 현재 도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전조정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사항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조속히 법정관리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사전조정제도가 워크아웃 진행 중인 업체의 채권단이 미리 조정된 내용을 그대로 법정관리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조정제도를 일종의 법정관리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申溪輪委員** 바로 그렇게 100% 볼 수는 없잖아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바로 그렇게 가는 제도가 사전조정제도입니다.

○**申溪輪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부분예금보장제도는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申溪輪委員**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바뀔 것이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앞으로 시장기능에 의

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분보장제도가 특히 금융기관이나 예금자의 모델 해저드를 없애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申溪輪委員 꼭 시행하겠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申溪輪委員 아마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개혁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후퇴한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식으로 꼭 물어봐 달랍니다.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 싶은 뜻으로 기록을 위해 물어봤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2차 외환자유화조치에 대해 찬반도 있고 丁世均 우리 당의 간사님은 저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이것은 철회되고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2차 외환자유화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이따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받으시지요?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이따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申溪輪委員 제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약속사항이라고 하는데 저는 1차 자유화조치로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애국심을 발휘하고 기타 등의 방법으로 2차 외환자유화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철회되고 시행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재경부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국제금융국장이 申溪輪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世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煥委員 한나라당 朴世煥 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부별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따라서 세출예산구조의 경직도가 매년 증가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반재정규모 대비해서 세출예산의 경직도가 61%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작 정부의 기구나 인력의 감축 등 행정개혁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나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는 재정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내년도 세출예산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의 행정개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및 세출예산부족 개선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먼저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제경기대회의 국비보조율은 경기장의 경우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비의 3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에 지방체육시설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연습경기장시설은 국비지원없이 각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보조금도 지원받지 않는 월드컵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특히 공동개최하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의 지원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문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한 KDI의 용역결과를 보면 불균형분이 3,786억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에는 그동안 발생한 부채이자 1,003억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불균형분 보전잔액인 2,786억은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국비지원 되어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에 778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건설시에 국비지원을 가장 적게 받은 대구로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불균형분 보전잔액을 일괄지원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지하철 2호선건설 국비지원 2,043억과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국비지원 175억도 건교위에서 건의한 대로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공항의 경우 372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활주로를 완공했습니다마는 지금 민항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기착륙시설(ILS) 설치가 필요한데 그 설치비용 20억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대구공항의 계기착륙시설비용 20억을 상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어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음보험제도는 97년에 신설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대상업종이 제조업과 제조업관련산업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非제조업분야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현행제도는 지역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기본재산이 부족해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농가부채 경감요구 등 농민들의 욕구불만이 집단행동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가부채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계획대로라면 내년도 농가부채대책의 실시로 일반회계 예산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채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림부장관의 견

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신·증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선 청사에 838억, 활주로에 372억, 도합 1,210억이 투자된 대구공항시설에 국제노선의 증편이나 신설이 안 되면 국가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공항의 경우 국제선은 대구-김해-오사카간 주 1편만 운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내년 3월 인천공항이 완공됐을 때 국제선 전용이 김포를 거쳐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됨에 따라 입·출국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지역의 항공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도 국제선 취항의 신설 또는 증편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의 산업용지가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은 IMF관리체제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성서3차 산업단지 45만평이 100% 분양될 정도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설사 지정된다 하더라도 개발절차 이행, 공장건축 및 가동까지는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단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구지역의 산업용지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보화지원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1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 70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또한 정보화지원센터에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정보화지원센터는 그 성격과 운영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어서 이를 통합하여 추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께서 지난번 국회에서 섬유산업연구회 단체에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패션어패럴밸리사업에 관해서…… 대구는 타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섬유산업 육성과 병행·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역 섬유업계에서도 중앙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내년도에 지방산업단지 분양계획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의 견해와 추진방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통부의 내년도 정보통신인력 양성지원 예산안은 1,619억으로, 이는 올해 예산 690억에 비해 134.7%나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정보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위해 이같은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앞으로 사후감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金容鈞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委員 한나라당의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1년 국고채 발행 소요액이 14조6,000억인데 1조4,000억을 과다책정해서 16조로 계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분이 2,850억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증가를 이유로 내년도 예산이 500억 증가하고 있는데 구상권 행사 등 기금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 제고노력이 우선되지 않는 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계개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했는데 연소득이 1,157만원 이하의 감소효과가 없고 오히려 고소득자가 더 많이 세율이 떨어지는 역진적인 소득분배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지원예산 1,000억원은 부당하며, 한국투자신탁 출자손실에 대해 정부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자는 것인데 산업은행은 현재 적자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1,800억원을 들여서 사옥을 짓고 있고 임원진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지원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20.7%에 이릅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나빠질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해 국민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상

되는 바 이것은 너무 과다한 세입책정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위농·축협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부실규모가 약 7,000억원에 달하고 새마을금고에도 부실의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의 지역차별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97년 대비해서 98년부터 2000년6월 사이에 부산이 4배가 늘었고 호남은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소득세 조사에 있어서 광주 26% 감소되었고 대구는 10% 증가했습니다. 징수유예를 해서 혜택을 받은 곳은 호남이 4배가 증가했고 영남은 미미합니다. 세금징수실적을 보면 부산·대구의 어음부도율이 각각 0.24%와 0.31%이고 실업률이 6.5%, 4.6%로 높는데 세수는 3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부도율이 0.26%이고 실업률도 5.6%로 매우 낮는데 세수는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편중된 세입의 할당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현대 계동사옥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체제 변화가 곧 있을 지도 모르는데 이같은 사옥매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망하는 기업의 부동산을 국가가 전부 국민의 돈으로 사들여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지정 연구개발사업의 대상기업 중에 대기업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많은 자원조달이 가능한데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누출된 사건이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출된 지역이 실제로 넓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주민의 극심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취급과 안전관리, 누출 이후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 100억원 증액해서 600억원인데 99년도에는 396억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예산도 8월말 기준 11.6%만 집행되었고 2001년에도 상당한 불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외

국인 투자유치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그 방안에 따라서 적절한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석유비축률 및 에너지효율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을 펼쳐도 차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도로구조와 또 교통체계 등의 원인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에너지절약운동은 석유가격 인상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피해보상이 호남지역에 편중되어서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서해안 대 동해안지역 원전보상비율을 보면 612억 대 5억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원자력발전소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을 둘러싼 금융사고 등을 보면 그 지원항목 자체의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할 단계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270억원은 정보화촉진기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결산인여금을 전출하면서 99년도의 결산인여금보다 많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했고 내년도 역시 이미 2,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로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 결산이익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발족했습니다. 아직 회계상으로는 분리되지 않고 있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정사업과 정보통신분야를 따로 분리회계해야 하고 우정사업에서도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은 별도로 분리해서 회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통신이 발달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여전히 정보통신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통신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체국도 농촌지역에서는 정보화의 중심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데이콤의 노사문제로 통신망의 혼란이 있었습니

다. 하루동안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할 경우 다시 우회할 수 있는 통신망 등의 비상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3월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이 빗더미에 앉아있고 자칫하면 또 이것이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해외로 경영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는 부산까지 언제 고속철도화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철도는 언제 건설할 것입니까?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마사회의 농림부이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예산 39억원이 충청권과 호남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이 영산강Ⅲ-1지구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항만개발에 대해서 물동량에 대한 예측과 현재 실적치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지역 편중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수산발전기금 신규 100억원을 책정하고 2004년까지 3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건설교통부장관께 먼저 묻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본위원회도 인천국제공항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상당기간, 사오 년간 극히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 기간동안 과연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국책사업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국제적 경쟁이 있는데 일본 간사이 공항은 건설비의 58%, 중국 푸둥 공항은 67%, 홍콩 첵랩콕 공항은 77%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40% 지원만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내재적 부실이 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권 최대 국책사업으로 또

이것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분야인데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경영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기존에 투자된 기술인력을 모두 철수했다가 다시 모은다는 것도 힘들고 또 운영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막상 운영하다가 지켜볼 때는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운영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불요불급한 SOC는 철저히 견축하셔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많은 국가수익이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중단하면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와 맞물려서 계속적인 건설공사를 진행해야만 이 지역의 인력수급계획이 원활해지지 이것을 중단하면 여기서 물려나오는 일자리가 없는 노동력이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공사가 직접 조달함으로써 인해서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도 하고 또 경영과정에서 개선사항을 통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단계 사업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선 설계만이라도 해놓아야 그 다음 사업이 이어질 수 있고 인천공항의 경우 제일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3만명 내지 3만5,000명이 필요한데 일하다가 철수해 버린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하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수부 차관께서 나와 계신가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전도 참 좋은 곳입니다마는 해양관계는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불편함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하기가 어려워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은 증·개축할 때마다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閔鳳基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일리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이 어디로 간다, 가는 전제로 해서 건설이 된 바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인천에 그대로 잔류를 하면서 증·개축이나 이것을 통해서 해경의 기능을 좀더 현대화시키는 그런 것을 먼저 풀어보고 거기서 문제가 정 어려울 때에는 타 지역 문제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다음은 철도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과 인천사이에 있는 수인선에 대한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벌써 5년째 담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도 약간의 예산이 오를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구체적 내용을 볼 때에 각 지역마다 지하로 하는 데도 있고 고가로 하는 데도 있고 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시설의 설계가 다양합니다.

그 합리적인 기준이 나름대로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송도·인천간은 구 시가지를 지나면서 지하에 지하시설로 설계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남동·연수지구는 지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고가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세가지 종류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상으로 되어 있는 남동·연수지구는 최근에 아주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金德圭 위원께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에 지상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그 방음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음벽으로 과연 어느 정도 환경평가가 되고 또 소음이나 이런 것을 고층아파트들이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집중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것이 지금 벌써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 계획표로 하면 이것이 몇 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鐵道廳長 鄭鍾煥 원래는 2008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2008년예요?

○鐵道廳長 鄭鍾煥 예.

○黃祐呂委員 2008년이면 아직도 8년이나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특히 지금 조금만 더 연결하면 연수·송도지역까지 오이도·연수간에는 이것을 운행할 수가 있어서 많은, 지금 수원과 인천은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움직이기 전에는 마땅한 연결로가 없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철도 대량수송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당길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鐵道廳長 鄭鍾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 그쪽에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이도까지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큰 많은 돈이 안 들고도 그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빨리 좀 해 가지고 2005년까지는 좀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黃祐呂委員 여기 지금 송도미디이라고 정보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또 화물선을…… 예전에 수인협궤선이 있는 그 지역에도 다시 화물차를 운행하는 설계를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그 시가지가 도시계획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화물선을 어떻게 놓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 지역에 기존에 한 300억 가량 투자해서 노반시설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백년대계로 봐서 아주 적절한 도시계획에 맞는 시설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자세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鐵道廳長 鄭鍾煥 예, 알겠습니다.

○黃祐呂委員 재경부 陳 장관님께 한 마디만 여

쭈어 보겠어요.

지난번 대우자동차 문제가 인천에 또 부평지역에 아주 큰 문제였는데 적절하게 대답해 주셨고 또 많은 조치를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협력업체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쯤 진행이 됩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다만 어음결제는 100% 다 하지 않고 한 40%만 하면서, 왜냐하면 어음발행 잔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黃祐呂委員 실제로 지급되거나 조치는 금주 말이나 다음 주초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애타는 심정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黃祐呂委員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호신용금고에 관한 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금융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특히 금고는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마땅치 않아서 감사만 나온다고 그러면 이 금고업체들이 전부 위험한 것으로 알고 이용객들이 다 예금인출사태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1조 가량을 만드셔서 2,000만원 정도 보장하신다고 그러다가 500만원으로 줄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상호신용금고도 예금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500만원은, 소액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금액입니다.

○黃祐呂委員 그것을 꼭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인천지역에 대한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다섯 개의 금고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얘기 아시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알고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그리고 경기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금융이 다 무너졌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7개 정도도 오늘 내일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이외의 모든 지역금융이 그야말로 모두 도산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역에서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것은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굳건하게 살릴 수 있는 방안



이 무엇인지 특히 현재 있는 약한 금고들을 합쳐서라도 지역금고 내지 지역은행으로 자리잡게 하실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잘 아시는 것처럼 상호신용금고는 8·3조치 때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상호신용금고에 부실금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2차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도산하는, 영업정지당하는 금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착수한 14개 신용금고 조사를 끝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상호신용금고업체는 138개 업체입니다.

○**黃祐呂委員**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금고는 계속 잘 육성하실 각오가 정부로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육성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육성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출자자의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도 개선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관계법 개정안으로서 올라가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역금고에 대한 관심을 다른 차원에서도 각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黃祐呂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柳三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三男委員**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부처 장관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광주에 호남연수원, 2003년에는 경북 경산에 영남연수원을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하고 중소기업수 하고 또 업체가 몰려 있는 집중된 지역하고 이것을 고려한다면 광주지역이 6.8%, 대구·경북지역이 12.6%, 부산·울산·경남지역이 18.9%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예, 알고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혹시 모르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경제원칙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까?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예, 그렇습니다.

○**柳三男委員** 그렇다면 부산·울산·경남에 중소기업연수원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저희들도 부산·경남지역 연수원이 필요해서 금년도 예산에 행정부에서는 반영했습니다마는 예산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柳三男委員** 이것이 바로 불균형인데 가령 자식 세 사람에게 빵을 줄 때 동시에 빵을 주는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큰 아들에게 먼저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에게 빵을 주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세 번째 아들에게 빵을 주고 하면 자식 3명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수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좋다, 어느 한 지역에 먼저 집행하고 다른 지역은 늦게 집행하고 하는 것은 지역간의 불균형 또 연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균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사실 호남지역 연수원은 지금 다른 영남지역과 비교해서 대체연수기관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 연수원이 없어서 97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주어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도 부산·경남지역 연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쪽 지역도 연수원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柳三男委員** 2001년 예산편성 시 동시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의 오염은 그 주범이 육상에 있습니다. 모든 오염물질이, 중금속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이 육상에서 결국은 연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양이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오염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보면 해양생태계 내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연구조사 이런 것을 위한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예, 그렇습니다.

○**柳三男委員** 그래서 해양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이라든가 유인등대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또 감시체계 이런 예산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투자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분명히 환경 쪽이 더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해양문화, 관광 이쪽의 경우에도 지역소득 증가 차원이라든지 우리 해양문화 자체가 과연 여태까지 있었는가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미래 21세기 해양세계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적어도 국민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투자는 계속 견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저희 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해서 환경보전 쪽에 좀더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柳三男委員** 그러면 사전에 환경부장관하고 수평적 협조를 해서 이 해양환경오염실태조사라든지 그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해양오염의 80%가 육상 기인 오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다 자체로 환경보전을 하려고 해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육상기인된 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개선특별부담금을 저희 해양환경 개선에 쓸 수 있도록 부처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柳三男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합니다.

농협하고 축협이 통합을 했습니다. 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몇 가지 통합에 대한 통합비용 등등 좀 애로가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축협이 통합하기 전에 많은 부실경영을 해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지금 축협부실로 인한 책임

문제는 지역의 축협조합장들이 고발을 해 놓고 있고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현재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고발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기강 차원에서 확실하게 공기업을 포함해서 부실경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협이 왜 경영이 부실했는가 하는 평가, 분석이 있으면 본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알겠습니다.

○**柳三男委員** 농협부실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공적자금 해서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농협부실화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도 공적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현재는 중앙의 부실과 지역조합의 부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역조합 부실은 현재 지역조합이 상호금융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보법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과기부 예산안을 보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19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보다도 40억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민·군겸용기술은 소위 안보 또 경제 양면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예, 저희 입장으로는 증액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의 민·군겸용을 위한 연구개발환경은 연구비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군사기술을 응용한 그런 측면도 있고 민생기술의 또 군용화라는 양 방향이 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에서 다소 감액은 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투자되는 액수는 오히려 성과물에서는 더 높은 결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투

자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신자세 또는 팀워크에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마침 저 자신이 민·군 겸용기술을 일생 동안 다루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증액시켜 주시면 그 이상 좋을 리 없습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나 확보된 이 예산만 가지고도 이제와 다른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柳三男委員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국방연구개발비에 대한 과기처의 심사절차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국방부 정찰 위성사업이 157억을 집행했는데 과기처 위성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이것이 97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기처에서 심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기부라고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柳三男委員 예, 죄송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도로포장관계인데 울산이 62.8%, 경남이 63.9%로 전국 최하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柳三男委員 이와 관련해서 국비, 지방비의 예산 집행도 지역별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균형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이라든가 포항·사천·여수공항 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발전적으로 현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장관께 IMF사태 이후 정부에서 판단한 성공한 구조조정, 실패한 구조조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시기 힘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柳三男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金龍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委員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입니다.

우선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에 야당의 줄기찬 특별법 제정요구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가 지난 11월21일 농민들 항의시위가 있자 갑자기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15대와 16대국회에서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법률제정을 촉구할 때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2001년도 예산안에는 부채경감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경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또 어떤 확보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농민들의 저항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법률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비 증액이 눈에 띄게 많아서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증액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국세청의 특정업무비 증액이 적었고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수가 증가하는 등 증액사유가 있고 타 국가기관과 비교해도 무리한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도 합니다.

문제는 왜 그동안 국세청은 특정업무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갑자기 높아져서 이를 막고자 조사반활동비 등을 증액하였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직률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부장관께서 묻겠습니다.

영월댐건설과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지만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삭감된 예산은 댐건설 고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건교부에서는 전년 대비 2.1% 감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관서운영비 역시 동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도시행정, 국토계획국, 토지국, 항공국, 항공기검사 부문의 관서운영비는 동결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에 여수공항, 무안

공항, 양양공항의 관서운영비는 내년도 사업의 불투명성을 감안해서 삭감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인천공항의 관사임차료 115억원은 직원용 아파트 임대료 보이는데 특혜성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8호선 중에서 영월읍 방절리에서 하동면 진별리까지 11.7km 구간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북도 3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역균형 개발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확·포장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97년도에 이미 실시계획을 완료했지만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업추진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업추진이 잘 된다는 특정지역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추진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등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정권이 다시 바뀔 때까지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번 국도 확·포장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남부 지방인 영월·정선·태백·삼척을 잇는 38번 국도의 확·포장사업은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9년동안 8,360억을 투입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한 금년까지 2,360억만이 투입됐을 뿐입니다. 금년도에 1,002억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겨우 982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도 적습니다. 도로건설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왜 38번 국도 확장예산만은 축소되었는지 궁금하고 이 상태로는 2010년이 돼도 완공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매년 1,500억 이상은 투입되어야 2004년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도로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잇는 도로로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생명선과도 같은 도로입니다. 폐광지역 회생이라든가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조속한 준공이 요망됩니다.

건교부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 관련사업에 관해서 본위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검토 시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질의했고 예산안정책질의 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질의했지만 모두 직접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향후 10년간 해양수산부 3,162억원, 문화관광부 1,496억원 등 두 부처에 분산하여 5,000여억원이라는 거액을 장보고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특정지역에 퍼부를 예정입니다. 장보고라는 애매한 인물로 포장하지 말고 특정지역을 특별히

지원할 예산이라고 떳떳히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1년도 해양수산부 장보고 사업예산 25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6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6억3,700만원 합치면 거의 33억여원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어느 단체에다가 이런 거액을 주는지,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장보고 축제에 금년도 2억, 내년도 2억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아닌 일개 축제에다가 매년 2억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배정이라면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제 행사의 예산은 다 보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해진 유민 벽골군 이주지 발굴용역비로 금년도에 9,400만원, 내년에 9,400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유적지 발굴이 아닌 청해진 유민의 이주지 상황을 연구하는 용역사업과 기념비 건립을 위한 사업을 2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장보고 유적정비비 30억 예산과 중복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도의 석상건립사업은 장기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석상을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본계획에 석상건립사업이 누락되거나 장소가 틀린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있는 동상도 지금 파괴되는 세상입니다.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광지역 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면적과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태백시는 191km<sup>2</sup>에 1,300여억원 그리고 향후 1조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정선군은 51.3km<sup>2</sup>에 1,400여억원이 지원되었고 특히 카지노가 개장되어 성업 중입니다. 삼척군은 95.4km<sup>2</sup>에 63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지난 9월 생존권 보호투쟁을 벌여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월군은 가장 넓은 240.7km<sup>2</sup>를 지정받았으나 그동안 겨우 425억원으로 최소액이 지원되었을 뿐입니다. 영월군은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무연탄과 중석생산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모

두 폐광되어 한때 12만5,000명 주민이 지금은 5만 명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폐광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피폐가 따른 대표적 폐광지역입니다.

그러나 영월군은 정선이나 태백, 삼척처럼 극한 투쟁을 하지 않았던 탓인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늘 후순위였고, 지원금도 타 시·군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액입니다.

한 예로 정부의 폐광지역 지원사업 중 탄가안정 대책비 지원금을 보면 정부에서 예정하였던 2001년도 지원금은 태백시 249억원, 삼척시 118억원인데 비하여 영월군은 단지 7억원입니다.

이러한 폐광지역 지원사업 실태는 영월군민들로 하여금 극한투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자 농어민지원특별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듯이 그동안 암전히 정부를 지켜보던 영월군민들도 극한투쟁을 하여야만 정부에서는 태백·정선·삼척과 같이 균형잡힌 폐광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 폐광지역 중 영월군이 유독 불합리한 지원을 받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원대책에서는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첫째, 영월군에서 추진 중인 고랭지채소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의 임야를 개간하여 고랭지 채소단지를 조성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폐광으로 실업자가 된 영월군 북면 거주 주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고랭지 채소단지를 조성코자 9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0년1월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자유치사업자로 지정받았고, 지난 10월 산림청에 개간을 위한 임야전용협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와 26조의 규정에 따라 산자부로부터 산림법 적용 특례대상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으면 임야전용 협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11월27일 산자부에 특례대상 사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주민들이 금융기관 대출금 3억5,000만원 등을 투입한 이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에

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번 동절기 동안 산림벌채 등 개간이 되어야만 내년 4·5월에 채소 씨앗을 파종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이 내리면 산림벌채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농민들의 파산이 눈 앞에 보입니다.

산자부장관계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널리 헤아려서 산자부 업무지원으로 파산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속히 폐특법에 의한 산림법 적용 특례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월군과 평창군에 관한 얘기로서 광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폐특법에 시·군을 경계로 한 어떤 요건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순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權琪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울산 출신 **權琪述**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묻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나와 계시지요? 부별심의 마무리 때 예산처장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과 농가의 부담을 줄여서 가입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예산안에 보험료 지원 30%씩 26억1,500만원과 운영비 지원 20억3,100만원 등 총 46억4,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예산안대로 보험료 지원비율을 30%로 하여 보험제도를 실시할 경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제도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보험료의 50% 지원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이 겨우 18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렇게 농촌투자에 인색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해 온 미국, 캐나다, 일본, 스페인 등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도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예산 18억원을 증액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두세 차례의 태풍이 내습하는 기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대규모의 홍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400여명의 귀중한 인명피해와 6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홍수 등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정비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저지대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수해방지대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해복구예산에만 비중을 두고 있을 뿐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합니다. 지금 정부의 평균 하천개수율은 70%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30%에 이르는 하천주변지역의 국민은 극심한 수해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해서 재해없는 낙토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치수사업비는 8,321억원에 불과합니다. 2007년 전국하천개수 완료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1조5,000억원 중에서 1조원을 삭감하고 일반예비비 1조원 중에서 5,000억원 등 1조5,000억원을 삭감해서 수계치수사업비 1,500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500억원, 일반하천개수사업에 300억원 등 3,3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계속 묻습니다.

지금 파악된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97만여 공이며 이용량은 연간 약 37억t입니다. 전국 물 이용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발가능량 초과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수원고갈 및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전국 각 지역에 수십만 개의 폐공이 생겨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종합관리가 시급합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지하수 이용률이 미국은 22%, 프랑스는 60%, 독일은 64%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지하수 이용률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하수 부족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문지질도 작성과 관측망 설치 등 지하수 기초조사를 조기 완료하고 정보인프라 구축을 시급히 착수해야 합니다.

지하수 오염의 원인인 폐공이 수십만 개로 추정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1년 예산안에는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겨우 67억원이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하수 기초조사와 폐공처리 등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문지질도 작성비와 지하수 폐공관리비 및 지하수개발조사사업비를 각각 100억원씩 300억원을 반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건교부장관과 예산처장관의 견해를 각각 답변바랍니다.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획예산처가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대형투자사업 49건 중에서 27건이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7개 사업 중 조치원-대구간 전철화사업 등 6개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21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1개 사업 중 호남권 사업이 11개입니다. 수도권은 1개, 영남권 3개, 충청권 3개, 제주권 2개, 강원 1개 등 전국의 타 지역을 모두 합해도 열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1개 총사업비 9조 8,743억원 중에서 호남권 사업비가 5조 9,311억원입니다. 호남권 신규사업이 전국의 60%입니다. 이렇고도 호남 특혜, 호남 편중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丁世均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철도청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착수하는 총사업비 2조 7,271억원 중에서 호남지역 사업비가 2

조3,822억원입니다. 신규사업비의 87.4%를 호남지역에 편중 계상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스스로 깃뚫고 원칙도 없이 호남지역에 전국의 87%를 투자토록 계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설계에 착수도 하기 전에 대전-목포간 호남선 전철화사업 예산 655억원을 편성한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설계비만을 반영하고 사업비는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해 전국 항만에서 취급한 해양화물 총량은 7억7,503만t이었습니다. 울산항의 화물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2억5,000만t, 총량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광양항이 1억3,000만t, 인천항이 1억1,000만t, 부산항이 1억1,000만t으로 4위였습니다. 그리고 목포항의 화물량은 겨우 592만t으로 전국 최하위급 항구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해상화물은 지금 5,663만t의 하역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천항의 부족시설량이 1,675만t이고 울산항이 1,596만t, 부산항이 1,113만t 부족시설량입니다. 인천항과 울산항 그리고 부산항의 하역시설 부족량이 전국 부족시설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상물류비용을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천항과 울산항, 부산항의 하역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권역별 항만 건설예산 3,379억원 중에서 인천항 건설예산은 전체의 겨우 7.5%인 254억원에 불과합니다. 울산항은 6.8%인 231억원이며 부산항은 9%에 해당되는 304억원이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역시설용량이 아직도 111만t이 남아돌고 있는 목포항에는 전국 항만건설예산의 10%인 324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포항의 지난해 화물처리실적은 겨우 592만t으로서 전국 해상화물의 0.8%를 취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화물처리실적이 목포항의 18배가 훨씬 넘는 인천항에는 목포항보다도 70억원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물처리실적이 목포항의 26배나 되는 울산항에는 목포항 예산보다도 오히려 93억원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화물처리실적이 목포항의 18배가 훨씬 넘는 부산

항에도 목포항보다 20억원이 적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물취급실적이 많으면서 화물처리시설이 크게 부족해서 체선과 체화가 심각한 항구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화물량도 극히 적고 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목포항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화물적체 심각도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이기 때문입니까?

2001년도 권역별 항만건설예산은 하역시설이 남아도는 항구에 대한 투자를 전액 삭감하고 하역시설이 부족한 비율에 따라 투자예산을 재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해양수산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경부와 산자부에 대한 질의는 보충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鄭亨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亨根委員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이라고 해 가지고 2000년12월12일 내일 10시 반에서 11시 반에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존경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張誠源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제시장, 김제시 의장, 전북도의원 등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시겠다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의 혼란을 가져오는데 한 쪽에서는 전주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고 같은 여당 그리고 김제시에서는 안 된다고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98년 9월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변경해서 8억원의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지난해 국회에서 4 대 3으로 논란 끝에 25억원의 실시설계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쓰고 이번에 50억원의 부지매입예산이 편성되어 심의 중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단히 혼돈스럽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 전주권 신공항이 부적절하게 되었다고 하고 다시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대우엔지니어링인데 그 전에도 타당성조사를 한 대우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 이후에도 같은 대우엔지니어링사가 검토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

서 건교부장관은 분명한 입장과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든 시장의 상황이 총집결된 거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장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되어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해결책의 하나는 제 생각에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적어도 800선 이상만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기업의 자금운영, 공적자금 회수, 금융구조조정 등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텐데 이 주식시장을 살리지 못한다면 재경부장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식을 사는 자금에 대해서는 비실명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못한다, 여전히 주식시장은 450만 이상의 개미군단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모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살도 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시바빠 주식시장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지금의 경제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모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주식시장을 살릴 것인지 재경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국민들 앞에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호신용금고업계 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1조원을 긴급 투입했는데 이 원인이 결국 어디 있느냐, 즉 금감원이 금고업계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14개 금고에 대한 조사를 14일까지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금고업계가 파산지경에 달하도록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李瑾榮 금감위원장이 제 2, 제3의 상호신용금고 사고를 예고했고 특히 6일 국회 정무위에서 14개 신용금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중에서 한두개 금고의 출자자 대출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의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시하는 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이 지난 2일 강원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금고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앞으로도 한두 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서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고업계에서는 관료들이 책임없이 뺏은 그러한 말이 금고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위원장은 금고업계에 대한 충격을 알면서도 금융사고를 사전 예고한 것인지,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책임있는 관료들의 선부른 발언으로 금고업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전국의 중소 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안긴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건설살리기에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이 동원되기까지 금융감독원과 정부당국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시장을 무시하고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치경제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陳 稔 재경부장관은 현대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또는 감자, 출자전환을 주장했지만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어 살리겠다고 공언하고 더구나 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신규자금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정부의 현대건설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또 토지공사는 李瑾榮 위원장의 발언 다음날 산간척지위탁판매선수금이라는 방식으로 현대건설에 2,100억원의 거금을 지원하고 주택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토공이 보증한다면 좋라며 1,000억을 지원했고 李瑾榮 위원장은 지난 15일 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을 만나서 건설지원에 나서라고 요청했고 정몽준 현대중공업고문에게도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누차 밝힌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며 시장이 신뢰하는 자구안을 내놓든지 않든지는 현대그룹에 달렸다”고 말해온 것과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유동성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권은행도 아닌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자가 이미 계열분리된 민간기업 총수를 직접 만나 협조라는 미명하에 압력을 넣은 것은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였다고 판단되는지 금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타워테크놀러지스에 대해서 지금 코스닥업계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리타워텍 그룹이 지난 12월7일 또 다시 미국의 브로커테크놀러지와 지분인수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자 리타워텍의 주가가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테크놀러지 그룹은 8월 중순 나스닥에는 상장되었고 지난 8월20일 시초가가 6.2달러였으나 지난 6일 종가는 1.19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리타워텍 그룹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1일 외국인투자법을 악용해서 1조4,000억을 국내에 들여와 아시아넷 주식 100%를 인수해서 M&A를 성사시킴으로써 주가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게 하고 관련 대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한때 35만원 하던 주식이 1만원대로 추락해서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한때 주가 시가총액이 5조원 이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리타워텍은 또 주가분양을 위해 지난 9월 미국계 투자펀드인 엘리엇어소시에이트에서 4,000만 달러 투자유치를 발표했으나 무산되었고 10월에 또 다시 스웨덴 엘릭슨과의 3,600만 달러 계약체결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리타워텍 대주주인 미국투자회사 ACI의 적대적 M&A계획을 흘려 주가를 상한가로 뛰어 오르게 하는 등 주가분양을 시도하는 동시에 관련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처분을 가속화하여 부를 축적시켜 나갔는데 지금 이것을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위원회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벤처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시 리타워텍이 주가분양을 위해 허위사실을 발표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금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국부손실로 해외부실은 영국이나 폴란드의 대우자동차 공장에 있는 연구소의 경우처럼 진출국과의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신뢰도 손상이 우려됩니다.

현재 지금까지 기업들이 투자한 해외재산의 약 20% 정도는 이미 손실이 난 상태라고 파악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자산을 감안하면 약 30조원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부장관께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기까지 해외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채권단이 해외자산 구조조정 대책반을 만들어 해외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정부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기업들의 해외자산 손실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康斗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斗委員 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부장관에게는 일괄질의를 하고 산자부장관에게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101조에 이르는 2001년도 정부 세출예산안을 보다 충실히 심의하기 위해 매일 밤 자정을 넘기면서 함께 고생해 왔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충실히 질의를 준비해 주셔서 새로운 많은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었던 점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워만 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애국적인 충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우리의 재정은 매우 취약하다고 이미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조 내외의 국가부채에다가 공기업과 각종 연기금들의 부채를 합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적자, 국가부채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빚으로 빚을 갚는 재정운용을 계속한다면 국가재정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작년 대비 9% 증대한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매년 하듯이 관례적으로 일정률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위기시의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가 지도층으로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점을 저는 몇 차례 지적하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검소하고 내실 있는 살림으로 대대적인 예산절감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이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우리 당 李會昌 총재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할 것을 제안하고 긴축재정을 구축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만이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정부가 민간의 개혁

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개혁이 전제되어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개혁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예산안심의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서 작년 수준의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러한 예산절감 운동을 즉각 펼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선적으로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부터 동결 또는 최대한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비는 오랫동안 삭감 없이 매년 일정비율 이상 증대해 왔습니다. 이제 거품을 뺀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IMF 위기 이후 고통분담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우리는 당연히 술선수범해야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도 고위직을 중심으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조원의 업무추진비와 5조3,000억원의 관서당 운영비도 과다합니다. 이 역시 원칙적으로 동결되어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청사신축, 개축, 보수 등의 비용도 전면 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해외여비의 문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해외여행 자제를 호소하면서 정부가 이와 같은 방만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경직성 예산들은 전면 동결하거나 과감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와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보화는 정보의 흐름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대폭적인 조직의 슬림화와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수년 동안 정보에 엄청난 금액을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반회계 정원이 38만1,923명에서 38만2,417명으로 증대되었고 인건비 총액도 2000년 대비 16.5%나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막대하게 투입된 정보화예산이 결국 총체적으로 낭비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부조

직운영이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화예산 투입에는 이에 비례해서 정부조직 슬림화와 함께 반드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2001년 예산의 경우도 모든 부처의 예산 구석구석에 정보라는 말을 내걸은 수많은 예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아직까지 그 막대한 정보화에 대한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인건비는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힘있는 부처들의 쌈짓돈으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방만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국정원 2,440억원, 경찰 959억원, 국방 953억원, 대통령실 232억원 등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이번에도 6%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정원 외에는 아예 이런 특수활동비를 두지 않도록 폐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이전까지는 총 예산액 대비 1%대에 머물렀던 예비비가 IMF를 계기로 해서 대폭 증대되어 3%대 내외로 증대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7%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지출내역이 재해복구, 해외순방경비, 국가안전활동경비 등 정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예비비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예비비는 총액 1%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불용액이 99.8%에 이르는 특별회계예비비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예비비가 2001년도에 11개 특별회계 96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근로예산 등은 대폭 축소하고 SOC 예산을 늘려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것이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상황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선심성·전시성 예산들은 전면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예산이 3조2,000억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증액분야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증액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는 SOC 예산이나 농가부채 탕감 관련 예산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SOC 예산은 물류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SOC 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줄어든 모습은 과연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입니다. 당파나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각 모두 소아를 버리고 힘을 모아 새로운 개혁을 성사시키면서 다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결산제도 메커니즘은 박정희 정권 시기 즉 한국의 농촌사회 시절 만들어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예산결산제도를 지금까지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폭 개편을 해야 합니다.

또 2001년 예산심의는 그 집행 후 철저한 결산을 통해서 그 성과가 분석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될 때 그 효과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미 제출한 바 있는 기금관리법이 라든지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은 건축기조 구축을 위해서 꼭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살리고 한국경제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충정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품질 선진화 구현과 수출 다변화 문제 그 다음에 거가대교 및 가덕교 건설과 관련된 사안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최근

의 대우자동차 매각문제, 자동차 시장 개방 등과 관련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모터 스포츠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터 스포츠가 단순한 스포츠 차원을 넘어서 직접 자동차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년도로 2회전을 맞이하는 창원 F-3 대회에서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일본 요코하마 타이어를 대신하여 공식타이어로 인정되어 450억원 이상의 수익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

자동차 생산 세계 제6위국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모터 스포츠 현황을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康斗委員** 아,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군요. 이 중요한 사안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F-3 대회가 세계 참피온십을 결정전으로 세계 모터 스포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斗委員** 그것은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예.

○**李康斗委員**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창원 F-3대회에서 금호타이어가 일본 요코하마 타이어를 대신하여 공식타이어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확인을 못 했습니다.

○**李康斗委員** 그것도 처음이시군요.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예.

○**李康斗委員** 공식타이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호타이어가 F-3 공식타이어로 지정됨으로 해서 수출신장에 의한 수익이 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모터 스포츠가 바로 산업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예, 그렇습니다.

○**李康斗委員** 장관께서는 수출신장과 연관산업 발전차원에서 창원 F-3대회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자동차 수출과 연관된 행사는 정책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康斗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漢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久委員** 저는 금감위 위원장님하고 재경부장관님께 섞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금감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건설이 서산농장을 팔 때 토지공사가 문제해결의 중간에 설 수 있도록 설득도 하신 것같고 또 주택은행에 용자금도 알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현대건설의 서산농장을 토지개발공사에 위탁 판매하는 데 따른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토지공사는 이것으로 인한 1%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李漢久委員** 그리고 주택은행에 용자알선하시고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토지개발공사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李漢久委員** 알선을 하셨구만요. 주택은행장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주택은행장한테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주택은행에 지금 유희자금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이 토공이나 주공 입장에서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李漢久委員** 이것이 잘 풀릴 때는 큰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만일에 선급금은 주어 놓고 일반한테 분양이 잘 안될 경우 토지공사가 자금이 잠길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충분한 담보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漢久委員** 아니, 담보취득은 될지 몰라도 문제는 유동성이거든요. 토지공사도 돈이 없는 처지에 주택은행 돈 빌려서 우선 돈 주어버리고 난 뒤에

토지는 안 팔리고 그러면 거기는 돈이 잠기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갈테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당시에는 서산농장 매수희망자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 우려를 안 했습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지금도 매수희망자가 상당히 있고 또 오늘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면 그만큼 완료가 되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일부가 매각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제대로 변제가 안 될 때에는 **李**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저는 서산농장 매각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주선을 해준 것이지 제가 이 매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李漢久委員** 지금 제가 보기에 상당히 월권행위를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선 토지공사가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금감위원장이라면 최소한도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로 몰리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고 부실이 쌓이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을텐데 그런 분이 이런 위험한 일에 왜 끼어드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李漢久委員** 과거에도 보면 지난 3년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금감위원장이 여기저기 끼어들었다가 일 저질러 놓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참 굉장히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토지공사라는 것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개인업체의 토지분양을 중개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금감위원장이 나서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별이 없어서야 어떻게 국가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도 비슷합니다마는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금융기

관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소유자 또는 대주주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독기관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금융구조조정 책임자로 나서 있고 또 어떤 때는 금융시장 안정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또 어떤 때는 금융산업 비전까지 제시하고 영역컨트롤까지 해야 하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분업화가 안되어 있어서 자꾸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메카니즘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감독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을 제대로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그런 일에 자꾸 끼어드니까 거기서 부실이 생기면 영락없이 감독기관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그리고 까다하면 정책실패 감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나, 공적자금 대충대충 투입해서 금융구조조정한다 이러면서 그냥 덮어나가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 말씀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3년 동안 이런 짓을 해 놓으니까 공적자금만 들어가고 구조조정은 제대로 안되고 감독은 감독대로 안되고 또 금융시장은 안정이 안 되어서 저쪽에서는 부실이 되면 그냥 해소해주겠지 이러면서 금융기관들은 해이해지고 투자자들은 아무리 보아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또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거기 한 가운데에 아주 자랑스럽게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위원님, 이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현대건설과 토개공 상호에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주선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漢久委員** 취지는 항상 그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과거 전임자들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의로 하셨다가 생각한대로 쉽게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큰 누를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관치금융 제발 그만두라고 하고 관치경제 그만 두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들 하시니 그래서 일은 저질러 놓고 뒤는 계속 세금으로 메우고 있으니 딱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재경부장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정책질의 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대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특별히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한 것을 보면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4분기 중에 출범시키되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제컨설팅회사의 자문 등을 통해서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보셨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李漢久委員**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지난번에 공적자금 투입이 급하다고 얘기하실 때는 금년에 안 집어넣으면 무슨 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보니까 금융지주회사는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 기능별 재편방안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답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저희 생각은 연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적자금 투입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지난 7월에 정부가 발표했던 금융지주회사는 어떤 형태든지 공적자금을 넣어서 클린뱅크화해가지고 금융지주회사로 넣는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융지주회사가 작동 가능한 설계를 전제로 해서 그쪽에 편입시키고 그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좀더 전문적인 기관을 받아 가지고 출범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면 우선 기능이 어떻게 되든 집어 넣어 놓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아닙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그때 **李漢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적자금 투입조건은 아주 엄정하게 해서 투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李漢久委員** 글썄, 엄정하게 해 보았자 기껏해야 부실을 끄는 재무구조 개선하는 컨셉이지 수익성을 계속 증진시켜서 나중에 회수 가능하다, 안 하다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는 것은 건전성 기준 플러스 수익성 구조를 전제로 해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李漢久委員 금융지주회사에 집어넣는데 금융지주회사의 장래는 10월까지 만들어지는 기능별 개편방안을 보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이런 말씀이지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IS 건전성 기준을 어느 시점만 맞추어 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익구조가 같이 가져야 하는데,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에 들어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을 붙여 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포나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관계자 동의가 있을 때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주회사로 편입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지주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李漢久委員 글썄요. 이것을 들여다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우선 걸모양만 대충 닦아 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회수가 제대로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李漢久委員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월12일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금융노련하고 정부측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데서 금융노련 과업관련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정부에서는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답변이 왔고 조금 전에 금감위 위원장께서는 이면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겠다 그러셨는데 李瑾榮 위원장께서는 그때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없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이면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인수·인계 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면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李漢久委員 그러면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이 기자회견한 것은 거짓이다 이런 말씀이시구만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이용득 金勞委 위원장이 당시에 무엇을 이면계약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李漢久委員 陳 장관님은 어떠세요? 이면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노사간에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니까 두 분이 금융노련 위원장이 거짓말했다고 확인을 하신 것이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거짓말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노·정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합의라면 이것이 양자간에 뜻을 같이 해서 날인을 하든 합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니까 문서로는 안 했고 암묵적으로는 양해가 있었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아니지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한 협의도 없었다. 서로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합의한 내용이 문서가 됐든 문서가 아니든 그것은 없다 하는 것이……

○李漢久委員 정부로서는 지킬 일은 아무 것도 없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漢久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22조라고 답변하시면서 이것은 주식의 본격적인 매각을 통해서 회수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2년까지 추가 공적자금도 일어난짜리 채권발행해서 그때까지 상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또 분산시켜야 되니까 5년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상한 답변이 동시에 왔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까지 그때 1차 공적자금을 회수할 때 충분히 이것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제에 2002년까지 그렇게 자신을 하시면서 추가공적자금 조성액도 그때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일어난짜리로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번에 투입하는 것도 대략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회수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그것을 자꾸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고 그러십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지금 2003년에 상황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중기적으로 평준화시켜 주어야 소화가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2002년까지 주식을 처분해서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말씀은 정부가 여러 가지 관련경기,

시세 특히 鄭亨根 위원님이 걱정하신 증권시장의 체력보강과 활성화를 촉진시키면서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久委員 글썄, 소화를 하는 데서 단기로 파는 것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지요. 그리고 회수는 2002년이면 아주 잘 될 것이라면서요?

이번에 투입되는 것은 같은 금융기관들에 투입하는 거거든요. 대략 비슷하니까 주식시장 그때 잘 될 것 같으면 다 회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굳이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고 그러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도 물량의 수급을 균형있게 조정해 가면서 가야 증권시장도 살고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李漢久委員 이번의 것은 별로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잘 따져보시고 답변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계산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은 질의 안 해도 될 일을 질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면답변을 제대로 해주면 이런 질의 안 해요.

그 다음에 공적자금 이번에 추가조성한 것 가지고 나중에 현대건설, 현대투신 문제가 생기면 이것으로 투입할 것이냐 아니냐 물었더니 ‘현재로서는 투입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투입할 생각이 계신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우선 지금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어떤 면에서는 금융과 기업부실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담은 연별로 평균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이고 지금 공적자금 추가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도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은 똑 같습니다.

유동성 문제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신규자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도처리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관련되는 소위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겠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런 것을 의제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李漢久委員 만일에 현대가 그런 일이 있으면 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조성한 자금 가지고 원래 투입하려고 했던 데는 투입할 여력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제가 그전에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11월3일 52개 기업정리,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하는 것으로써 약 3조원 정도의 추가 요인이 생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개 업체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추정상황은 3조 내지 6조원 정도의 추가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3조 내지 6조원 정도는 저희가 투입요건을 엄격히 하고 회수노력을 극대화해서 승인해 주신 40조 추가동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니까 현대건설, 현대투자증권 포함해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만일의 경우에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면 마지막 두 가지 질의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추가 공적자금 동의요청할 때 마지막 1조5,000억을 보면 내년도에 예보공사채권 원금상환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금상환까지도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원래는 정부가 지급보증해서 이자는 그동안 지원해 줬고 원금도 정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공적자금으로 해서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것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의가 앞으로 몇 년간 원금상환을 계속 못 할텐데 그러면 계속 공적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는 예산으로 할 것이냐, 공적자금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것은 이런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보공사가 회수를 해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그때는 예산을 통해서 보전을 해야지요.

그러나 현재는 예보공사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1조5,000억의 원금을 바로 예산에서 집행해 준다면 그만큼은 국민의 현실적인 부담으로 바로 오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해서 예보공사의 운용 과정에서 분명히 그만큼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것은 예산조치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李漢久委員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지요. 2002년, 2003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때 상황이 2002년이면 대충 5조이고 2003년이 되면 21조인데 그것을 무슨 재간으로 감당을 할 것이며, 그것을 감

당을 못한다고 보는데 그때 못하면 그때도 공적자금입니까, 예산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공적자금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李漢久委員** 그러면 다음 장관한테도 인계가 되는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때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2002년까지 예보공사가 운용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정책을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李漢久委員** 그런데 사실은 공적자금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금융구조조정입니다. 뒷바라지해 주는 것인데 예보공사가 감당 못하는 일을 한 것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에 원가가 되고 원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 공적자금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수비율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세금은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관님들은 그렇게 하면 편할지 몰라도 다음 장관들은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런데 위원님, 내년 예산에 1조5,000억을 넣어주면 그것도 국민의 부담입니다.

○**李漢久委員** 물론이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오는 것을 극소화시켜야 합니다.

○**李漢久委員** 제 이야기는 이것이 불가피해서 국민의 부담이 세금으로 는다면 다른 세출을 더 줄여야지요. 이것도 늘리고 다른 것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동안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陳 장관님이 즐겨 쓰시는 경영개선계획에 따라서 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문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계속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문책도 안 하다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문책한다고 떠드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과거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길래 그것을 믿어야 하느냐는 질의를 던졌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부진사유가 상당 부분 대우문제 등 현 경영진의 취임 이전에 발

생한 부실원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경영진 교체 등의 문책은 어려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해왔어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하나는 이번에 추가로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해서 110조원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우로 인한 것은 28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른 요인에 의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도 25조 내지 40조는 다른 요인이 분명히 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데 지금 내지를 앓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현 경영진 취임 이전에 발생한 부실원인에 기인하면 경영진 교체 등의 문책은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가 공적자금 추가 투입을 하게 된 가장 키는 지금 말씀처럼 대우로 인해서 약 28조 내지 40조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산건전성을 FLC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요인들이 주가 됩니다.

○**李漢久委員** 그것도 18조 밖에 안 돼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서면답변을 드린 것은 지금 대우문제가 터져서 부담을 지는데 그 행장들은 대우문제 이후에 수습하러 들어간 행장을 전반적으로 왜 그 은행기관이 제대로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을 못했느냐는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그 문제로 바로 직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구요.

앞으로 운영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는 상시퇴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야합의를 해가지고 정치자금관리특별법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운영시스템면에서 투입·관리·회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漢久委員** 지금 계속 원론적으로만 나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1년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MOU 이행 못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앞으로의 사유 전에 사실은 이제까지의 사유와 그것이 얼마든지 문제의 근본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딱딱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나 이것이에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지금 현재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이 들어가니까 정부운영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최고경영자의 선출방법에 있어서나 그 금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자율을 그만큼 줬다는 얘기는 경영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묻겠다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羅午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어서 빨리 끝었습니다.

○**金景梓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말씀하십시오.

○**金景梓委員** 민주당 金景梓 위원입니다.

李漢久 위원과 陳 稔 재경부장관의 토론을 즐기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정도에 지나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이 야당의 시간요구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제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무작정 토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되 발언총량제를 적용해서 가지고 저쪽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길게 얘기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받아 가지고 하시도록 하세요.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야당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委員長 張在植** 사건 전에 더 많이 줬지요.

○**金景梓委員** 아, 그렇습니까?

○**委員長 張在植** 예,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사건 전에도 우리 李漢久 위원이 30분을 했어요.

○**金景梓委員** 앞으로 엄격하게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건설교통부차관 계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景梓委員** 자료요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야당위원들의 질의를 여기 앉아 있던 회관에서 TV를 통해서 배정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화제에 오른 것이 신전주공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죽 듣고 있는 동안에 전주출신의 한 시민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야당사람들이 전주공항을 가지고 저렇게 야단법석인데 이것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명예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이에요. 전주시민이 진짜 그 공항이 필요한 것인

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북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景梓委員** 두 번째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고?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景梓委員** 그 보고서가 다 있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景梓委員** 그러면 용역을 준 규모,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원, 지금까지 돈을 얼마 냈고 앞으로는 얼마 낼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군산공항과 신전주공항 예정지가 직선거리로 27km밖에 안 됩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金景梓委員**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두 개의 보고서가 많은 사람을 납득시킬만한 연구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있습니다.

○**金景梓委員** 그것 언제까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金景梓委員** 이것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주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개별적으로 신청하기로 하시고요.

우리 야당위원들 보셨지요? 제가 여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야당위원들께는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도 우리 李漢久 위원님이 30분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위원들도 앞으로 위원장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羅午淵 위원, 진짜 실력가인데 짤막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羅午淵委員** 羅午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계시지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차관이 있습니다.

○**羅午淵委員**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부산신항과 광양항 2포트시스템으로 기본구도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예, 그렇습니다.

○**羅午淵委員** 그런데 2포트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고 그러면서 부산신항의 경우에는 금년 2000년도에 무려 32.5%나 예산이 삭감이 되고 광양항은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편파적으로 배정이 된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도 부산신항은 0.5% 그러니까 1,664억원에서 1,673억원으로 근근히 0.5% 늘어난 반면에 광양항은 20.6%가 늘어났습니다. 340억원에서 41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도 2포트시스템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투자규모비율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면 부산항 같은 경우는 2001년도가 1,977억원이고 광양항은 411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신항이 다소 늦어진 것은 호안공사 1공구, 2공구사업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민자사업이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羅午淵委員** 예산배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양항 위주로 건설이 되고 부산항 건설은 자연히 뒤로 밀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균형 있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서 효율이 더 큰 항만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羅午淵委員**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이 안 계시면 차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羅午淵委員** 토요일 제가 질의한 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과 언양 구간이 공사가 착공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일부 나간다고 하지만 다섯 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시급한 데가 제일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역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량 추세를 보아서 착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이 부산-언양 구간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羅午淵委員** 실시설계 용역이라니? 설계가 끝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쯤 전에 그때 예산에서…… 제가 바로 예결위원하면서 설계비를 도로

공사에 40억의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4년쯤 전에 설계비가 지원되어서 설계 끝난 지가 벌써예요, 벌써…… 몇 년 전인데 왜 아직까지 실시설계 운운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차관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공사에 왜 착수를 안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도 있고 해서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羅午淵委員** 다른 데하고 한꺼번에 다섯 군데가 책정되어 있던 것인데 다른 네 군데는 전부 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다른 데와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겠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羅午淵委員**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그동안에 부동산, 특히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으로서 독점 이윤을 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00년6월 기준으로 볼 때 부채비율이 360%이고 부채규모가 10조 7,000억입니다.

어떻게 해서 토지공사가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고 부채가 이렇게 많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토지공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 꾸려나가는 공기업인데 매입된 토지를 공사를 해서 상품화해서 매각해서 자금이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IMF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현물은 있는데 매각이 제대로 안 되어서 현재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상당히 부채규모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羅午淵委員** 제가 보기에는 토지공사가 그동안에 경영을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짊어지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토지공사의 사옥을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엄청난 규모로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꼭 해야 할 데는 돈을 안

쓰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지금 토지공사가 예를 들어서 양산 신도시 개발 계획, 330만평을 5년 쯤 전에 농지 전부 다 사들여서 지금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 제대로 추진 안 하고 도로나 이런 것도 계획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그런 가운데 북한 지역에 나진·선봉지구, 개성공단 조성을 하겠다 하는데 토지공사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겠어요.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토지공사 자체 돈으로 할 계획입니까?

한 가지라도 떠벌려 놓은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또 화성 신도시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현재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羅午淵委員 토지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예가 많습니까는 이미 떠벌려 놓은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데 새로 해야지 떠벌려 놓고 하나도 제대로 추진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다른 데 투자하고 그러면 투자의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방만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공 자체로서도……

○羅午淵委員 제가 질의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서 가지고 떠벌려 놓은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權琪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지금 시간 관계로 재정경제부에는 서면으로 세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산업자원부 예비비 210억 삭감해야 한다는 부분과 벤처지원예산 1조원을 삭감해 가지고 엄격하게 선별 지원하라는 것을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한 건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수십 차례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본위원이 이의부당성을 15대 국회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鄭德龜 산자부장관께서 주민이 반대하면 원전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9년도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미국은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전력의 필요성 이상으로 심각한 원전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원전 건설을 중단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할 입장이라면 그 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울산의 서생면은 원전 건설의 적지가 아닙니다. 원전건설을 해서는 안 될 제1순위 지역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반경 20km 이내에 우리나라 최대의 울산공업단지가 있을 뿐 아니라 반경 10km 이내에 온산공단과 양산공단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경 20km 이내에 백만 울산시민과 삼십만 양산시민이 살고 있으며 반경 40km 이내에 사백만 부산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항구인 부산항이 반경 40km 이내에 있으며 반경 15km 지점에 울산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서생지역은 지진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양산단층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울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천개의 송전탑을 건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이 무려 3조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첩탑으로 인한 생활의 피해와 추가비용이 극대화되는 지역이 바로 울산입니다.

여섯째, 울산 인근지역은 공해가 전국에서도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또 핵발전소를 추가건설할 경우에는 울산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곱째, 세계각국의 반핵단체에서 방사능 오염가능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생산품이 불매운동 대상이 될 경우에 울산과 국가경제에 미

치는 피해는 IMF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여덟째, 울산은 현재 고리원전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오류년 뒤에는 원전지역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전을 건설한다면 울산은 또다시 삼십년 동안 원전으로 인한 위험지역 제1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울산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위원은 분명하게 다시 지적해 둡니다.

스리마일 핵발전소 폭발사고 당시 미국의 백악관 조사위원회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다고 결론지었던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대형폭발사고만 해도 79년도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와 86년도 소련의 체르노빌 폭발사고 등 두번씩이나 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대만에서 원전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크고 작은 방사능 피폭과 원전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2일 울산의 한 비파괴 검사기기 업체에서 극소량의 방사능 피폭사건이 발생해서 인근 지역과 주변도로의 통행을 장시간 제한했고 지금까지도 건물 주변에는 인적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400여기 원전 중에서 큰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형사고비율이 0.5%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율은 100만 비행시간 대 1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비행기보다도 몇 백배씩이나 사고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울산의 서생지역에 원전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에서 원자력문화재단에 8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해마다 전력요금을 인상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낭비를 일삼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에 거액을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을 중단토록 해야 합니다.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원전건설을 절대적으로 회피해야 할 지역인 울산 서생에 원전건설을 강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43회에 걸쳐서 1,699명을 국내와 외국에까지 원전시설을 시찰시켰습니다. 지난해 해외

여행 비용 2억220만원과 국내비용 9,600만원을 울주군민 1,213명에게 지원해서 무료로 해외 또는 국내여행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의 고리본부에서 99년 5,467명, 올해 10월까지 3,277명 등 1만82명의 울주군민을 초청해서 횃집 등에서 4,257만원의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부터 277회에 걸쳐서 총 울주군민의 10%에 해당하는 1만4,572명을 초청해서 횃집과 식당에서 향응을 베풀었으며 해외무료여행을 수없이 실시하는 등 낭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건설예정지에서 거액의 토지보상을 받기 위한 극소수 수혜자를 제외한 100만 울산시민들은 서생 원전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의회는 원전건설 절대반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울산시민 13만 5,000명이 서명을 해서 원전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 석유비축기지와 모든 산업원료 및 중공업과 화학공단이 밀집해 있는 울산지역에 원전을 건설해서 국가의 장래에 크나큰 재앙의 가능성을 잠재시켜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장관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훗날 사고가 발생해서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후손들로부터 辛國煥 산자부장관이 울산에 원전을 건설토록 했다는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서생면의 원전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적지를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權琪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저도 동감하고 하도 좋아서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아까 한나라당 羅午淵 위원님의 발언도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 토지공사에서 시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을 주면서도 사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챙기세요. 여기서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건교부장관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질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잠시……

○權五乙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정회했다가 속개할 때 하시지요?

○**權五乙委員** 지금 질의가 끝났다고 하시니까……  
○**委員長 張在植** 아닙니다. 양당 간사 간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하시지요?  
○**權五乙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잠시 정회했다가 9시15분에 속개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이따가 하시지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權五乙委員** 나중에 답변 듣기 전에 제 질의 기회를 주십시오.  
○**委員長 張在植**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서에는 있었는데 안 오셔서 못했기 때문에……  
○**權五乙委員** 농가부채 문제 때문에……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9시15분에 속개해서 權五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회의중지)

(21시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權五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委員**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삼사일 동안 농가부채문제 때문에 예결위를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답변이 있었으면 답변이 있었다고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월댐, 한탄강댐, 평화의 댐 그대로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영월댐은 10월 24일 안 하기로 결정났습니다.  
○**權五乙委員** 한탄강댐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한탄강댐은 임진강수계종합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내년에 실시설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하기로 했습니까?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예, 지금 임진강의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權五乙委員** 평화의 댐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평화의 댐은 지금 건설된 그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영월댐의 실시설계비라든지 평화의 댐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지요?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영월댐에 대한 5억원의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지만 평화의 댐은 북한의 금강산댐이 지난 11월에 완공되어서 북한 금강산댐의 여러 가지 추이를 보아 가면서 그것을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북……  
○**權五乙委員**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유지관리비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실시설계비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한탄강댐에 대해서도 군작전 지역이 많고 취약한 현무암으로 이어져 댐의 입지 조건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실시합니까?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그런 것은 대부분 감안되어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건교부 예산 중에 계획했다가 취소된 댐, 평화의 댐 유지관리비, 한탄강댐 실시설계비 30억6,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평화의 댐 유지관리비는 현재 그 댐을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영월댐은 삭감해도 됩니까?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예, 그렇습니다.  
○**權五乙委員**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이 되든 여기에 의견을 남겨놓겠습니다.  
○**建設交通部企劃管理室長 秋秉直** 예.  
○**權五乙委員** 이어서 산자부에 묻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대체산업 창업지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있었습니다.  
○**權五乙委員** 본위원이 보니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예산대비 불용액이 훨씬 더 많네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20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필요합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창업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에 폐광지역의 산업 입지 여건이 불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99년도에는 300억원 책정에

23억원을 써서 불용액이 270억원이고 2000년도에 400억원 책정에 24억을 써서 불용액이 375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폐광지역에 갖추어야 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갖추어짐과 동시에 이것을 지원하니까……

○**權五乙委員**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뿐만 아니라 98년·97년·96년 전부 다 예산은 300억원, 500억원, 400억원, 300억원, 400억원 이랬었는데 지원된 금액은 한 30%밖에 되지 않아요. 1년치만 아니라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내내 예산책정 대비 지출이 한 30% 되었다면 똑같은 논리로 2001년도에도 200억원 중에 30%면 한 육칠십억원 책정하고 한 130·140억원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지난 8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보령지역이 추가되어서 이제 몇 년 동안에 대체산업지원을 해주고 끝을 내야 되지요.

○**權五乙委員** 대체산업창업지원을 받는 업체는 이것도 일종의 혜택이고 특혜입니까, 어떻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일부는 용자를 하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계수조정소위에 삭감요인으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의견을 올릴 테니까 계수조정소위에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5년 내내 거의 2,000억원 책정했는데 지원율은 약 30%로 한 600억원밖에 안 되고 1,400억원이 불용액인데 2001년도에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불용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하여튼 본위원은 삭감의견으로 계수조정소위에 올려놓겠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權五乙委員** 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보니까 2000년 예산은 500억원인데 집행은 104억원 했는데 맞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600억원 계상했네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99년은 부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억원 중에 최근까지 477억원이 집행되어서 500억원을 다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외국인투자를 제대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權五乙委員**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각 부처 산자

부,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가 관계 있는데 농공단지 지원예산도 2001년도에 53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원래 2,600억원 중에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농공단지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림부가 관장을 하다가 최근에 저희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로 이관된 이유는 지방공업단지, 국가공업단지에 산업이 제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환경을 보완할 것은 해서 단지를 활성화하라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530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농공단지를 일체히 정비하고 또……

○**權五乙委員** 2001년도의 53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씩 더 주어야 되는지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본위원 지역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산이 늘어나는데 반대할 수도 없고 예산대로 하면 분명히 들어올 공장도 없고 예산만 투자하고 사장이 될 텐데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2001년 예산에 530억원 해냈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 투자할 것이고 그 지역의 입지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저희는 신규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權五乙委員** 기존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농공단지가 미분양된 것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도 다시 신청한다는 말입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나오셨습니까?

한·중어업협정을 빨리 타결해야 되는데 중국측의 주장은 중국 황하라든가 중국대륙에서 내려오는 모래 등 중국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인 층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중간선을 긋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예, 알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렇게 중국의 논리대로 하면 한국과 중국의 중간으로 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쪽 훨씬 가까이에 중간선이 그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알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그 문제는 중국의 주장이고 UN해양법 72조에 보면 대륙붕경계획정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경우 양국 협의에 의해서 경계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쉽게 말씀드리면 해양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해퇴적물을 가지고 중간선을 긋겠다고 주장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결과는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 밀려간 퇴적층도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조사하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조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한·중관계의 퇴적층에 대해서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權五乙委員** 3억을 가지고는 조사의 3분의 1밖에 커버가 안 된다던데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일단 작년도에 3억 정도 투자했고, 물론 예산이 좀더 많으면 금년도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權五乙委員** 빠른 시일내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돈 몇 억 아끼다가 바다 다 잃지 마시고, 주장하세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장하시는 어업협정과 대륙붕경계획정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 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더 빨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오늘 재경부라든가 기획예산처는 안 나오니까?

○**委員長 張在植** 기획예산처는 안 나오고, 재경부는 나와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조 예산중에 총액예산이 약 10조로 한 10%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액계상사업이 8조7,825억, 국정원 본예산이 2,440억, 국정원 조정기획업무 203특수활동비가 약 2,000억, 예비비중 국가안전보장활동비가 약 9,000억,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104억, 총계가 10조 1,369억이나 됩니다.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물론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총액

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이제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있으면 건교부든 정통부든 산자부든 총액예산의 내역은 국회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001년도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와있어요. 사업수 및 예산규모가 2001년도는 49개 사업에 8조7,825억, 2000년도는 42개 사업에 8조 4,152억, 99년도는 38개 사업에 7조6,948억…… 거의 예산의 10%가 됩니다.

물론 각 부처마다 투자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내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총액예산으로 책정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고, 또 각 부처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국회심의를 받아서 나중에 예산편중시비라든가, 자의적 집행시비가 없도록 예결위원장께서 각 부처에 주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그것은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수십 년 내려온 관례이기 때문에 양당 간사간에 협의도 있어야 하고, 신중히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무슨……

○**權五乙委員** 그런데 10%는……

○**委員長 張在植**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 혼자 권한으로……

○**權五乙委員** 이렇게 100조 예산 중 10조를 총액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張在植** 그것은 금년뿐만 아니고……

○**權五乙委員**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예결위가 상설화되었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이제까지 쪽 내려온 것을 꼭 좋다고만 할 수 없지만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위원장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權五乙委員**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 되어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는 총액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편성내역을 수시로 보고하고 심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계는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질의종료메모가와 있습니다. 제가 사흘 나흘 동안 계속 그 문제로 여야협의를 하는데, 농림부장관계서는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저희들은 내놓으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재경부장관계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적자금, 공적자금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싸여 있는 농민들 입장, 올해 농산물 값이 없어서 실제로 원금은커녕 이자 갚을 돈도 없습니다. 또 농촌의 주 생산계층인 30대·40대·50대가 부채가 많다는 문제, 농사 지으면 다른 산업보다, 다른 직업보다, 다른 일거리보다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재원을 꼭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밑에 사람들은 장관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는데, 그것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장관 나름대로 소화해서 요약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吳長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沈揆喆委員** 서면답변하시는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렇게 해주십시오.

李在昌 위원님께서 저희 재정경제부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연구개발사업비예산, 국내경제홍보활동비예산, IBRD 해외훈련사업예산, 산업은행 출자, 주택신보 평가와 2,000억 출자가 꼭 필요한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기금 중 법정장려금의 농어민에 대한 실효성과 과거실적 및 정부출연의 의미, 2002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예수금이 1조5,647억 감소한 사유, 국세청 예산에 출장여비 등 업무활동비 계상 및 전산과학 세정예산의 편성이유, 조달청 예산 중 문화상품관련 9,7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압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예,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주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申溪輪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朴世煥 위원님께서 어음보험제도의 지원대상 확

대 및 기본재산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鈞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金龍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鄭亨根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도록 한 것은 연기금의 손실위험만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과 연기금 전용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1989년도에 12·12라 해가지고 그때는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투신을 통해서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발표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자율과 책임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기금에 대해서 누가 증권시장에 얼마를 투자하라는 것을 명할 수도 없고 그런 명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중장기적 수요기반이 부족한 데서 오는 증권시장의 취약성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약 30%의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일부 블루칩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수요는 어떤 면에서는 단기투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권시장이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연기금도 그런 측면에서 증권시장에 중장기 투자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혀놓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정부가 무슨 주식 사라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기금의 중장기적인 주식투자 제한요소를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는 것은 연기금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약 1조5,000억원의 연기금이 증시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연기금이 증권회사



와 투신사를 포함한 몇 개 회사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누가 그 연기금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냐 판단해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필요 이상의 연기금을 주식투자해 가지고 손실을 보고 하는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기금이 증권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琪述委員**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에 본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까지 직접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평균손이 10월말 현재 1조6,000억, 매매손실 333억 해서 1조6,333억 정도 손실이 생겼고 간접투자에서 1,666억원 정도 해서 그동안 1조8,000억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직접투자가 훨씬 더 마이너스가 큼니다.

연기금이 자율적으로 목적사업을 하고 또 운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식에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재경부 방침으로 증시활성화를 위해서 연기금 투자를 권장한다든지 주식투자로 인해 손해를 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기금 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책임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활성화를 위해서 연기금으로 하여금 증시에 뛰어들게 유도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 자율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지금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조5,000억원 중에서 현재 1조1,4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 1차의 경우는 2,600억원 투자에 40일 동안 수익률이 0.5%, 연 환산수익률로 하면 4.6%입니다. 연기금 2차는 3,800억원에 운용을 9일 했는데 수익률이 2.3%, 연이율로 따지면 93%, 이렇게 해서 기금마다 그 특성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인 수익률을 가지고는 오히려 내리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기업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해서 연기금이 일반 예금금리보다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기금 스스로 찾아서 투자하도록 하

는 길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강제로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10월말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을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이 3조2,038억원, 간접투자가 1조1,772억원 해서 4조3,810억원을 투자했는데 결국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 투자손실이 1조8,000억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0월15일인가요, 재경부에서 연기금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연기금 전용펀드를 설정하고 주식투자로 손해를 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증시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증시가 너무 폭락하니까 연기금으로 하여금 증권시장에 개입해서 증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정부의 뜻에 의해서 이용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피했으면 좋겠다 완전 자율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전적으로 맡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연기금 제도하고 우리 연기금 제도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은 연기금이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이 시가총액의 24%를 차지합니다. 또 연기금으로 중장기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1%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권시장은 건전화되고 증권시장이 더 탄력을 받거든요. 그렇게 힘이 모아지면 연기금이 들어가서도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인데 여하튼 **權琪述** 위원님 말씀처럼……

○**權琪述委員** 증권시장이 안정화되고 나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서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權**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성을 100% 주고 있습니다.

○**權琪述委員**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상당히 연기금으로 하여금 증시에 참여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경부 방침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난 10월에 2,200억원, 우체국보험기금은 11월에 2,000억원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파악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적으로 연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알겠습니다. 연기금이 증권투자자에 많이 들어오도록 권장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운용의 자율성은 연기금에 맡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되는 회사채 규모가 25조원에 달한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안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되는 회사채 규모가 총 2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발행했던 것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 중에서 4대 그룹 분이 약 11조원으로 4대 그룹 분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14조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9월에 조성된 채권형 펀드 10조 중에서 여유분 5조원을 여기에 추가해서 연내에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확보해서 상당부분 흡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번 국회에서 공적자금 추가보증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서울보증을 통해서 투신사에 지원함으로써 해서 투신사가 증권이나 회사채 매수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시에 지난 11월3일 52개 기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면서 나머지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자금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른바 채권담보보증권발행제도를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 대출이 별도로 지원되면 여타 기업에도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을 확충시킬 수 있겠다 하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재경위에서 세법을 심의하고 계십니다.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최소한 2조 내지 3조원 정도의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환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 1/4분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부도 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저희가 증권시장의 자금안정 대책 또 관련되는 채권은행을 통

한 자금지원 대책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담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그런 방향을 대충 제시해 주셨지만 회사채 신용이 워낙 떨어지고 불안하니까 전부 국채로 자금이 몰려 버립니다. 회사채는 막상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것을 또다시 순환시켜야 되는데 순환시킬 여력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신경쓰셔서 회사채가 제대로 순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예결위 답변장에 오지 못한 것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시장이 어려운 때는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신용보증기금에 회사채 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權琪述委員** 기대하겠습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권琪述 위원 다음 말씀은 국채발행을 줄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회사채의 시장침식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물음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종의 외상거래 아니겠습니까?

○**權琪述委員** 그렇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런데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같이 묶어져야지 외상만 가지고는 사업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국채발행으로 인한 회사채 침식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시기도 조정하고 또 한국은행이 발행한 금융통화안정증권, 이것도 시기가 내도되는 것을 바로 바꾸어 줌으로써 해서 전체적인 자금시장이 국채 시장과 회사채 시장이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저희는 그것을 보고 파인 튜닝(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국민연금이 국채 10조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이처럼 국채를 많이 인수하게 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 내년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도 이른바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국채인수 쪽으로 많이 운용할 그러한 경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일정금액을 공공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의무예탁제도를 전부 없애버렸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운영의 주체는 위원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알아서 해주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도 가능하면 너무 국채시장으로 가 가지고 다른 데 자금이 주름살이 많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權琪述 위원님께서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비과세하고 있고 주택보유자 중의 약 90%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2주택 이상 소유자, 즉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 계층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과의 과세의 형평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금년 9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신축 분양주택 취득을 위해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의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현재 정기국회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장관님, 말이지요. 물론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하고 실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택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거래를 위축 시키기보다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 거래세를, 보유세를 강화해 가지고 오히려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委員**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것 말이지요. 본위원도 국정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던 세금징수문제 말이지요, 부산·대구에서는 부도율이 매우 높고 실업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참한 상황에서 작년 8월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산이 33%, 대구가 33.1%의 세수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화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인 편중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광주의 경우에는 10% 정도입니다. 여기는 부도율도 낮고 실업률도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수를 무리하게 올리는 경우에 이것이 또 내년에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 101조원의 예산을 염출하기 위해서 참 고생하는 기업들, 국민들 계속 쪼아붙여야 그 돈을 조달할 텐데 이렇게 지역편중된 무리한 세수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세금의 징수 내지는 세무행정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세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사하고 징수유예 등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건수 및 세수의 지역간 격차는 그때그때 세수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金容鈞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청의 경우에는 대규모 정유회사가 소재하여 작년 12월말 납기의 교통세 등이 Y2K로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금년도 세수가 증가한데 그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2K 이월로 인해서 약 1조6,000억원인데 이것은 교통세, 특수세, 교육세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정 더 필요하시다면 국세청을 통해서 상세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 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이상으

로 세무조사나 세금징수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설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委員** 여하튼 세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세법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알겠습니다.

○**沈揆喆委員** 제 질의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러실까요?

沈揆喆 위원님 주신 질의입니다.

먼저 첫째 질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 주관입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금년 연말까지 공기업 사장님들의 경영혁신 상황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연내에 경영혁신 실적이 부진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등 인사·경영상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이제까지도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충실하게 사장추천위원회를 활용해서 전문경영인, 기획성 있고 경영혁신 능력이 있는 인사로 하여금 공기업의 책임을 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揆喆委員** 사장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원래 공기업 사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기 전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 제청 건의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沈揆喆 위원님께서 담배인삼공사 주식이 2만6,000원에서 최근 1만8,000원으로 하락하였는데도 민영화를 위한 주식매각을 계속할 것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고 농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제조독점권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담배인삼공사 주식가격 추세와 민영화 속도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2만6,000원에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매각했는데 전반적인 증권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현재 1만8,000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는 외국에서 DR을 발행하는 경우나 국내에서 일반공모를 통해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1998년에 정부가 확정된 담배인삼공사 민영화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매제도를 폐지하면 담배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담배제조회사한테 주겠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민영화를 했습니다.

때문에 민영화하고 외국의 DR 투자가나 국내의 주식투자자에 대해서 주식을 인증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민영화와 또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것은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또 걱정하는 앞담배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앞담배 재배경작자한테 최소한 5년 동안 앞담배 수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에 한해서 3년 동안 연장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은 앞담배 경작자에 대해서 가격과 구매를 저희가 확보해 주는 그러한 보장수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앞담배 경작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담배경작자 생산안정기금 4,000억원을 조성해서 협력하도록 담배인삼공사와 엮연초생산조합과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원칙대로 민영화하고 또 제조독점권을 폐지하는 노력이 같이 기울여진다면 담배인삼공사의 주가가 상당한 수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沈揆喆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채 및 공적자금 이차지급 9조5,000억과 관련하여 그 기준금리를 9.5%로 적용한 이유와 내년도 시장금리 전망이 어떠한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이차지급 관련 산출근거를 9.5%로 적용한 것은 금년 3월 말 국채 3년짜리가 9%, 국채 5년짜리가 9.45% 해서 12월8일, 최근까지는 국채 3년짜리가 약 6.8%, 국채 5년짜리가 6.9%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자금시장이 수익성보다는 안전성 기준으로 자금이 이동하다보니까 국·공채 이차율이 낮아진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9.5% 정도의 국채발행 금리를 예상하고 가는 것이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내년도 금리전망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는 내년도 금리가 현재의 적정한 금리 내지는 저금리 수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시중금리전망은 경

세운영의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바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부진하다면 금리는 그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고 전제한다면 금리상승요인도 저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揆詰委員 그런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내년도 금리가 어쨌든 올라간다는 확실한 전망은 안 보이고 주식시세도 올라갈 것 같지 않다면 자금이 국채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채 이자율이 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보셔야지요, 금년 3월말에 3년짜리 국채가 9%, 5년짜리 국채가 9.5%였습니다. 이것이 11월말에는 7%, 7.3% 떨어지는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가 발행할 국채는 가급적이면 10년짜리 장기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채면 장기채일수록 단기채보다는 금리가 높아가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9.5% 정도를 좀 신중하게 여유있게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揆詰委員 여유있게 잡으신 것이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조금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容鈞 위원님께서서는 민간 대기업의 국가지정연구실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할 우수한 연구시설을 또는 연구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있는 산·학·연의 과학기술자원을 총집결해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사업입니다. 이를 떼면 반도체, CDMA, 위성발사체, 항공기, 나노소자 등의 기술개발은 대규모의 인력과 시설이 없으면 착수조차 할 수 없는 분야로서 사실은 이것은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참여는 고급인력, 첨단장비 등 국가 과학기

술자원을 총동원 활용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지정연구개발사업에 사전에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지정연구실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이를 떼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에는 정부의 출연연구소가 모든 기술개발을 주도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대학과 기업이 참여해서 참여폭이 넓어졌고 앞으로 2000년대에는 연구개발로부터 시험, 평가, 품질보증, 생산, 일체의 모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일체화된 과정을 역시 최종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주도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나 이런 기술개발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진국에서 택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투자가 큰 규모일수록 초기단계에서는 연구소와 대학이 주도하던 것을 실상품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기업의 연구인력을 유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하자는 전략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金容鈞 위원님께서서는 두 번째 질의로서 울산 방사성동위원소 오염사고 이후 방사성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새벽에 발생한 방사성동위원소 오염사고로 인한 주변시민의 방사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방사성 영향은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고를 일으킨 작업자도 방사성에 노출되었으나 염색체 검사결과 급성 방사성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서 방사성 안전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요령과 사고 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씀이면 그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상 金容鈞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농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께서 임도건설은 환경과 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산불방지나 육림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전에는 적은 사업비로 시공한 일부 임도에서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으로 전환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참고로 임도의 경제성은 약 1.6으로 B/C율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설치로 인한 경관재해와 피해발생이 없게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겠으며 기 설치한 임도를 지속적으로 보수해서 임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沈 위원님께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산불위험은 높으나 산불감시원의 배치가 곤란하고 감시범위가 넓은 주요 산위주로 설치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 4개소에서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조기발견으로 해서 초동진화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무인감시카메라 1대 설치가 약 25명의 산불감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金元雄 위원님께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성장과 개발의 안목에서 보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환경과 보전의 시각에서 보는 측면이 있는데 상호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정책적인 접근방법으로 해서 새만금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새만금 내부간척지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발이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새만금 내부간척지 용도는 농지이고 앞으로도 농지로 조성한다는 정부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가 96년4월과 97년4월, 1년 동안에 농림부와 사전협의 없이 산업연구원에 복합산업단지개발안을 자체 용역을 주어서 농림부에 건의해 왔으

나 복합산업단지는 새만금사업의 기본취지와 달라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97년8월에 공식통보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사업비는 99년 가격으로 해서 보상비를 포함한 방조제사업비가 1조7,337억원, 내부개발비가 추산으로 해서 1조3,152억원, 합계 총 3조489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1조221억원으로서 방조제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59%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내부개발을 포함한 전체공정으로 볼 때에는 34%가 진척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감사원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2012년의 가격으로 추산한 사업비를 5조9,530억원 그 가운데 방조제를 2조2,930억원, 내부개발비를 3조6,600억원으로 해서 추계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물가변동 등에 따라서 가변성 있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사노임 등의 하락으로 해서 내부개발비가 일부 감액된 예도 있기 때문에 98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변동 요인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5조9,000억원은 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합산업단지의 소요사업비 28조원은 정부계획에 아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화호와 새만금호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시화호의 수질관리 실패 이유와 새만금호 수질여건 및 전망 그리고 클로로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李在昌 위원님께서도 친환경적 수질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의 수질관리 실패 이유는 COD를 보게 되면 해수유통폭이 전에는 COD 수준이 아주 나빴습니다마는 그뒤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담수호의 물순환주기가 새만금호하고 시화호를 보면 시화호는 물순환주기가 약 10개월이고 새만금호의 경우는 설계상 2.5개월이 되어서 새만금호의 한 4배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산업폐수의 발생량이 많고 인구밀도도 약 3배, 산업폐수 발생량은 약 10배가 시화호가 되겠습니다. 또 유역면적이 시화호의 경우는 적고 오염원이 호수주변에 인접해 있는 것이 환경부하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염 암거가 깊숙히 설치되는 되어 있었으나 어민 등의 반발로 해서 가동되지 않아서 저층

수 배제를 하지 못 했던 것도 큰 오염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만금의 경우는 2개소의 제염 압거를 설치해서 호소 내 오염수 전체…… 이전인 끝물막이와 동시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새만금호와 비교할 때 시화호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새만금호의 수질여건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내 다른 담수호와 비교할 때 호소의 특성이나 상류지역의 오염원 및 처리실태 등을 고려할 때 영산호나 또는 담양호 정도의 수질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보다는 모든 면에서 수질관리 여건이 유리하고 새만금호 물 사용 시기 자체가 앞으로 10년이 넘는 2012년이기 때문에 사전대책을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고 또한 내부지역 생태습지 등 타 담수호에 없는 추가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관계기관과 주민 등이 합심해서 수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에는 농업용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장관님, 지금 새만금호의 수질이 문제가 없다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환경부가 지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만경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거기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만경호가 지금 상태로는 어느 강보다도 시화호로 내려오는…… 금강, 어느 강 보다도 인의 TP평균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만경호가 1.0mg이니까 나쁜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용수에는……

○**金元雄委員**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용수에 인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이 많을 경우에 이것이 부패를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클로로필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부패하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가지고 기준치 한계선을 딱 맞추었어요. 지금 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리터당 0.1mg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모든 수단방법을 다 강구했을 때 그 기준을 간신히 맞춘다 이런 자료인데 그

모든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의욕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그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전주·김제·완주 이런 전주권의 그린벨트를 녹지로 전부 다 뚫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전혀 산업화에 제동을……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당호와 관련되는 여주, 양평 이쪽의 수변구역과 똑같은 규제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 안에 농경지 시비량을 30%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축산분뇨 94.5%를 줄이고 전체를 퇴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축산분뇨를 94.5%를 하려면 농가가 전부 몇 개월분의 축산분뇨를 보관하는 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 또 이것을 운반하는 것…… 그리고 축산분뇨 94.5%를 줄일 수 있다, 거의 완벽하게 줄인다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이것이 환경부의 얘기입니다.

금강 쪽에서 물줄기를 이쪽 만경강으로 돌려 가지고 만경호로 유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유입시키는가 하면, 자료에 의하면……

○**農林部長官 韓甲洙** 갈수기에 유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金元雄委員** 갈수기만이 아니라 평소 때까지 다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 상류에 지금 용담댐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4억t의 물을 금강에서 돌려서 전주 쪽에서 식수로 쓰면서 넘어오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금강 하류에서 또 5.8억t 가량의 물을 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4억t을 가져오는 것도 대전, 충남 이쪽에서 다 반대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金元雄委員** 이 내용은 용담댐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지역감정으로 번지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금강에서 가져오는 것 말씀이지요?

○**金元雄委員** 용담댐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3을 금강으로 보내고 7을 이쪽 전라도 쪽으로 보낸다

고 하는 얘기입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金 위원님, 제가 과거에 환경부에서 근무했다는 것 아시지요?

○金元雄委員 예, 말씀하세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저도 환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金元雄委員 그런데 갈수기에만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갈수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지금 3 대 7이라고 하는 비율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갈수기입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갈수기입니다.

○金元雄委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하류에서 지금 5.8억t 가량을 매년 만경댐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류에서 금강호에서 연결되는 물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강 하천 생태계가, 1년에 10억t 이상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쪽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금강의 수질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금강 하구에 있는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그리고 제가 충남도 쪽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강호에 있는 물을 만경강으로 돌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금강호의 물을 돌리는 것은 충청도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겨우 채우는 것이, 그런 모든 방법을 다 채우는 것이 지금 수질의 상한선, 오염의 상한선 제한을 간신히 채우는 것이 지금 환경부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걱정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화호도 정부에서 할 때는 그댐 막아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환경오염장치를 만들고, 총량오염제 만들고 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놓았는데 금방 문제가 생겼잖아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시화호 때의 국민적인 환경인식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부의 관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금 위원님께 한 가지 제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으니까 저희가 아주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는데 제가 하나 제의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금 위원님하고 이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아주 전문적으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국회 안에서 토론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金元雄委員 그 문제는 국회가 아니라 지금 새만금, 예를 들면 동강댐 건설 문제가 단순히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새만금문제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까지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결정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실 것은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공청회를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까라는 관계 전문가들,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의 장을 별도로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元雄 위원님, 한 30분 세미나를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만 하시고요.

○金元雄委員 됐습니다. 잠깐만 제가……

○委員長代理 丁世均 이제 그만 하시고요. 또 우리……

○金元雄委員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丁世均 농림부장관께서 다음에 기회를 가지겠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하셨으면 된 것 같습니다.

○金元雄委員 아닙니다. 丁 위원장님, 지금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1964년도에 착공해서 이미 37년간 진행되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나카우미 간척사업이 거기에 있는 호수를 자신 있게 정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금년에 백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거기에도 우리 직원들을 직접……



○**金元雄委員** 우리가 지금 이것을 10년 동안 해서 이미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 못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37년간이나 진행된 사업도 금년에 완공단계에서……

○**金聖順委員**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리고 장관님에게도 답변하실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 혼자만 세미나를 하시는 것 같아요.

○**金元雄委員** 아니, 세미나가 아니라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金聖順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예결위는 여러 위원님도 함께 계시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장관께서는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시지요.

金元雄 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金元雄委員** 아니,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난 9월과 10월에 서울 강남과 분당에 57만부의 농업기반신문을 배포했는데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홍보내용이 담긴 신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신문을 왜 아무 관계가 없는 서울 강남과 분당 지역에 57만 부나 배포를 했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어느 지역에 집중 배포된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신문을 배포했다는 것을 차후에 들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동강댐이 문제가 되었을 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홍보를 위해서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낭비적으로 배포한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지요.

○**金元雄委員** 그런데 왜 농업기반공사는 지금 정부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하자고 합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정부의 지침인데 그리고 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이것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 강남과 분당에……

○**農林部長官 韓甲洙** 동강댐의 경우에는 농업기

반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지적된 것이 아니고 새만금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가……

○**金元雄委員** 이것이 금년 9월과 10월입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하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金元雄委員** 그런데 자기들이 중단하기로 했으면 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다만 그것이 그렇게 지혜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제가 사장에게 충분히 주의를 줬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리고 또……

○**委員長代理 丁世均** 자, 이제 그만 합시다. 金元雄 위원님……

○**金元雄委員**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는 조사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서 중단하느냐 계속하느냐 하겠다는 얘기를 해 놓고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착착 진행을 시켜 놓고 이만큼 진행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만큼 돈 들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성이라고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시킨 것이지 지금 착착 진행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金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저희가 국민을 기만해가면서 무엇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없고 현재 금년도에 쓰고 있는 예산,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현상유지를 위한 예산이고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金元雄委員**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59% 완료하였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金聖順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聖順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金元雄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金聖順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金聖順委員**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金元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어디서 하

는 것이냐 하면 환경연합회하고 서울대환경대학원의 김정욱 교수가 대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와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일본의 지역하고 새만금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그것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하는 확답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새만금 간척지는 그곳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고, 여기에서는 이쯤 하시고 공청회를 하자고 그러시는데 공청회보다도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장관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또 찬성하는 분은 찬성하는 분대로 주장을 하고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여기에서는 결정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지나가십시다.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文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金元雄委員** 제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委員長代理 丁世均**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맙시다.

○**金元雄委員** 길지 않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1분 하시면 됩니까? 확인입니까, 또 추가질의입니까?

○**金元雄委員** 간명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러면 정확하게 3분 드리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하시는 말씀이 99년도에 59%까지 완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金元雄委員** 예, 방조제를 기준으로 해서 5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99년입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99년입니다.

○**金元雄委員** 99년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가지는 작년 4월에 합의된 것으로는……

○**農林部長官 韓甲洙** 제가 알기로 방조제만 보면 98년도 59%입니다.

○**金元雄委員** 작년 4월에는 일단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자고 합의를 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된 것은 최소한의 현상유지 정도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金元雄委員** 그런데 금년 연말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66%가 완료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단한다고 얘기한 이후에 7%가 진행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장관의 답변을 믿어 주시지요.

○**金元雄委員** 그리고 제가 어제 가 봤더니 이것은 시설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1년 전에는 없던 배수갑문이 새로 완공되었더라고요. 그 배수갑문도 현상유지를 위한 것입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배수갑문은 이미 전문가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元雄委員** 착수는 됐지만 작년 4월 이후에는 중단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그것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元雄委員** 그 때는 기둥만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배수갑문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金元雄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는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방조제를 더 늘리는 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金元雄委員** 배수갑문은 더 추진된 것이죠. 아까 하신 말씀은 현상유지만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현상유지가 아니라 배수갑문은 지금 더 추가되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업을 일시 중지한다고 했던 약속을 정부가 깨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배수갑문을 하는 것은 이미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렇게 따지면 작년 4월에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승인이 난 것을 중단하겠다고 한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丁世均** 방조제를 추가로 더 나가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에요.

○**金元雄委員**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배수갑문은 진행하는 것이고 방조제 더 나가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에요.

○金元雄委員 丁世均 위원님께서는 사회만 보십시오.

○委員長代理 丁世均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니까지도 답답해서 그래요.

○金元雄委員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장관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어디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金元雄委員 지금 중단했다고 그랬는데 59%가……

○農林部長官 韓甲洙 방조제를 33km 가운데 19km 했는데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말씀이고……

○金元雄委員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배수갑문은 이미 시작되어서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마무리한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元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委員長代理 丁世均 순수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안 드립니다.

○金文洙委員 순수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말씀하십시오.

○金文洙委員 지금 이 새만금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 위원님, 약속이 틀린 데요?

○金文洙委員 새만금문제는 몇 년 전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연 3년째 국정감사 때마다 현장도 가고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에 1,13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134억원의 내역을 보면 공사하는 데 1,037억원이고 보상하는 데 97억원을 합쳐서 1,134억원입니다. 공사 부분은 방조제, 배수갑문, 수리시험 등이고 보상은 어업보상과 농지매수 등입니다.

그러면 방금 장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키고 나면 바로 또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조제, 배수갑문, 수리시험을 계속 강행하실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예산 통과되면 또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文洙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金文洙委員 짧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국회에서 제일 가는 신사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해놓고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만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 위원님!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누가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만하세요.

○金文洙委員 좀 들어보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거론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장관 계속 답변하십시오.

○金文洙委員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예산통과에 즈음해서 우리가……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文洙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金文洙委員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委員長代理 丁世均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한다니까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빨리 30초만에 끝내십시오.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시간 정해 놓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다른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金文洙委員 지금 이 새만금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총리실에서 제 질의에 두 번이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이나 하면, ‘수질개선기획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수질도 확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수질전문가 중에서 새만금의 수질이 확보된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질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고 또 전라북도 자체가 새만금을 막아서 수질이 확보가 안 될 때는 전라북도의 새만금 유역 그러니까 만경강, 동진강유역 전체의 발전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질개선기획단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1,134억원의 새만금사업비 2001년도 예산 전액을 일단 삭감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편성해 놓으면 또 계속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위원장께서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위원회 차원에서 이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이것이 계속 집행되어도 좋다는 그런 총리실의 결론이라든지 또는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기 전까지는 1,134억원 예산 전액이 집행될 수 없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정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결론을 빨리 촉구하고 필요할 때 우리 예산위원회 주최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한번 열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權五乙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방금 金元雄 위원님, 金文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소관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증인신청도 했었고 현지지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위인 농해수위원회에서 금년에 현장을 보고 최종 내린 결론은 환경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반대론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는 이 시점에서 현재 한정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일단 물막이공사 완공은 하지 않더라도 예

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종결론이 나왔을 때 중단을 하든지 완공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방금 金元雄 위원님 말씀 또 金文洙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또 많은 환경단체에서 우리 농해수위원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 오셔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고심고심하다가 최종적으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정감사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국회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국회가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사람으로서 제언을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 문제는 사실 이 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옳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푸느냐 하는 방법으로 아까 친환경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농림부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이 뭔가 그래서 한 예로 지금 흔히 강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전부 종말처리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역별 하수처리 개념으로 과감히 바꾸는 것을 그 지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농림부가 낸다든지 또는 축산폐수에 대한 것도 한 일환경포럼에서 이미 처리방안을 시험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환경부에 떠넘기지 말고 현안사항은 새만금호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우선 농림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을……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는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林部長官 韓甲洙 유념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丁世均 李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는 답변이 더 남아 있습니까?
-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조금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丁世均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해주세요.
-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존경하는 李在昌 위원님께서 국가 전체예산 대비 2001년도 농림부분 예산 축소편성 문제와 특히 농림부 소관 예산 중 이차보전 예산이 16.9%나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99년에 농가부채 연기조치를 했는데 그 예산 편성이 금년에 많이 계상되었고 내년에는 해가 지났기 때문에 좀 적게 계상되어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차보전 예산이 적게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 그런데 지금 농가부채 경감 문제 때문에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16.9%나 축소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어떤 형태로든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재원으로 이것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李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농가부채대책특별조치법은 지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간에 특별소위를 만들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일 중에 대충 그 윤곽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세출예산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하고 바로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층 심의를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李在昌委員 얼마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지금 여야간에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규모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李在昌委員 사실 이 부분의 예산뿐만 아니라 농촌, 농민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위기적인 전환점에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증가율의 거의 반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것 하나만 보더라도 현 정부가 농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정책이 아니냐,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농정을 펴야 될 텐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가부채 경감문제와 아울러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저의 제언 겸 질의라는 것을 유의하셔서 농민의 어려운 문제, 농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데 한 전환점이 되는 2001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역시 李 위원님께서 수해방지종합대책에 의하면 2009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해서 배수장 등 배수시설 설치에 3조5,80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1년도 예산에 2,226억원만이 반영되어서 2009년까지 완료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매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97년에 1,437억원, 98년에 1,795억원, 99년에 2,025억원, 올해 2,181억원, 내년에 2,226억원 해서 전체 3조5,000억원을 채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는 부분준공이나 조기완공 위주로 투자해서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李 위원님께서 농협통합비용 예산 축소 계상에 따른 대책 및 축협 경영손실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농·축·인삼협 통합과 관련해서 415억원을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역시 393억원을 계상해서 총 808억원을 무이자로 5년 동안 융자해주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는 이를 보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재정 형편상 이것을 무이자로 계상했고 앞으로 통합농협이 건실하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협중앙회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통합중앙회와 일선 조합이 동반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농협의 자구노력과 함께 촉발기금 등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李 위원님께서……

○**李在昌委員** 장관님, 이 문제는 사실 작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93억 지원해 봐야 전산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부실한 농협에 대해서 CI 소요예산을 비롯해 가지고 912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농협의 얘기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데……

○**李在昌委員** 물론 912억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는 적어도 CI 비용만은 어찌할 수 없는 비용인데 이것을 그냥 자체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은 농·축협 통합을 무리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 거기에 대해 대처도 못하면서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비용은 농·축협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적 이익을 다시 환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래에다 떠넘기면 결국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가 농정이나 농민정책에 대해 상당히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아직 공적자금을 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예산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협 경영손실 지원문제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텐데 농협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4,458억이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지금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깐 전부 단위축협에다가 전가를 시켜 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조합이 농·축협 통합 때문에 이중·삼중고를 겪게 되었는데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아닙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4,458억원의 축협 통합에 따르는 부실자산은 정부가 촉발기금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실자산은 일선 조합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가셔도 안 됩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벌써 조합으로 그 부실을 전부 전가했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李

위원님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는 정부의 큰 개혁정책이 중앙에서만 아주 근사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전부 아래로 내려가서 농협이나 축협을 잘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혁이 아니라 반 개혁적인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개혁 못지 않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알겠습니다.

다음에 李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데 예산의 지원방법이 적절한지와 포괄보조금 집행실적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부터 기존 수 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해서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추진한 20여개의 사업 외에 지자체 자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사업 이외의 사업도 선정해서 농림부와 협의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지자체별로 특성있는 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천사업 이외의 사업추진시 농림부와 협의토록 해서 선심성 지원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집행실적과 2000년 중간점검결과를 평가해서 2001년 지역특화포괄보조금 가배정액에 이 평가결과를 20%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 이것은 자율성을 제고시켜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전시성에 흐르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현 시점에서 걱정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엄밀한 평가를 하셔서 장점은 살리시되 단점은 오래가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시도의 도정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나머지 농공단지 농촌관광 휴양자원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金容鈞 위원님께서 마사회 농림부 이관

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광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광부가 계속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같은 각원으로서 제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앓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대단위 농업개발 5개지구 중 영산강 III-I 지구만 증액편성한 사유와 농공단지 사업예산 39억원은 충청권과 호남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단위 농촌개발사업의 2001년도 예산안은 지구별 특성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용수공급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 중인 3지구, 금강2·미호천·홍보지구는 금년 수준을 그대로 반영했고 간척개발 초중기단계인 97년에 착수한 영산강 3-2지구도 금년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영산강 III-I 지구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조기확보와 함께 기 투자비, 방조제 포함해서 1,91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기 투자비의 효과거양 측면에서 조기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부터 추진된 간척농지 III-I 지구의 2,151ha를 2001년도에 완공을 해서 이것을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공단지는 2000년11월 현재 295개소를 지정해서 3,054개의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54개 업체는 경북에 577, 충남에 474, 경남에 457, 전남에 452, 전북에 317, 충북에 270개 등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입지여건이 양호한 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진하고자 하는 4개 지구는 충북 진천, 충남 서천, 당진, 전북 장수 4개 지구로 원래 자치단체장이 6개 지구를 신청해 왔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4개 지구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4개 지구를 예산상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농림부장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容鈞委員 농림부장관, 잠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정책을 결정할텐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새만금에 예결위원들이 갔을 때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산업단지로 쓸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해서 전북을 부강하게 하겠다고 도지사가 전북도민들한테 선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주공항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니까 '지사님 차관회의 가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지사라는 분이 IMF 하에서 상당히 나라가 어지러울 때 마이클 잭슨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주리조트에 가서 몇 십 억불 투자할 것같은 제스추어를 썼는데 제가 듣기로는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100불도 안 쓰고 갔대요. 그때 초청되어 와서 가고는.....

국가에 아무 보탬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일이나 하는 사람의 건의라는 것을 아시고 정책을 판단할 때 정확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權琪述 위원님하고 朴世煥 위원님 질의가 계신 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께서 농업재해보험료를 30%로 지원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할 경우 농가에 부담이 되어서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험료를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령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스페인같은 데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보험료들은 전부 재정에서 50%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50%의 부담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사정과 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30%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깊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權琪述委員 지금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장관님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관님, 농작물재해보험을 제대로 시범 실시하려면 보험료 지원율이 50%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예.

○權琪述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사정 때문

에 기획예산처에서 30%로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농림부장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정말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만 보험료를 30% 적용해 가지고 하면 재해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을 실천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50%로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또 50%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지원하더라도 불과 17억4,340만원 정도로 18억원도 채 안 되는데 재원이 없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요율을 30%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정말 이 정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소신껏, 이런 것을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하고 하려면 집행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고 본위원회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심의할 때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朴世煥 위원님께서 농가부채 대책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소요 증가액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李在昌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형식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법 내용에 어느 수준의 부채경감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지금 농해수의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일간 결론이 나게 되면 예결위에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소요와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예산부서하고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그에 관한 방법들이 논의되어서 최종적인 결정이 지어질 것이라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朴世煥委員 그리고 장관님, 이것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등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일반회계 부담도 늘어날 것이 아니

냐……

○農林部長官 韓甲洙 논농업직불제는 WTO 규정이 허용하는 소득보조적인 정책인데 이것은 선진국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하다가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 해서 예산요구가 2,10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농림부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불구하고 평균해서 ha당 30만원씩 해가지고 2,920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그와같이 조정되었는데 다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그 금액 가지고는 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다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할 것 없이 2,920억원, ha당 30만원의 논농업직불제를 지불하는 예산을 예결위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朴世煥委員 알겠습니다. 최근에 농민들의 욕구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 위주로 결론만 말씀해 주시지요.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沈揆喆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체산업 창업지원사업,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지역산업 진흥사업, 패션어패럴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체산업은 폐광이 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사업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1999년에는 예산집행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억 예산이 최근에 477억까지 집행이 되었고 연말에 가면 이것이 다 집행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는 좀전에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 9월부터 산업자원부가 총괄부서로 되어서 농공단지로 기 조성된 단지를 정비하고 활성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530억원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를 위한 패션어패럴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지역 섬유 고도화산업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결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외국인 용역회사, 국내 용역회사 합동으로 본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결과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沈揆喆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의 신규지정보다는 기존단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농공단지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추가로 4개를 지정하신다는데 이것이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존단지가 유희화되어 있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 단지를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산업자원부가 총괄부서로 정리된 다음에 전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시행착오 없는 단지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530억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沈揆喆 위원님께서 소위 정보기술 또 생명기술 IT, BT 그런 산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沈 위원님 지적한 말씀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철강, 석유화학, 섬유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 산업을 IT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가공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

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전통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산업정책의 초점을 두고 특히 기술기반을 재편성하고 에너지를 덜 들어가게 하는 기술과 시설의 합리화, 소재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世煥 위원님께서 저희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정보화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정보화의 교육훈련과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전국에 4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보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서 기업내부 업무의 프로세스라든가 진단, 재구성 소위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IT화와 전자상거래는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世煥 위원님께서 대구 패션어패럴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국제용역의 결과로 이 사업이 대구지역에 소위 의류를 중심으로 하는 최종제품의 패션디자인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유의하다는 중간결론이 나왔고 또 최종결론도 그렇게 도출되리라고 믿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새로 조성되는 벨리에 수도권에 있는 패션업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으로 집중화해서 소위 한국의 밀라노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金容鈞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예산의 집행부진을 지적하시고 예산집행시스템을 먼저 평가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99년 예산은 대단히 그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99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보완을 한 결과 500억의 예산이 거의 집행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

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지가의 경쟁력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문화 그 밖의 환경요인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내에서 기술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첨단부품소재분야 또 시설의 핵심분야에 대해서 주로 독일, 불란서, 이태리, 일본, 미국 등지로부터 신기술을 포함한 또는 해외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투자유치하는 것이 구조조정 후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유익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사업수행 성과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金容鈞 위원님께서 석유가격 인상만으로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석유가격은 몇 년 전부터 시장기능에 의해서, 과거에는 정부통제를 하다가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말경이면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가격이 업계 자율적인 가격결정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군납유류에 대한 담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시에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앞으로 가격기능에 의해서 석유제품에 대한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고유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위 에너지절약과 이용을 합리화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서 석유가격을 시장가격화함으로써 가격기능에 의해서 수요가 조절되는 이원적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鈞委員** 유류가격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석유가격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에너지절약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차량을 왜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도로구조가 나쁘고 교통체계가 좋지 않고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못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해야지

기름값만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서 쓸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심지어 건설교통부장관과도 밤새도록 만나서 의논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곳에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그 사람들이 차를 집에 두고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버스전용차선 문제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야간에 12시 되면 택시 못 잡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가격만 인상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金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추진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가 범부처적으로 종합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金容鈞 위원님께서 동해·서해간에 원전피해보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전은 동해안에 세곳, 고리·월성·울진이 있고 서해안에 영광 한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액수는 어업피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발전소 입지 개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에 비해서 수심이 낮아서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넓고 근해에 양식업 등 어장이 발달하여서 어업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배수 배출에 의한 피해조사 결과 서해안 지역이 동해안 지역보다도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金 위원님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龍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과 탄광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지원의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상에 산림법 적용의 특례대상 사업으로 조기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가동되는 탄광이 11개, 금년기준으로 450만t 가까이 생산됩니다. 탄광은 한 3개 정도를 더 폐광을 하고 생산량이 300만t을 넘지 않으면 자생적으로도 탄광…… 현재 석탄 산업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폐광을 추진하면서 폐광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체산업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도로라든가 환경요인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부실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산림을 훼손해서 활용하는 문제는 이 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琪述 위원님께서 울주군 서생면 지역의 원전입지 부지의 적합성 문제와 이 지역에 홍보비를 과다하게 사용했음을 지적하시면서 울주지역의 원전입지 지정을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아시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여건으로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지역의 원전입지 지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이미 고리원전 건설시에 원전입지로서 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산단층도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결과 활성단층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고 또 원전의 안전성 면에서도 그동안에 관계 연구소에서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고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어 주변의 도시나 산업시설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원전건설에 대해서 적합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편입지역 주민들이 원전의 추가유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여 지난 9월에 울주지역을 원전부지로 지정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권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권 위원님께서 원자력문화재단 등을 통한 홍보비 사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20년 이상 원전을 운영해 온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입증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을 상대로 원전을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원전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주민 설명회 등의 홍보활동이 필요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琪述委員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도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에, 그렇습니다.

○ 권琪述委員 그래서 빨리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해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민족에게 큰 재앙을 주는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 바로 원자력발전소 아닙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구조물은 완전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낮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장의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른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니 부득이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경우에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건설적지를 선정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전략적 측면에서나, 안보적 측면에서나, 경제이익 측면에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지 선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우리나라 9개 지역을 원전 예정지역으로 고시를 했다가 산자부에서 내부적으로 3개 지역으로 압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울산 서생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울산 서생지역이 원전 추가건설 지역으로 추가된 이유는 거기의 기초단체장이 그 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떠날 30여명과 같이 동의를 해주고 오히려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회에게도 그 지역 분들이 와서 '나 보상 좀 받게 해주십시오.' 꼭 자기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원전이 유치되도록 운동을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저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조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전이라는 것을 아무 데나 건설해도 되는 것이냐고 제가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치하는 운동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대단한 이권입니다. 불과 몇 만원 짜리 땅을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보상을 받게 되고 축양장인가도 돈 몇 억 들여놓고 몇 십억씩 보상을 받는데 그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이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분들이 앞장서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울산의 모든 석유비축기지며 정유공장들이 문을 다 닫게 되면 에너지가 못 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공장들이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다시 회복불능 상태에 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곳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가운데에다 원자력발전소 같은 위험시설을 세운다, 또 울산 100만 인구, 양산 30만 인구, 부산 400만 인구 등 550만이 밀집해 사는 가운데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신중하게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울산시민들 전체가 들끓고 일어나서 야단이고 심지어 15만명 가까운 분들이 날인을 해서 국회에 청원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은 결사반대한다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또 수시로 서울에 올라와서 데모하고 울산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단순하고 가볍게 보시지 말고 재고를 해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강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鄭德龜 장관께서 작년 예결심의 때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반대를 할 것 같으면 강행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바뀌셨다 하더라도 정부의 방침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후 장관님께서 좀더

연구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토론도 하시고 걱정을 같이 해봅시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알겠습니다.

權 위원님의 종합적인 말씀을 저희도 유념하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안전성도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원자력발전소가 400여 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형사고가 79년도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또 86년도에 소련의 체르노빌 2건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 0.5%입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사고가 절대 안 나는 비행기도 비율로 보면 100만분의 1시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원자력사고는 대단히 높는데 원전이 가다가 중단되고 했던 대소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로를 시멘트를 가지고 썼다 또 철판으로 썼기 때문에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는다 하는데 철판이 몇 년 갑니까? 철판이 만년 갑니까, 시멘트가 만년 갑니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방사능 물질은 몇 만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에 맹신하면 안 됩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權 위원님 염려하심을 유념하고 저희가 모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같이 고민을 하십시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權琪述 위원님께서 에너지특별회계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과대 책정되었다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여유있게 책정한 것은 유가가 불확실해서 비축을 하기 위해서 20달러를 생각했는데 사실 평균 22불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여유를 좀 가졌었는데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權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염려를 하셔서 예결위에 보낼 때는 이것을 조정해서 209억원을 고유가대책사업비로 하고 예비비는 61억원만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기초위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權琪述 위원님께서 벤처기업들의 부도덕성과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벤처지원예산이 1조원은 너무 많고 이것을 삭감해서 좀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

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일부 벤처기업들이 도덕성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벤처예산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대기업의 과거와 같은 중후 장대형의 투자는 상당히 부진하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장래를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 투자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저희도 이 분야를 앞세워 가지고 투자를 선도해 가도록 내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너그럽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장관님, 장관님 말씀 일리가 있고 이해도 합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지나치게 과잉기대를 하고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 98년도 2,000개였던 벤처가 올해 10월에 9,000개로 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벤처성공률이 전문가들이 볼 때 5%, 높게 보아서 6% 정도로 봅니다마는 5%이면 95%가 실패를 하고 5%가 성공을 하는 성공률이 극히 낮은데 여기에다 올해는 3조 7,000억 예산이고 내년에는 3조 2,572억인데 이렇게 많이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엄격하게 선별을 해 가지고 소수정예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도 우리가 절약하는 것이 되고 또 벤처도 정말 좋은 벤처를, 장래성 있는 벤처를 육성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그런 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權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벤처는 벤처답게 가도록 지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중소기업지원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때 잘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卓委員** 제 질의에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저는 몇 가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포항·영일 신항만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시나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예, 아까 질의 주셨는데尹榮卓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尹榮卓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서면으로 답변 드릴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尹榮卓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성실하게 서면으로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朴世煥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인력양성지원예산과 관련해서 금년에 690억원에서 내년에 1,61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 그리고 교육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2001년도의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사업내용은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IT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양성문제에 913억원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IT는 인력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구요. 또 나머지 706억원은 소위 가정, 직장, 지역별, 성별로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보화 교육사업이 같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동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걷은 기금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충실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지원사업이라든지 전문학원 선정시에는 산·학·연 정보통신전문가 풀, 1,500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통해서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그때 그때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교육부와의 상호 보완·협조문제는 순수하게 학교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역시 이 사업도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된 각료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기에서 협의·조율을 하고 있고 사업 추진시에 평가와 선정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世煥委員**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정보통신인력 양성·지원에 1,619억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배정한다고 해서 양질의 인력이 양성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제한으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라는 정보통신인력 양성·지원예산이 사실상 각종 학교에서 소요되고 주로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예산집행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내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容鈞 위원님께서……

○**金容鈞委員**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康斗 위원님께서……

○**委員長代理 丁世均** 서면으로 해주세요.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容鈞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沈揆喆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金龍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尹榮卓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포항·영일만 신항은 92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2,200억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포항·영일만 신항은 9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

조3,000억원을 투자하여 부두 24선석을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항만기반시설인 어항대체시설, 방파제 등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부두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중에 재정사업은 92년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어업피해보상,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실제적으로는 96년12월에 어항대체시설, 97년8월에 방파제 공사를 착수함으로써 2000년까지 총 사업비의 27%인 1,756억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민자사업은 98년4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포항·영일만신항만주식회사를 지정해서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시행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금년 12월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자유치계획을 재고시하여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尹榮卓委員** 답변이 너무 막연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 대구·경북지역에 해양지향적인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국회부터 대구-포항간 산업도로 건설 그 다음에 포항신항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화당 정부를 제외하고는 5공화국 때는 88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그 다음에 盧泰愚 정부 시절은 중국과의 수교에 의해서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광양만이다, 그 다음에 아산만이다, 군산만이다 해서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2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산항에 못지 않게 지금 광양만에 많은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20여년 동안 대구·경북에는 해양지향적인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특히 대구·경북 경제가 제일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제일 높고 부도율이 제일 높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국회 때부터 제기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내외적으로도 대구는 12만명의 고급인력이 소위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대구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포항에는 세계 1위에 가까운 철강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와 연관된 아주 우수한 철강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나진·선봉의 70억불 프로젝트가 있고 UNDP에서 추진하는 두만강개발계획에 300억불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만 유전개발이라든지 시베리아 천연자원개발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이 지역은 그야말로 포항신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전혀 간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3년간 교섭을 해도 민자유치가 실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20년간 소외된 이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배려가 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 포항신항만에 대해서 보다 명쾌한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잠시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를 변경하기 위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出席委員(44人)

高 珍 富	權 琪 述	權 五 乙	金 景 梓
金 德 圭	金 文 洙	金 聖 順	金 榮 煥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元 雄
金 一 潤	金 貞 淑	金 洪 信	羅 午 淵
閔 鳳 基	朴 世 煥	朴 鍾 根	裴 基 善
孫 泰 仁	宋 錫 贊	宋 永 吉	申 溪 輪
辛 基 南	申 榮 國	申 鉉 泰	沈 揆 喆
吳 長 燮	柳 三 男	柳 在 珪	尹 榮 卓
李 康 斗	李 根 鎭	李 洛 淵	李 相 洙
李 在 昌	李 漢 久	李 浩 雄	張 在 植
丁 世 均	鄭 哲 基	鄭 亨 根	黃 祐 呂

○出張委員(1人)

宋 榮 珍

○請暇委員(1人)

李 海 瓚

○委員아닌出席議員(7人)

李 良 熙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協  
李 熙 圭 張 永 達 鄭 均 桓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 석 전 문 위 원 金 光 琳

전 문 위 원	張 基 泰
입 법 심 의 관	李 鍾 澤
○出席國務委員	
재 정 경 제 부 장 관	陳 稔 稔
과 학 기 술 부 장 관	徐 廷 旭
농 립 부 장 관	韓 甲 洙
산 업 자 원 부 장 관	辛 甲 國 煥
정 보 통 신 부 장 관	安 炳 燁
해 양 수 산 부 장 관	盧 武 鉉
○出席政府委員	
재 정 경 제 부 차 관	李 晶 載
기 획 관 리 실 장	李 永 檣
과 학 기 술 부 차 관	韓 錠 吉
농 립 부 차 관	金 東 根
산 업 자 원 부 차 관	吳 盈 敎
건 설 교 통 부 차 관	姜 吉 夫
기 획 관 리 실 장	秋 秉 直
해 양 수 산 부 차 관	洪 承 湧
중 소 기 업 청 장	韓 峻 皓
청 차 장	辛 東 午
철 도 청 장	鄭 鍾 煥
청 차 장	崔 吉 大
○金融監督委員會參席者	
위 원 장	李 瑾 榮
부 위 원 장	鄭 健 溶